
촛불하나
언제나 니곁에서 있을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께.
세월호 참사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국가가 무엇인지
지금 당장 답하라
주최 4·16연대 416act.net
주관 416 인권실태조사단

Ⅰ. 들어가며 5

1.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6
2.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9
3.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읽는 법 16

Ⅱ. 박탈당한 권리 18

1.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 21
1) 구조 받을 권리 21
2) 시신수습 등에 관한 권리 25
3)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27

2. 진실을 알 권리 35
1) 정보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35
2) 참사 처리과정에 참여할 권리 41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 45
4) 감시와 사찰 받지 않을 권리 – 정보인권의 보장 53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57
1) 원상회복과 재활에 대한 권리 57
2) 애도와 기억의 권리 94

Ⅲ.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시민의 책임 99

1. 국가의 의무 102
1) 진상규명의 의무 103
2) 피해 지원의 의무 105
3) 민간 참여를 보장할 의무 112

2. 기업의 의무 118

3. 언론 120
1)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한 무책임성 121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방해, 사생활 침해 122
3) 유언비어와 사회적 편견의 확대재생산 124
4) 다양한 피해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획일성 124
5) 국적 차이 등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음 125

4. 시민의 책임 127
1)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피해자 구분 짓기 128
2) 잘못된 정보 유포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립감 130
3)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모욕 표현과 행동 131

Ⅳ. 피해자별 권리 쟁점과 평가 133

1.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135
1) 생존학생의 부모 136
2)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137
3)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138
4) 단원고 재학생 139
5) 단원고 교사 139
6) 군에 입대한 생존자 140

2. 피해자 그룹별 권리 쟁점 분석 142
1) 희생학생, 교사 가족 142
2) 생존학생 155
3) 희생자 가족 160
4) 생존자 168
5) 생존 화물기사 173

6) 이주민 희생자 가족 177
7) 미수습 희생자 가족 182
8) 민간잠수사 187
9) 자원봉사자 193
10) 진도어민 196

별첨1. 4.16인권실태조사단 활동 경과 203
1. 조사단 구성 204
2. 조사 방법과 범위 205
3. 함께한 사람들 207
4. 활동 경과 209
<미주> 213
별첨2. 4월 18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보고서
별첨3.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보고서
별첨4.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 **날짜 : 2015년 7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주요 내용**

–4.16연대 인사말
–미수습자 가족 인사
–피해자 인터뷰 영상
–인권침해 목록별 발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사례 영상
–인권침해 피해자 별 권리 쟁점과 평가 발표
–제언

Ⅰ. 들어가며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1.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참사를 정의하며

'세월호 참사는 인권 침해 사건이다.'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9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수습되지 못한 희생자와 진실을 실은 세월호는 아직 바다에 있다. 그와 연결된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들의 아픔이 시작되었다. 생존자로 불리게 된 172명과 그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단지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 수 없다. 목격자들은 어떤가.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유가족을 보았다. 살아왔으나 다치고 내몰리는 이들의 사연을 접했다. 진실을 함께 찾으려 했으나 모이지 못하게 막고, 감시하고, 차별하는 권력의 실체를 보았다.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비극은 만들어졌다.' 비극이 일어났다, 참사가 벌어졌다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누구나 목격했듯이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하지 않았다'는 목격에서 시작된 의심은 수많은 의혹을 불렀다. 위험한 배가 바다에 홀로 떴던 시작에서부터,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알고자 하는 이들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감시했는지, 왜 감추려 하는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참사로부터 벗어나려는 권리의 목소리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자신이 살아온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지 의심해보지 않은 이들에게 현실은 더욱 냉혹하게 다가왔다. '생명조차 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의 책임은 작위의 책임인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것이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기원했음을 직관했기에 사

람들은 너 나 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토해냈다. 체제 자체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체제를 버티게 한 것이 자신을 포함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임도 깨달았다. 처음에는 슬픔, 그 다음은 분노의 감정과 만나야 했다. '도대체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은 미안하다는 고백과 성찰로 이어졌다. 이러한 감정은 참사 당사자인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목격자인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며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위험한지 보여주었다. 배 한 척이 사라졌고 사람 몇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인권이 침몰한 사건으로 정의한 이유는 이렇다.

첫째, 천재지변 또는 우연이나 우발적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노후선박 연령과 증·개축, 과적, 고박 등 안전에 관한 모든 문제가 드러난 참사였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인력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이어진 규제완화가 참사의 발단이 되었다.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에 관한 안전문제에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고, 자본은 이를 이용했다. 그야말로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배는 늘 바다에 떠 있었다.

둘째, 구조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은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했다'[1]고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조되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이 바다에 그대로 있음은 이를 증명한다. 구조하지 못한 것인지, 구조하지 않은 것인지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운동과 맞물려 있고, 진상규명운동은 알고자 하는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셋째, 알고자 하는 권리는 모조리 부정당했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모이고 연대한 이들을 탄압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 박진, 「세월호 부모들에겐, 당신이 바로 '국가'다」,『오마이뉴스』, 2014.7.29.

시행령>(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은 이를 설명하고 있다. 알고자 하는 권리의 침해는 감시와 사찰, 집회 시위 자유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

넷째, 참사는 바다에서 끝나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세월호 참사는 일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데도 실패했다. 오히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과 시행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도구로 작용했다. 정부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배상과 보상(이하 배·보상)을 통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다.[2] 위험한 배를 바다위로 내몰았던 규제완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허술했던 재난관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정비되지 못했다. 2015년 메르스로 인한 국가비상상황은 이를 방증한다.[3]

다섯째,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입은 피해는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이다. 가족과 지인을 잃었고, 치유하기 힘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전히 애도하고 기억할 시간을 가질 새도 없이 몰아닥친 후속적인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자들은 참사의 현재 속에 살고 있다. 정부에 의한 차별적 대우와 억압적 상황은 피해자들이 치유 받고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가질 기회를 박탈했다.

4.16인권실태조사단은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를 보고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보고서에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러나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세월호 참사 자체가 우리 사회의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 보고서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가까워지는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그 길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세월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성명 :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배·보상 발표 규탄한다」, 2015.4.1. (http://sewol-ho416.org/4151)
3 4.16연대, 「성명 :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가재난 불러온 청와대를 규탄한다!」, 2015.6.9. (http://416act.net/index.php?mid=notice&page=6&document_srl=2795)

2.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구성

실태조사의 배경

4.16인권실태조사단은 '구조하지 않았다'는 권리의 박탈에서 더 나가 보기로 했다. 언론에 많이 노출된 피해자들보다 눈에 띄지 않는 피해자들을 더 만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이하 <존엄위>) 활동으로부터 나왔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권리가 침몰하고 있었다.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은 수면 위에서 발견되지 못했다. 참사 피해는 끝없이 확장 중이고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단편적이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추락한 인권, 마땅히 구조해야 할 권리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들은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잔혹하다. 진실의 현재를 확인한 다음 몫은 다시금 인권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2016년 4월 16일 즈음 발표될 4.16인권선언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인권을 이야기하자.

보고서는 4개의 장과 별첨의 개요로 구성되어 있다.

Ⅰ장은 이번 보고서의 서론으로, 세월호 참사를 인권의 사건으로 정리한 이유와 보고서 안내 등 개략적 내용을 담고 있다.

Ⅱ장은 이번 보고서의 본문에 해당한다. 어떠한 권리가 박탈당했는지 권리 목록으로 정리했다. 피해자들 증언을 통해 어떠한 권리가 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이것을 크게 생명과 존엄의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로 구성했다.

1. 생명과 존엄의 권리는 구조, 시신수습,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로 구분했다.

○ 구조 받을 권리는 (1) 구조 준비 미흡과 구조안내의 부재 (2) 구조책임 방기 (3) 생존자에 대한 응급조치 미비 등으로 구분했다.

○ 시신수습 등에 관한 권리는 (1)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의 권리침해 (2) 미수습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는지 보여준다.

○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에서는 (1) 업무와 안전에 관련한 계획과 정보의 부재 (2) 노동환경 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사후 치료 책임 외면 등으로 나뉘어졌으며, (2)항은 ① 선박 구조 상 안전 고려 없이 설계된 작업 공간 ② 적절한 휴식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고용구조 ③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부재와 책임 회피 등으로 다시 세분해서 볼 수 있다.

2. 진실을 알 권리는 정보접근을 보장받을 권리와 참사 처리 과정에 참여할 권리, 집회 시위의 자유, 감시와 사찰을 받지 않을 권리(정보인권의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자신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알권리이며 동시에 결정과 참여의 권리와 연결되어있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 감시와 사찰을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은 필수적이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실 접근은 다양한 양상으로 침해되었다.

○ 정보접근을 보장 받을 권리는 정보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참사 처리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구분했다. 정보 접근권은 (1) 구조 및 수색과정에 관한 정보 부재 (2) 피해지원과정의 정보 접근권 부재 (3) 수색 종료 후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정보 부재 등으로 구분되었다.

○ 참사 처리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1) 참사 처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박탈 (2) 개별 피해자의 필요에 대한 고려 없음으로 분류했다.
○ 권리 침해에 대해 항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개최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도 인권은

사라졌다. (1) 유가족, 시민을 향한 폭력(부상)과 연행 (2) 유가족과 연행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3) 이동할 자유 제한 : 차벽, 이동차단, 고착 (4)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5) 경찰의 폭력 조장과 방관, 집회방해 행위 등의 사례들이 피조사들에 대한 인터뷰와 인권침해보고서(별첨)에 드러났다.

○ 피해자들은 참사초기부터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었다.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부터 삶의 터전까지 미행의 발길은 잦았고, 이것은 번번이 들통 났다.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일상적 사찰, 유가족 농성 감시와 개인 사찰, 세월호 집회 시위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잇따랐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일상적 사찰은 ① 사고 초기 수습이 아닌 사찰로 일관한 국가의 역할 ②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일상적 사찰 등으로 구분했다. 유가족 감시와 개인 사찰은 ① 농성중인 유가족을 24시간 감시하는 CCTV ② 유가족 개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한 감시와 사찰은 ① 세월호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②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휴대폰 압수수색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는 피해 당사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의 몫으로 생각되어지거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결될 성질의 것으로 간주된다. 인권이라기보다는 개인 책임 문제로 치부된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참사의 후유증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없다. 이러한 악순환은 개인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손실이다. 다시는 이러한 재난과 참사가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는 피해자가 원상회복과 재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온전한 애도와 기억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참사 피해자들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제공해야 할 권리이다.

○ 원상회복과 재활에 대한 권리는 정부를 통한 경제, 심리, 의료 지원이 기본이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당사자 간 갈등, 피해자와 사회 간 갈등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뿐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 역할은 부재했다.

경제적 지원은 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② 지원 설계 시 피해자의 참여배제 ③ 턱없이 부족

한 지원금 ④ 차별적 지원금 산출방식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자 ⑤ 대중들의 인식과 괴리된 지원금으로 나누었다.

심리지원은 ① 심각한 심리적 외상 증상 ②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지원방식 ③ 물리적 접근성 취약 ④ 한정된 기간 ⑤ 치료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의 사례로 구분했다.

의료지원은 ① 참사 이후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 ② 획일적인 의료지원 ③ 의료지원의 부족한 접근성 ④ 책임회피 및 보수적인 산출방식 ⑤ 차별적인 의료지원 지급범위와 금액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공동체 회복에 대한 권리는 ① 정부와 언론의 공동체 갈등 조장 ② 정부 정책 대응에 따라 피해자군 별로 나타나는 갈등 ③ 사회적 관계 회복의 어려움 ④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구분했다.

정부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긴급토론회 『국가책임의 자리에 피해자 모욕을 채운 세월호 참사 배보상의 문제점』(http://sewolho416.org/4283) 자료집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 애도와 기억의 권리

참사의 희생자는 애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들은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추모와 기억의 권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이 기억과 기록 사업에 먼저 나섰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반면 정부는 아직까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데 앞장서, 오히려 권리침해의 가해자로 나섰다. 시민들 일부가 온전한 애도와 기억의 권리를 모욕하기도 했다. 넓은 범위에서 “아직도 세월호냐”라고 이야기하는 평범한 목소리 역시 희생자와 피해자가 갖는 권리를 인권으로 보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애도와 기억의 권리는 충분한 사례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권리로 정리해야 하겠기에 목록으로 분류했다.

Ⅲ장은 박탈된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시민의 책임에 대해서 정리했다. Ⅱ장에서 구체적 권리가 어떻게 박탈되었는지 정리했다면 Ⅲ장은 이를 보장할 의무와 책

임 주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했는지 중심으로 기술했다. 크게 국가의 의무, 기업의 의무, 언론의 역할, 시민의 책임으로 구분했다.

1. 국가의 의무는 진상규명의 의무와 피해 지원의 의무, 민간참여를 보장할 의무로 나누었다. 구조할 의무, 안전한 사회 제도를 만들 의무, 위기사항에 대처할 제도를 갖출 의무 등 재난 참사에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다루지는 않았다. 피해자들 사례를 더 들려줄 수 있는 목록으로 정리했고 Ⅱ장에서 비중 있게 다룬 항목은 제외했다.

○ 진상규명의 의무는 참사 피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권리이며, 동시에 침해받은 권리이므로 따로 국가의무의 중요 의제로 구분했다.

○ 피해 지원의 의무는 Ⅱ장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중 원상회복과 재활에 대한 권리에서 경제, 심리, 의료 지원의 사례로 이미 설명했다. 이번 장에서는 정부 지원 방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정리했다. (1) 일방적, 하향식 지원 (2) 턱없이 부족한 지원 (3) 지원의 비체계성 (4) 지원의 편향성 및 불균등성으로 구분했다.

○ 민간 참여를 보장할 의무는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본으로 정부는 이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에서 민간잠수사나 진도어민,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보장하고 조력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았다. 내용은 (1) 민간 참여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 (2) 민간 참여자에 대한 후속 지원 부재 (3) 민간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 전가 등으로 볼 수 있다.

2. 기업은 재난 참사의 중요한 의무 주체이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실패와 진상규명 방해로 인해 국가 책임만이 주목받고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 규제를 모두 무시한 기업 책임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 개조, 과도한 증축과 과적 등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다. 안전교육 미비, 안전 관련한 정보 제공, 사고 위험 대비, 안전조치 마련 등 제대로 이뤄진 것도 없었다. 참사 이후에도 청해진 해운은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참사와 재난에 대한 기업 책임과 의무를 규제하고 강제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인

권과 안전 기준에 의해 규제 받아야 한다. 기업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지만 참사와 재난의 책임 주체로서 기업의 의무는 공적 성격을 지닌다.

3.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가해자는 언론이었다. 참사 초기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했고, 사생활 침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방해했다. 객관 사실 보도에 힘쓰지 않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며 유언비어와 사회적 편견을 확대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보도와 관련해 언론 종사자들은 기레기(기자 쓰레기)라는 폄훼를 당했다. 한편 다양한 피해자와 피해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획일적 보도행태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부추겼다. 국적 차이 등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재난 참사에 대한 보도 준칙이 마련되었지만 언론이 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언론 종사자에 대한 재난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시민들은 책임을 가진다.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조력하고, 다시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책임이다. 이것은 연대의 의무라 부를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책임 있는 자세, 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1)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피해자 구분 짓기 (2) 잘못된 정보 유포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립감 (3)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모욕 표현과 행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Ⅳ장은 다시금 피해자 집단별 권리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냈다. 4.16인권실태조사단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 집단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그들이야말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숨겨졌던 피해자들이다. 물론 실태조사의 전 과정이 전체 피해자들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그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발견한 숨겨진 피해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을 앞서 언급한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1) 생존학생의 부모 2)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3)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 4) 단원고 재학생 5) 단원고 교사 6) 군에 입대한 생존자

2장부터는 피해자 그룹별 권리 쟁점 분석을 했다. 그들 각자가 전체 참사 속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짚고 더 특별한 조력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하고자 했다. 순서는 1) 희생학생 부모 2) 생존 학생 3) 희생자 가족 4) 생존자 5) 생존 화물기사 6) 이주민 희생자 가족 7) 미수습 희생자 가족 8) 민간 잠수사 9) 자원봉사자 10) 진도어민 이다.

3. 4.16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읽는 법

피조사자 그룹

4.16인권실태조사단은 피해자들 간의 피해를 구분 짓지 않기 위해 단원고, 비단원고 또는 학생, 일반인 등으로 불리는 구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희생학생, 희생교사 가족(6명), 생존학생(2명), 생존학생 부모(3명), 학교 관계자(1명), 미수습자 가족(3명)[피조사자들의 사례에서는 실종자로 언급되지만, 본문에서는 수습되지 못한 실종자를 존중하는 언어인 미수습자로 통일], 희생자 가족(4명)은 소위 일반인 유가족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 중에는 비선박직 선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 방0삼, 양0환이 그들이다.

생존자(3명)은 마찬가지로 일반인 생존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중 김0임은 조리원으로 비선박직 선원이다. 생존 화물기사(4명)은 피해사실이 대물 등에 집중된 사례로 별도로 조사했다. 이주민 희생자 가족(2명)에 관해 언어와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에 따른 피해를 조사할 수 있었다. 그 외 이주민은 아니지만 다른 국적으로 인한 차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 국적 희생학생 가족을 별도로 다시 만나기도 했다.

민간잠수사(7명)는 전체 피조사자들을 함께 만났다. 진도어민(6명)은 거주지별로 따로 조사했으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들의 거주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별도 표기 하지 않기로 했다. 자원봉사자(4명)들은 참사의 적극적 조력자이며 동시에 인권보호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4.16인권실태조사단이 만난 피해자는 45명이다.

기술 방식

사례는 대부분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겼고,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과 보충설명은 [ ]안에 넣었다. 사례 중 (김0수,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로 표기된 것은 피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외에 이주민 희생자 가족 통역은 원옥금(베트남공동체 대표)님이 도와주셨다. 해당 목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사례는 중복 기재했다.

언론, 논문, 국제 문서 등 필요한 자료는 각주로 표기했다. 미주는 원문을 모두 실어 이해를 돕고 싶은 경우에 한해, 녹취록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실었다.

집필 방식

4.16인권실태조사단은 각 그룹별로 피조사자를 추천받고 연락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보고서에 실린 대로 권리 목록별, 피해 그룹별 집필진을 구성했다. 따라서 각 목록별 집필자와 그룹별 집필자는 모두 다르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기술 방식의 차이가 생겼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내용과 형식을 최대한 맞추었고 편집과정에서 편집진이 다듬었다.

4.16인권실태조사단에는 인권활동가, 사회복지사, 의사, 연구자, 학생, 미디어활동가, 작가, 편집인, 변호사, 노동조합 활동가 등 46명이 함께했다.

일반 개요는 보고서의 마지막에 별첨으로 실려 있다.

II. 박탈당한 권리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세월호 참사는 많은 이들의 목숨이 바다에 수장되고 진실이 침몰한 사건이다. 그동안 수많은 참사들이 있었지만 특히 세월호 참사는 쉽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거대한 선박이 서서히 침몰하며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이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탑승자들은 구조 받지 못했으며, 승무원들은 안전하게 노동할 수 없었다. 미수습자들은 아직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304명을 태운 채 가라앉은 것은 배가 아니라 생명과 존엄에 대한 당연한 권리였다.

참사 처리 과정 역시 피해자들 뿐 아니라 참사를 목격한 모두의 권리를 외면한 것이었다.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돈을 바라는 피해자'라는 낙인으로 되돌아왔다. 온전한 애도와 기억의 권리는 '이제 잊을 때도 됐으니 그만하라'는 강요에 묻혔다. 진실을 알 권리와 문제 해결에 참여할 권리조차 가질 수 없었다. 모이고, 꿈꾸고 연대할 권리는 감시와 사찰의 올가미에 묶였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가로막혔으며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는 모든 방법은 봉쇄되었다. 진실을 알기 위해 제정된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제정 과정부터 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이 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어떠한 권리들이 박탈되었는지를 짚어보려 한다.

1.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특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재난에 대해서는 제도적·구조적 장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난으로 사망한 희생자가 최대한 존엄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들을 만날 권리가 포함된다. 노동과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위험 요소 해소와 환경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 역시 제도와 정책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와 기업은 개인의 생명과 존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적극적 인권침해와 다르지 않다.

1) 구조 받을 권리

(1) 구조 준비 미흡과 구조 안내 부재

청해진해운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와 같은 최소한의 구명장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생존을 위한 탈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따라서 희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희생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재생된 동영상을 보면, 선박에 비치된 구조장비들이 노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례〉

저는 기어서 로비 카운터 의자 쪽으로 가서 나갔어요. 나가서 그 앞에 누워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 화물기사에게〕 빨리 구난신청 해라. 구난신청 119에다 하고 해경에다 막 전화하고 〔중략〕 박00〔승무원〕 보고 그랬죠. 선장한테 무전 넣어 봐

라, 그래서 무전도 수십 번 넣었을 거예요. 응답이 없었죠…. 구조선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구명조끼 안 입고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고. 한 30분 정도 있으니까 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최0영, 화물기사)

〈사례〉

탈출 감행 중에 내가 들은 방송은 총 3~4회 10분 간격으로 기억되며 그 내용은 한결같이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해경이 구조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사이렌 소리도 없었고, 선실이 탑승자실들과 아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인지, 선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으며 선원들의 대책은 실상 없었던 것이고, 다만 선박 사무직원 등이 선실을 오고가며 탈출 구조에 애쓰고 있었는 기억이 있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2) 구조책임 방기

해경이 구조작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승객들의 '탈출'과 어민들의 구출 지원이 있었을 뿐, 해경에 의한 '구조'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해경이 바닷물에 뛰어든 학생들을 향해 언어폭력을 행사했으며, 사고 초기 실질적인 구조 활동 없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구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해경과 언딘 유착으로 인한 초기 구조와 수색작업의 한계는 이미 밝혀진 바 있다.[4] 해수부에서 해경으로, 해경에서 민간 구난업체로 책임이 떠넘겨진 상황에서 희생자는 늘 수밖에 없었다.

〈사례〉

선아(가명)가 나왔는데, 경찰은 와 있었는데 뒤에만 있고, 어선이 와서 구출해줬대요. 실제로 영상도 있어요. 해경은 옆에 있고 어민들이 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그거 보고 "야, 이거 뭐야" 아이들이 참 경찰들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4 4월 18일 바지선 경성호 도착했으나 투입되지 않음. 4월 20일 언딘 협력업체 금호수중개발 소유 금호호 투입. 4월 22일 2천2백 톤 급 초대형 바지선, 현대보령호 사고해역에 도착하였으나 투입되지 않음. 4월 23일 언딘 소속 바지선 리베로 호(준공승인이 나지 않음) 수색작업 투입. – 「기자가 간다 : 무능한 해경이 참사 키웠다」, 『취재파일 K』, 2014.5.2.

〈사례〉
우리 애가 바닷물에 세 번째로 뛰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해경보트가 자기들을 태우러 온 줄 알았는데 선원들을 태우러 간 거죠. 보트가 지나쳐서 가더래요. 〔중략〕 아이들이 물에 떠 있을 때 건져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경이 욕을 했대요. 애들한테. 육두문자를 넣어서 막 욕을 했대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엎어져 있다가 나온 거예요. 16, 17, 18일 많이 올라왔죠. 실제로 구조는 19일 이후부터 들어가서, 19일 이후부터 잠수부 투입했을 거예요. 국민들은 바로 구조 한줄 알지, 17일 저녁에 조명탄 쏘았는데, 거기〔현장〕에 쏘아올린 게 아니고 취재하는 곳 밖에, 부두에서 사고현장까지 1시간 반을 더 가야 해요, 국민들은 모르지. 나는 처음에 갈 때 가까운 줄 알았어. 그런데 한 참 들어가더라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그 당시 촬영한 것 보면 나오거든요 해경 간부 하나는 경비과장인가? 〔견장〕 3개짜리 그 사람은 핸드폰으로 전화하는데 핸드폰 켜지도 않고 한 것처럼 말하는 거야. 꺼놓고는 사고지점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하고. 진짜 나쁘더라 그 사람. 자기 아들딸이 만약에 물속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는 그러겠지, 가족들 안심시키려고 그랬다고 이야기 하겠지. 구조 안 했어. 16, 17, 18일은 떠오르는 것만 건졌지. 그 때부터 시신들이 떠올랐어. (김0욱, 희생교사 부모)

(3) 생존자에 대한 응급조치 미비

생존자들은 탈출 직후 제대로 된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여유를 가질 틈도 없이 언론에 집중 노출되었다. 또한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분리하지 않고 한 곳에 모이도록 해, 피해 생존자는 제대로 안정을 취할 수도 없었다. 심지어 당사자가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의 이송수단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례〉

아저씨들이 애들을 건져 올리는데 일부러 그러는지, 제대로 끌어 올리지를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학생〕끼리 끌어 올리고 그랬대요. 해경배로 올라탔을 때 한 아이가 저체온증이 왔는데, 하나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교사 두 명이 나왔는데, 멀미해서 토하고 그러고. 학생들이 옷 벗어주고, 따뜻한 물 데워다 주고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도움을 받은 게 없어요. 아이들이 분노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가 구조됐어. 우리가 탈출한 거고. 우리 스스로 도와서 나온 건데. 그런 것도 안 도와주고 욕을 하고 그러냐고. 아이들은 안 믿어요. 해경도 안 믿고 정부 관계 기관도 하나도 안 믿고.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팽목항에서도 아이들을 방치했지요. 기자들이 거의 달라붙어 있었구요. 그 때문에 아이들이 경찰, 기자를 모두 단절해요. 병원에 있을 때 관리하고 지켜주는 경찰조차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병원 아래 내려가서 지켰지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유가족들 있는 틈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중략〕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하… 너무 한심하고, 그런 거예요.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너무 그걸 쳐다보는 거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더라구. (이0종, 생존자)

〈사례〉

〔함께 배에 탔던〕 아버님이 그 대한병원에 있다가 목포에 있는 무슨 병원에 있다가 갔는데, 그렇게 차편 마련 안 해줘갖고, 구급차를 불러 타고 갔다는 거예요. 50만원인가 55만원을 주고. 개인 그 사설로. 아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살았으니까 니들 알아서 가라' 이런 식이잖아, 지금. 너무 답답했죠. (이0종, 생존자)

〈사례〉

첫 번째는 생명 우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빨리 현장에 가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 이렇게 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뭐 니네들 잘못했으니까 쳐내고, 누구 쳐내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든 빨리 가서 거기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살려달라는 것 뿐 이예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2) 시신수습 등에 관한 권리

참사 피해자는 끝까지 구조될 권리가 있으며 사망했다 하더라도 가족을 만날 권리가 있다. 희생자는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를 가지며, 희생자 가족은 국가와 사회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 책임에 관한 선언, 제네바 협약 등과 같은 국제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유해에 관한 버밀리온 헌장(WAC)>의 경우 모든 인간유해는 보편적 존중이 이뤄져야 하고, 고인의 지역사회를 비롯한 가족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 가족들은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희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런 정부의 태도 탓에 오히려 유가족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다.[1)]

(1)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의 권리침해

참사 초기,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역시 심각했다. 시신이 뒤바뀌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정부는 이를 단순한 업무 착오 정도로 정리했다. 시신 수습, 확인, 인도 등의 전 과정의 예를 다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책임이다.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책임은 한 인간의 존엄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와 관련되어있다. 이는 업무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리문제이다.

5 디 베이츠, 「현 세대의 과거 세대 책임에 관한 선언」, 『역사와 이론 : 역사 철학 연구』 2004. p.130~164.
De Baets, 「A Declar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Present Generations toward Past Generations」, 『History and Theory :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2004. pp.130-164.

〈사례〉

시신을 꺼내놓고 한꺼번에 시신을 내놓으면 복잡하니 순차적으로 몇 명씩 내놓는 듯했어. 처음 발견된 시신들은 갯벌, 기름 등이 몸에 묻은 채로 보여주어 누가 항의를 하니까. 얼굴 등에 갯벌 등을 닦아서 내 보내 시신 확인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구. (어O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시신은 바닥에 놓고 확인을 하래. 영안실 찬 바닥에 놓고 확인을 하래 나보고. 검사한테 반말하면서 욕을 했어요. 넌 부모도 없냐. 당신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땅에다가 놨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속이 뒤집어진 거죠.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목포에 있는 병원 세 군데 다 가서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3, 4일을 했어. 나중에 유전자 검사한다고 해서 채취하고 검사하고 나서는 안다녔지. 그것도 처음에는 샘플을 채취해서 국과수 가서 누군지 해놓고 시신이 나오면 다시 검사하는 식. 2, 3일이 걸리는 거야. 유가족들이 항의를 하니까 직원이 직접 팽목항으로 내려와서 장비를 차린 거지.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진도에서 시신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것이 1차 검안이죠. 그리고 DNA 검사를 위해서 목포의 병원으로 옮겨졌어. 2차 검안을 위해서 11시경에 병원으로 확인하러 갔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여 준거야. 그런 상황을 접하니까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어. 어떤 사람은 바뀌어서 입관할 때 바뀐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6] (어O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6 "김 모(17)양 유족들은 지난 18일 딸의 같은 반 친구인 김 모(17)양을 자식의 시신인 줄 알고 장례를 치르려다 뒤늦게 시신 안치 과정에서 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을 쳤었다." – 「세월호 참사 : 사고 10일...단원고 희생자 24명 발인」, 『뉴시스』, 2014.4.25.

(2) 미수습 희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권리침해

참사 직후,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늑장 대응과 책임회피는 희생자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불안과 분노를 가중시켰다.[7] 또한 시신 수습 과정에서 희생자의 존엄을 지키지 않아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수색 장기화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색작업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데 급급했으며,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미수습자 가족들을 기나긴 고통으로 몰아넣은 직접적 원인이다.

〈사례〉
그러니 민간잠수사들이 거의 찾은 거지, 민간잠수사들이 시간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짧아서, 긴 거를, 시간 한시간 짜리도 있으니까, 그걸로 다 바꿔라…. 결국에는 또 정부에서 해군, 해경이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얘기를, 가족들 얘기를 듣고서 계속 수색 방법을 바꾼 거야.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가 막 난리를 피우면은 그때 가서 또 해갖고 오고. 그러니까 애가 타지, 애가 타.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해경이 산소 탱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잠수 탱크를 매고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해경에는 잠수하는 시간이 30분짜리밖에 없대요. 근데 다른 데는 더 시간이 긴 것도 있대요. 근데 해경에서는 그게 있으니까 그걸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말이 되요? 〔중략〕 그래서 거기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선동꾼 엄마잖아요. 그 선동꾼 엄마, 제가.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3)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노동자를 비롯, 자신의 노동과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동과정에서

7 "최민희 의원은 '해수부는 해경과 해운사, 유병언, 언딘 뒤에 숨어서 책임회피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총체적인 국가 컨트롤타워 붕괴에 대해서 2차 세월호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수부가 업무 떠넘겨 수색에 차질" 해경 보고서 파문」, 『고발뉴스』, 2014.9.2.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인격과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와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노동자의 이런 권리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세월호가 일터였던 노동자들과 구조, 수색작업을 진행했던 민간잠수사들에게 기업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업무와 안전에 필요한 계획과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 불안으로 인해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던 노동자들은 개선을 요구하기 쉽지 않았고, 요구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에게 참사 당시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어야 할 의료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제도, 정책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사업장 내부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권리(작업중지권, 알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안전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 결국 기업과 정부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방기한 것이 이 같은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1) 업무와 안전에 관련한 계획과 정보 공유의 부재

세월호 내 선박직 승무원을 제외한 탑승자에게 선박구조와 안전을 위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민간잠수사들에게 필요한 구조와 수색작업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였다. 구조와 수색작업 계획과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는 것도 고스란히 민간잠수사들의 몫이었다.

〈사례〉
배를 타면은, 제가 배를 타서도 배 구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출입구하고 제 기숙사. (김0임, 생존자)

〈사례 〉
도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작업 현장에. 그러면 뭘 보고 작업을 해. 눈, 눈 감고서 〔중략〕 잠수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면 어디 들어가서 어딜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도면하고 사진이 없어요.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구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일정, 역할에 대한 정보〕 그런 거 일체 없었습니다.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잠수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은〕 우리가 거의 다 쳐서, 개척해나간 거죠. 배가 옆으로 누웠으니까 창문이 있잖아요. 한 1m 간격으로 거의 창문만 쫙 있으면, 거기다 찾아가기 쉽게 옆에 다 가이드라인 쫙 쳐 놓고, 고 다음에 수직으로 해서 그 바지하고 연결 되게끔 또 줄을 하나 연결하고. 그래야 이제 그 어느 위치, 위치 찾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각자 팀에서 다 치고 수색작업을 했죠.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면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면도 잘 모른 것 같고 낚시 배가 침몰중이니 가서 구조를 해줘라. 처음에는 11명이라고 그랬다가 50명이라고 그랬죠. 50명이면 소형 여객선인데 그 근방으로 다니는 배가 없어요. 나중에는 구조를 다 했다고 하더라구요. 세 번째 연락을 받았을 때 큰 여객선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 사람을 다 구조했다고 했을 때는 안심을 했는데 몇 분 뒤 헬기가 넘어가고 친구랑 동생들이 현장으로 가는데 위치를 모르겠다고 전화가 와서 헬기를 보고 가라고 했어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세월호라고 하고 300명이라고 하고 전원구조 그렇게 떴죠.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2) 노동환경 내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사후 치료 책임 외면

① 선박 구조 상 안전 고려 없이 설계된 작업 공간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조리부의 경우 화기를 다룰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히 더 안전을 고려해야만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세월호의 조리부는 비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고립된 환경으로 설계되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안내 방송을 들어도 연락할 수단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선박의 부적절한 설계 탓에 승무원들은 참사 당시 고립되어 공포감을 피할 수 없었

으며,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기에 탈출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적절한 안내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노동자들의 희생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례〉

조리부하고 식당 칸 하고 홀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주방 식구들만, 네 명이서. 〔중략〕 나가는 중에 의자가, 선원식당에 있던 의자가 굴러 떨어지면서 제가 갈비뼈를 다쳤는데 그거를 다친 줄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너무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같이 일하던〕 언니는 올라가다가 다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못 올라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이런 바닥이라 미끄러운 데다가 기름 솥이 〔쏟아지고〕 그날 〔중략〕 고립되어 있어서 겁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저도 올라오면서 두 번이나 포기를 했었어요. (김0임, 생존자)

② 적절한 휴식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한 고용 구조

조사에 응한 (비선박직) 선원 생존 피해자에 따르면 세월호 내 노동자들은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휴식을 요구할 수 없었다. 민간잠수사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던 해군은 교대근무와 휴식이 주어졌지만 민간잠수사들은 이를 요구할 수 없었다. 잠수작업은 특히 안전을 고려해 일정 시간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작업을 중단한 만큼 수당을 공제하는 임금구조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휴식 뿐 아니라 작업에서 오는 부상과 질병을 치료하는 시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휴식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휴식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았기에, 민간잠수사들은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사례〉

배가 운항할 때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도착해 갖고 두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럼 두 시간의, 인천에 도착하든, 제주에 도착하든

두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인제 배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김0임, 생존자)

〈사례〉

세월호를 가니까 들어가서 제가 20일인가 21일, 딱 금호 바지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광경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 저는 전쟁은 경험은 못해봤지만, 속된 말로 전쟁, 전쟁 상황보다 더 하더라구요, 뭐. 잠수사들이 올라와서 쉴 데도 없고, 해경이나 우리 민간잠수사가 그 바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좁다 보니까 다이빙 끝내고 와서, 그 때 날씨 추웠거든요. 4월 달에 굉장히 추웠으니까 어디 편하게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이고.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해경이나 해군은 3교대인가 2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교대〕 저희는 교대가 없이 총 인원 25명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왜냐면 잠수를 하면 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잠수를 하기 위해서 폰도 잡아야 되고, 감독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텐더라고 위에서 호수를 잡는 역할도 있고 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내려줘야 되고, 그 잠수사 하나에 붙는 인원이 3~4명이 붙어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사가 내가 끝났다고 나오면 위에서 또 텐더 일 하는 걸 또 봐주거든요. 그걸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잠수 일이 끝났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죠.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우리 민간잠수사들은, 내가 할 때만 해도 스물 한 명인가 두 명, 인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해경은 백 몇 명이야. 그네들은 평교대 후에, 한 번 다이빙… 보면 자기 순서가 한참 뒤인 거야. 근데 우리는 스물한 명에서 반으로 나눠서 A팀, B팀으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다이빙을 해. 계속해서. 걔네들은 한 번 들어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왔고, 우리들은 그렇게도 못 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민간잠수사들도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말은 좋아,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다 까는 거야.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작업 현장 바지가 거기서 일할 때는 쳐주고,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일 안 한다고 빼고…. (전0근, 민간잠수사)

③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부재와 책임 회피

위험하고 무리한 업무로 모든 민간잠수사가 부상, 질병에 시달렸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의료지원이 되지 않았다. 뒤늦게 의료진이 갖춰졌지만 민간잠수사들이 접근하기에 수월하지 않았다. 업무 중에 부상과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희생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니게 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장기적인 치유는 고사하고 부상, 질병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해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례〉

사망 사고 나기 전에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군의관이라고 그 저 해군 배에 우리하고 뭐 몇 백 미터씩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있지. 우리 바지 위에는, 작업 바지 위에는 의사라는 '의'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잠수병이라는 거는 무조건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거는 많이 할수록 축적되는 거예요. 〔중략〕 통증들이 다 있어도 내가 안 하면 다른 잠수사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무리했던 거죠.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이런 말 해도 되나… 시신들이 부패되면서 물이 혼탁해져요. 방안에 고여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닿으니까 피부가 약하니까 염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료를 받았고, 그담에 삼천포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으니까 어깨 골 괴사 부위가 많이 나온 거예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김0우, 민간잠수사)

〈사례〉

물속에 들어가 보면, 시신을 보면 말입니다, 시신이 없는데도 냄새가 날 정도로 찐하게 올라와요. 그 정도로 시신 냄새가 아주 강한데, 그래서 저 안에 시신이 있는 게 확실한데, 물속에서 무리하게 문을 잡아 뜯으려다가, 좁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훅, 하고 여기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6월 24일 날 긴급 후송돼 갖고 삼천포 병원에서 5일 뒤에 수술을 했어요. (이0호, 민간잠수사)

〈사례〉

전부 다 얼기설기 껴안구, 식탁 밑에나 테이블 밑에, 싱크대 밑에 막 가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도 않는 데서 전부 다 손으로 더듬으면, 그냥 물컹 하는 거 만져도, 물속에서 시야도 없는 데서 진짜 겁나는데, 알면서 들어가도 겁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신이 손상이 안 되게끔 해서 분리해서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왔는데, 그럼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중략〕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트라우마, 뭐 정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술 먹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하다못해 병원에 갔다 와도… 저는 그 때 피부병이 걸렸었어요. 머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왔는데 그거마저도 안 된다는 거야(일당에서 제외). 그래서 병원비는 줘야죠, 그랬더니 줄 수가 없대. 이유가? 없어. 자기네 규정을 만든 거야 그렇게.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일 끝나고서 병원 가서 다들 잠수병 치료하면서 아픈 부위 치료하자, 하고 해경이 그 때 또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중략〕 일반 업체에서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기준을 적용해서 보상을 해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경청장이 그 날 저희 병원에 와서, 우리는 어떤 업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개인이 그냥 왔기 땜에 산재는 안 될 것 같고, 수난구호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사실상 재난 상태에서 그런 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대요.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하지만

뭐… 해경 청장이 얘기한 걸 믿고 우리는 치료 쁘라스 치료를 길게 하는 사람은 일 못한 시간만큼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 산재에 준한 만큼의 지원을. 그래서 치료 받을 사람 치료 받고 있는 도중에 치료가 또 보건복지부에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 적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보상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도 팔 개월 구 개월 지났는데….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제가 1월 21일인가 22일날 쓰러졌어요. 한 일주일 입원했다가 병원을 옮겨 진찰을 받으니까 메니에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귀에 옆에 뭐가 부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소견서를 썼더라고요. 병원에서 서울의 어디다 전화해서 민간잠수사라고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틀 있다 다시 가니까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잠수를 않고 위에서 잠수 감독을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야 치사하다 더럽다, 내가 돈 주고 그냥 왔어요. (공0영, 민간잠수사)

2. 진실을 알 권리

참사 피해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8]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사건의 구체적 상황, 사건과 관련된 책임 있는 이들이 알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시민 일반의 보편적 권리이며 피해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수색 종료 상황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언론의 오보를 공식화하여 재생산함으로써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켰다. 또한 참사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했다. 의사표현 및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진실을 알 권리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제대로 된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할 국가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1) 정보접근을 보장받을 권리

(1) 구조 및 수색과정에 관한 정보 부재

사고 초기 정부는 사고정황에 대한 기본적 인지조차 부족했다. 정부 브리핑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차용했지만 언론의 보도가 오보임이 드러남으로써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생산해내는 주체가 되었다. 결국 부정확한 정보 전달은 피해자의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한 사고 초기 피해자들의 신상 파악 및 구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관계부처인 해경과 해수부는 각기 다른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여 가족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장에 대한 정보나, 구조된 이후 과정에 대한 정보와 안내는 제공되지 않

8 박진, 「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시대 이제 끝냅시다」, 『오마이뉴스』, 2015.1.1.

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정보를 수집해야만 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언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를 입었다. 안정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조치도 제공받지 못한 생존자들은 이로 인해 더 큰 심리적 손상을 입었다. 참사피해의 구체적인 상황과 대처과정에 대한 정보접근을 침해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대처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사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 주로〕 기자들이요. 기자들,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오고 나서 큰 스크린이 설치됐어요. TV가.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12시가 넘어서 설치가 됐던 거 같아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엄마한테 듣기로 학교에선 문자만 오고, 경찰, 해경에서는 딱히 연락 안 왔던 걸로 알고 있고, 해양경찰에 전화해서 아이 생사를 알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 거기서는 모른다.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하고 끊었다. 그 다음날 바로 진도로 내려가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 없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안 게 전부예요. 딱히 뭐 없었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4월16일 당시 진도에는 케어나 안내자가 없이 무질서한 상황이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해경〕등은 2명에 불과하였으며 그들이 하는 일은 신원파악〔이름과 연락처〕 중심이었다. 세월호에 대한 정보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세월호에 대한 정보는 없었으며, 오히려 그 시각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본 순간, '탈출 못 한 세월호 탑승자들이 생매장 되었구나' 라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중략〕 바로 집에 들어가서 정부 합동 대책본부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명단이 없고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해경청에 전화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경에 전화했더니 인천해경에서는 명단에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중략〕 우린 관계 없는 일이구나.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자고, 새벽 4시쯤 전화가 오더라고. 인천해경이라고. 명단에 있다. 그 참. 환장하겠더라고.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체육관에 가서〕 명단을 찾으니까 해경 가니까 없는 거야. 전화를 받고 갔는데도. 해수부 쪽 가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 해수부에는 명단에 이름이 있는 거야. 한 사무실에 있는 놈들도 서로 명단이 다른 거야. 지들끼리 싸우더라고. 왜 이 명단에 맞추라고 하는데 없다고 하느냐고. 이게 최종이니까 여기다가 맞춰라 그러는 거지.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그 때만 해도 기대를 하고 내려갔죠. 목포에서부터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다녔어요. 어디 있는 줄을 모르니까.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목포, 해남 다 들렀다가. 없더라고요. 진도체육관 찾아보니 없고. 밤에 팽목항에도 갔어요. 〔중략〕 혹시나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침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비는 조금씩 오고. 어디 갈 데는 없고.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그냥 인천 해경에서도 명단에 있다는 것만 알려 준 거지. 어디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안 알려줬지. 전혀 없었어. 숙소도 체육관이 숙소입니다 라는 안내가 없었어. 거기가 사람 자는 데라고 생각 안했어.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선아(가명)가 나왔는데. 경찰은 와 있었는데 뒤에만 있고, 어선이 와서 구출해줬

대요. 실제로 영상도 있어요. 해경은 옆에 있고 어민들이 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그거 보고 “야, 이거 뭐야” 아이들이 참 경찰들을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 상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팽목항에서도 아이들을 방치했지요. 기자들이 거의 달라붙어 있었구요. 그 때문에 아이들이 경찰 기자를 모두 단절해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어른생존자로서 세월호 구조책임에 심리적 부담감이 너무 컸고 그 공포로 그 자리를 당장 피하고 싶을 정도로 현장은 무질서했다. 안내 및 책임총괄로 보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초기 정보 파악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일 정도였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나도 내 동생 찾으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사복 해경이 잡길래 내 동생이 사무장이다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도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나중에 누가 와서 안 탔으면 좋겠다고. (양0환, 희생자 가족)

(2) 피해지원과정의 정보 접근권 부재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원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러한 지원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여타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인 지원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자구책으로 가족대책위와 같은 당사자 조직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했다. 가족대책위원회와 교류가 적은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사례〉

〔정부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 연락 통로는〕 없어요. 정보는 가족대책위를 통해 얻어요. 피해자 구제 책자도 계속 봤지만, 이것 준다며 왜 안 주냐고 묻고 그랬어요. 알아서 해주는 것은 없어요. 〔중략〕 우리 생존자 형제자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게 됐냐면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장학금 형식으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각 대학에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지원 내용을 알려준 것은〕 정보과 형사. 매일 와 있었거든요. 정보과 형사가 그걸 어디서 알아서 종이를 하나 가져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는데. (최0영, 생존 화물기사)

〈사례〉

세제지원 등 이런 것을 나중에 책자로 가져왔는데 다 유가족 중심이었고 사실 저희는 말할 수도 없었고. 저희가 가서 저희도 피해자니 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면 유가족의 반〔절반〕을 해준다거나 안 된다고 해요. 〔중략〕 처음인데 밤새서 공부하고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외국 사례도 뒤져보고. 해서 이런 세팅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었지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죠. 안 그러면 자살시도 등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았죠.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학생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 당직을 분향소 대기실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안 같은 게 나오면 자료 받아서 대책위 가서 전달해주고, 변호사님이 당직 때 와서 법적인거 설명 다 해주고. 그런데 반 대표들은 다 회사 그만두고 와서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는 일단 무보수 명예직….[2] (김0욱, 희생교사 부모)

(3) 수색 종료 후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에 관한 정보 부재

정부는 참사 발생 7개월 만인 2014년 11월, 수색 종료를 선언했다. 수색 종료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수색, 인양계획에 대한 정보전달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색 종료 이후 인양을 포함한 계획 역시 발표되지 않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인양 결정이 난 이후도, 정부는 인양과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에 여념이 없다.[9]

〈사례〉
수색 종료 그 때 시점에서 가족들한테, 우리 실종자 가족들한테 서운하게 한 게, 의료지원이라던가, 가족들이 아픈데 이런 거는 끝까지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중략〕 지원도 다 끊고, 또 뭐, 그런 인양에 대한 약속 부분 같은 것도 얻어내지도 않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중략〕 가족들이 너무 그 때는 넋이 나갔어요. 너무 오래 시일이 지체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진짜 심장만 뛸 뿐이지 그냥 거의 살아있는 시체 정도 그렇게 됐으니까.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가족을 찾고 진실도 밝혀야 되고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인양이 언제나 될 거냐구요. 지금, 인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갑갑해요. 답답해요, 진짜... 처음 같아서는 그냥 금방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수색 종료하고 나면은 인양을 금방 해줄 것 같기도 한데 해주지도 않고, 〔중략〕 겨울이라고 동절기라고 해주지도 않고, 추워서 물살 세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고.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9 지난 7월 7일 오전 4.16가족협의회는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개월간 세월호 선내 수중촬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구난업체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보여달라는 가족들의 요구도 묵살해 온 정부는 선체 인양을 앞둔 시점에서도 가족들의 선체 촬영 요청을 거부했다. - 「20분 만에 돌린 뱃머리 "해수부가 유가족 농락" 유가족 선체 수중 촬영 시도했지만...」, 『오마이뉴스』, 2015.7.7.

2) 참사 처리과정에 참여할 권리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참사 처리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참사 처리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것은 현존하는 국가 제도와 참사 지원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나아가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참사 처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박탈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 <세월호피해지원법> 제정, 재판, 인양결정, 수색활동 종료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는 대단히 제한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신뢰할 만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관계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수색 종료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모든 희생자의 수습을 약속했던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지 7개월 만인 2014년 11월 수색활동 종료를 선언했고 이러한 종료결정 배경에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주지하다시피 미수습자 가족은 구조와 수색 요구를 지속할 권리가 있으며 사망 시에는 시신을 찾아 돌려받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필수적인 조치들에는 거래나 선택의 강요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민간잠수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수색 종료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압박을 느껴왔다. 정부는 수색이 종료되면 인양이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결국 수색 종료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피해자의 결정은 독립적이고 명백한 자기의사결정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결국 정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분위기를 틈타 인양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출 없이 수색 종료를 선언했고 곧바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범대본)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로 인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피해자군 중 진도어민의 경우, 피해파악을 위한 조사와 피해보상 논의에 대해 정부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상기준을 최소화 하려는 손해사정인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의 누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은 깊어졌다.

〈사례〉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행정부에 넘겼어. 처음에는 조사위원을 120명 내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90명으로 조사위원을 줄인 거야. 우리 안은 민간인이 조사위원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정부안은 해수부 공무원이 더 많은 거야. 해수부가 조사가 되겠어? 또 중요한 것은 기획실장이라고 만들어서,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거야. 이석태 진상조사위원장은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린 거야.〔중략〕(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시행령 안을〕 일방적으로 받았고 이렇게 국가에서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달라. 다 보류가 됐습니다. 제로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가겠다 끝입니다.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존자는 치료를 평생을 해 주던가 지금 아프고 이렇게 힘든데 치료비를 많이 주던가. 두 개 다 아니에요. 니네는 살아 왔잖냐? 이게 끝이에요.〔법에도 없어요〕[10] (박0수, 생존학생 부모)

〈사례〉

생존학생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에요. 생존학생은 사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힘든 상태고,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걱정과 답답함뿐이에요. 설명회 자리라는 게 정부 하위 직원이 와서 설명하고 욕 먹고 가는 거 아니냐. 미리 의견을 줬지만, 우리 의견은 무시하고 시행령도 발표되고 그러지 않았냐. 절차도 그렇고, 앞으로 9월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2015년〕 3월 29일부터 배·보상 신청 받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안산에 가면 보건복지부 뭐 교육 어디서 와서 막 얘기하

10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 모두 배보상 기준에 대한 사전 교감 없이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공식화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 – 「세월호 1년, 3대 쟁점 : 시행령, 인양, 배·보상」,『경향신문』, 2015.04.18.

는 것도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우리가 건의했던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병원치료 1년인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또 몇 가지 한 거 같은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윤0옥, 생존 화물기사)

〈사례〉

평생 치료해야 되는데 1년만으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해수부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배·보상 할 때 돈 많이 받으래요. 사후치료비 부분을 산정해서 배상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최0영, 생존 화물기사)

〈사례〉

그 당시에 수색이 가족들이 종료하고 싶어서 종료한 게 아니고 강제 종료나 마찬가지로 수색을 종료하겠다는데 우리가 끝까지 종료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수색을 하다가 잠수사나 이제 또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 또 되잖아요. 〔중략〕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색을 중단하면 이주영 장관이나 해경 측이나 해수부 측에서도 〔중략〕 인양도 수색의 한 방편이니까 기다려봐라…[3]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사례〉

수색 종료는 어떻게 됐냐면, 해경 해체에 맞춘 거죠. 실종자 의견이랑은 상관없어요. 〔중략〕 우리 의도랑은 상관없었죠. 정부의 끝내주는 작품인 거지. 거기에다가 항상 '실종자가 원해서', '가족이 원해서' 그거만 앞에다 붙여놨던 거지 실종자 의견이랑은 상관없어요. 〔중략〕 그런데 뭐라고 해요? 실종자 가족이 원해서. 가족들의 요구사항. 거기엔 항상 그것만 붙여대죠. 그런데 정말 원하는 건 왜 안 해줘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일을 더 서둘렀다고 봐야죠. 〔서두른 느낌이〕 조금 있었죠. 〔인양이〕 물론 바로 야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수색하면서 이미 배의 상태나 인양할 수 있는 저기 조

건을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늦어봤자 금년 1월쯤 해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이제. 근데 지금 4월인데도 아직 얘기를…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사례〉
〔손해사정인이〕 계약서를 안 보여 주더라구요. 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하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봤더니 계약서에 수수료 부분이 15% 있는데 소송이 걸렸을 때 수수료를 선사나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나, 단, 국가 재난지역 선포시에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주체가 우리이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니 당신 안 할려면 빠지라고 이 사람은 하지 마! 라며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우고 혼자 빠졌어요.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사례〉
손해사정인이 직접 와서 보고 해야 하는데 신청서 받으러 한 번 오고는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증빙서류만 제출하라고…. 내가 그래서 손해사정인한테 내가 활어보관용으로 허가받은 곳에 전복을 했는데, 다른 이들도 이런 경우였지만 태풍이 왔을 때, 보상사례가 있었다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며 나한테 "하면 당신은 영창 들어가야 된다"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인이랑 등지게 되었죠. 지금 사방팔방으로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요. (최종호(가명), 진도어민)

(2) 개별 피해자 필요에 대한 고려 없음

세월호 여객선에는 한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정보 접근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같은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민 피해자들 역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접근에 더욱 취약한 이주민 혹은 외국 국적 피해자들에게는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개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례〉
당연히 한국인하고는 좀 편리하지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인들은 바로 접하고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쉬운데 저희는 한국어를 못하고 정보를 어떻게 접하는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알려주고 아니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법을 제정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뭐 다 상황을 저희 언어로 된 자료를 받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그 시체 건지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지는 못하고 3개월 동안 놔뒀어요. 냉동시켜서 나중에 되게 보기 안 좋았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많이 변형이 되어서 7월 16일에 장례식을 치렀구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저희가 아마 장례식은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고.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그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 한자를 갖다가 전에는 그냥 한자로 표기를 해서 뭐 이렇게 찾아보면 쭉 이해가 쉬웠겠죠. 그치만 요즘은 한글로 다 쓰잖아요. 한자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힘들었다고 봐야죠. (이0종, 생존자)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정부정책을 향한 비판과 저항은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마음이 함께 한 결과이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제정을 요구하거나, <세월호진상규명법시행령> 폐지를 요구하며 거리에 나올 때마다 국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폭력은 특히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전후하여 극대화되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이루어진 집회, 시위를 정부와 경찰은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집회가 진행되었던 광화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복궁, 안국동 일대까지를 준 '계엄 상태'로 만들어 유가족과 시민들의 접근 자체를 차단했으며, 유가족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하고 연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을 조장하였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다. 국제인권기준은 고사하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의적인 법집행이 이뤄졌다.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와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었다.[11]

(1) 유가족, 시민을 향한 폭력(부상)과 연행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진압으로 유가족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 4월 18일 진행되었던 집회에서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 시민과 유가족을 포함해 총 100명을 연행하였다. 이중 김0오 씨 등 20명의 유가족이 연행되었으며, 5명의 청소년이 훈방 조치되었다. 16일, 18일에 경찰이 설치했던 과도한 차벽과 폭력 연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은 차벽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진압 작전을 펼쳤다. 경찰의 폭력연행은 계속되어 5월 1~2일, 78명의 시민이 연행되었고, 차벽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과 기자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사용하였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공권력에 의한 취재 방해 등으로 언론의 자유 역시 크게 제한되었다.

〈사례〉

4월 18일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들어 올리는 성추행도 있었다. 집회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여성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며 연행하기도 했다. 여경이 아닌 남자 경찰이 여성을 연행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이는 여성 집회참가자가 연행될 경우 남성경찰이 아닌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11 집회 시위의 권리 침해 사례는 본 자료집에 별도로 첨부하는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단〉의 「4월 18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 보고서」와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 감시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이 절에서 인용된 사례 중 출처 표기가 없는 사례는 상기 보고서의 사례임을 밝혀둔다.

〈사례〉
4월 18일 연행된 유가족도 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00아빠' 김0오 씨는 버스 지붕에서 안전매트 위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사지가 들려 연행되었다. '00아빠' 최0덕 씨는 손이 다친 채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연행 과정에서 사지가 들리거나 강제로 끌려가면서 손목 등에 타박상과 상처가 난 연행자들도 다수였다.

〈사례〉
경찰 폭력에 의한 부상자 숫자도 확인된 것만 100여명이 넘었다. 무릎분쇄골절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부터, 염좌 및 좌상 환자도 다수 생겼다. 허벅지가 밟혀서 심한 대퇴관절염좌 부상도 있었다. 열상 환자도 많이 생겼다. 적어도 5명 이상이 시민단체가 파견한 응급의료팀에게 치료 받았다. 한 여성은 코가 찢어졌고, 시민단체 회원 1명은 다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찰과상과 타박상 등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시민들은 너무 많아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사례〉
5월 1일, 경찰의 물리적 폭력은 시위대를 도로에서 미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는데 앞에 섰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찰들의 발에 깔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도 경찰은 계속 무리하게 밀었다. 또한 경찰의 통행제한에 항의하던 시민에게 경찰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2) 유가족과 연행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경찰은 집회에 참석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해산시키거나 연행하기 위해 폭언과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유가족의 통행을 근거 없이 가로막은 사례도 많았다. 올해 4월 유가족들이 광화문 현판 앞에서 거리농성을 할 때, 경찰은 체온 유지를 위한 담요 반입을 차단하거나 화장실 통행을 가로막는 등, 기본권마저 억압하였다. 이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든 방식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의 직무를 져버린 것이다.

〈사례〉

〔유가족 부모님들이〕 초기 국회에서 농성하실 때, 아. 그때 짜증나는 인권침해가 있었구나. 그때 버스에서 못 내리게 했었어요. 입구를 경찰이 막고 있었어요. 왜 못 내리냐고. 우리가 범죄자냐고. 아 여긴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다가 어머님들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더니 경찰청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여경이랑 동행하라고. 범죄자처럼. 실제로 어머님들이 화장실갈 때 여경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런 게 심했어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국회근처만 가도 경찰들이 졸졸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 범죄자 취급이 제일 맞는 거 같아요. 경찰이나 정부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자 취급했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5월 1일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맞아도 싸다'고 하거나 횡단보도 통행제한에 대해 항의하는 여성에게 '아줌마 5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못 지나가요, 집에나 가요'라며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

〈사례〉

5월 1일,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에게도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는 계속되었다. 여성연행자의 머리를 남성경찰이 잡아채어 그 여성은 엎어진 채로 질질 끌려 연행되었다. 여러 연행자들이 연행되면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호송차로 끌려가면서 경찰들이 발로 가격하였다. 또한 진술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연행자에게 "정신 나간 × ", "유치장에 들어가야지 정신을 차리지"등의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 외에도 지나가던 시민이 부당하다며 항의하면 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나가던 청소년이 캡사이신을 맞은 시위대에게 물을 나눠주다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3) 이동할 자유 제한 : 차벽, 이동차단, 고착

집회 시 시민들과 세월호 피해자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고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벽은 모든 통행을 금지하는 전면적 통제행위이며 시민들을 고립시키는 극단적 봉쇄조치이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12], 차벽설치와 같은 원천봉쇄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경찰은 이동차단, 고착, 차벽과 같은 경찰력 발동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6조를 주로 거론한다. 그런데 경찰이 <경직법> 6조1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집회봉쇄조치를 취하려면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직법> 1조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권 행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차벽설치와 이동차단 등의 조치는 거의 대부분 불법이다.

〈사례〉
4월 16일에 이어 4월 18일에도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막아섰다. 광화문, 종로, 안국동, 경복궁으로 난 도로로는 차가 다닐 수 없었고, 경찰은 인도마저 통제해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였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들, 경북궁역·안국역 일대 거주민들은 도로와 인도를 봉쇄한 경찰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었다.

〈사례〉
종각역과 안국역의 경우 출입구까지 봉쇄되어 지하철 이용승객마저 통행이 불가

12 서울광장 차벽설치에 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벽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차벽과 같이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경찰조치는 집회의 해산사유보다도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차벽 등 경찰의 집회봉쇄조치는 명백히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2009헌마406)

능했다. 경찰은 광화문으로 갈 수 있는 종각역 2, 4번 출구도 막아서 시민들은 위험한 계단에 거의 30분 이상 감금되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하철 출입구를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 행위이다.

〈사례〉

그전과 다르게 과잉진압을 시작했었어요. 범죄자 취급하고. 전에는 유가족들은 만나게 해줬었는데 이제 통행도 막고. 〔중략〕 동생까지 잃었는데 엄마아빠까지 잃게 될 거 같고. 왜 우리가 내 동생 죽여놓고 내 동생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데, 그때 구조도 안 해 놓고 왜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데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이게 목숨을 걸만한 일인지, 뭐 하나라도 알려면 목숨 걸고 뭐 하나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4]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4)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경찰은 세월호 집회에서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자의적으로 사용해왔다. 경찰은 경찰장비사용에 관한 규정의 미흡함과 모호함, 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 등을 이용해 자의적인 장비사용을 합리화하고 있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집회 해산의 목적만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상해와 공포감을 주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례〉

화장실도 못 가게 한 거? 저희가 나가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부모님도 잡아서 경찰들 있는데 조그만 통에 해가지고 소변 보셨던 거 너무 화가 났고, 음료수 병도 가방 뒤져서 이런 거 있으면 던질 수 있고 폭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된대요. 그렇다 쳐요. 돗자리나 담요는 왜 반입이 안 되는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는 건지 모르겠어요. 돗자리도 훔쳐간 적 있거든요. 인권침해를 떠나서 도대체 경찰이 돗자리 훔쳐 가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이없는 일이 많았어요.[5]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4월 18일 세월호 집회에서 4시간가량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은 시민들은 눈과 얼굴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특히 분사기를 시민들의 얼굴에 조준해 캡사이신을 분사하여 시민들은 수 분간 눈을 뜰 수 없었고 눈과 얼굴의 따가운 통증이 지속되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물대포를 연달아 사용해 시민들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방패를 밀며 사람들을 밀어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로 인한 각·결막염, 피부손상은 다수였다. 차벽에 둘러싸여 피할 곳이 없던 200여명은 모두 여기에 노출됐다. 캡사이신 등은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몹시 위험할 수 있다.

〈사례〉

4월 18일 경찰은 물대포의 과다사용으로 준비된 분량을 다 사용하게 되자 경찰은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을 채우기도 했다. 오후 10시경 경찰이 물대포에 물을 보충하기 위해 무단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하자, 이에 대해 종로소방서에 경찰의 소화전 사용허가에 대해 확인한 이상호 기자는 종로소방서가 사용허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상호 기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사례〉

5월 1일과 2일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에서는 4월 18일보다 훨씬 강도 높은 폭력적인 경찰력이었다. 특히 5월 1일과 2일에 주목할 경찰대응의 특징은 공격적인 물대포 사용이며, 특히 의도적으로 세월호 유가족과 기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게 했다는 점이다. 수압과 농도가 높은 물대포를 유가족과 기자들에게 쏘아 물리적 상해를 입혀 실질적 위해를 주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5) 경찰의 폭력 조장과 방관, 집회방해 행위

경찰은 2015년 4~5월 집회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답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4월 18일 집회에서 이규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참여자들과 경찰이 서로 적대하도록 자극했다. 폭력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말 등으로 집회참여자들을 흥분시켰다. 잘못된 지휘로 인해 집회참여자들 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다수 부상을 입었다.

〈사례〉

이규환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미란다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했으니 해산명령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겁박하였다. 경찰들을 향해 물대포 각도를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발사하라, 시민들을 채증하고 체포하라는 등 마이크로 반말 고성을 지르며 작전 명령을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는 "자신감을 갖고 하라" 등 강경하게 진압할 것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는 경찰이 방송을 하는데 욕을 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다.

〈사례〉

5월 2일 새벽 3시 경 집회 대오를 촬영하던 몇몇 청년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저 새끼들 연행해' 라고 하는 등 참가자들과 일부러 충돌을 일으켰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경찰에 집회 참가자와의 이격을 유지할 것과 폭행에 대한 경찰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들은 집회 대오를 인도에 묶어두는 것에만 신경 쓰고 집회 참가자와 경찰들의 충돌을 막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장비가 파손되기도 하였다. 결국 충돌이 일어난 지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인권침해감시단 등에 의해 참가자들과 충돌했던 경찰들이 병력 뒤로 물러나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 3항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피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4) 감시와 사찰 받지 않을 권리 – 정보인권의 보장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정부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애도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나와,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정부의 노력이 아닌 일상적인 감시와 미행, 채증, 사찰이었다. 사고 초기 진도 체육관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부터 현재까지 감시와 사찰은 계속 되었다. 피해자와 가족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공분하는 시민들에게도 경찰의 감시와 사찰은 계속되었다. 여러 차례 감시, 사찰의 정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는 중단되지 않았으며 반성은커녕 감시, 사찰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다. 감시, 사찰은 미행, CCTV 감시 등 그 방법도 다양했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권리와 행동은 보장받아야 한다.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모이고, 그에 동조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실을 요구하는 이들에 대해 억압적인 통제정책을 펼쳤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보여준 역할은 통제와 침묵만을 강요하는 통치 국가의 전형이었다.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은 함께 모이고, 이야기 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없이 안전한 국가와 사회는 한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1)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일상적 사찰

① 사고 초기 수습이 아닌 사찰로 일관한 국가의 역할

사고 초기 정부가 보여준 것은 사건을 수습하기 보다는 우왕좌왕하는 국가의 모습이었다.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구조를 진행하기 보다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도체육관에 대규모 사복경찰을 투입하여 가족들과 물의를 빚었다.[13] 이는 분노한 가족들을 진도에서 청와대로 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미주6) 참고) 정부는 사죄나 문제 해결보다는 경찰병력을 동원해 청와대로 향하는 가족들을 가로막고, 채증[14]하였다. 사고 초기 정부가 구조보다는 자원봉사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을 사찰하는 데 주목했다는 한 자원봉사자의 증언[15]에서도 볼 수 있듯, 구조 과정에서 무능력함만을 보이던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사찰과 감

13 「세월호 침몰 사고 : 재난 현장에서 신분 감춘 사복 경찰... 실종자 가족들 반발」, 『헤럴드경제』, 2014.4.19.
14 「경찰, 실종자 가족 '채증'... 고위관료, 사망자 명단 앞 '기념사진'」, 『경향신문』, 2014.4.20.
15 「구호물품 쏟아지는데 관리할 공무원 안 보였다」, 『경향신문』, 2014.4.30.

시에는 발 빠르게 대응했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의 피해자들을 도리어 통제 대상으로, 범법자로 취급하였다.

〈사례〉

그 한 번 진도 대교까지 행진했을 때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때 저도 있었어요. 〔중략〕 사복 경찰이었어요. 그때 이제 낌새는 있었지만 사복경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그때 딱 현장발각이 된 거죠. 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범죄자냐고. 우리가 범죄자냐고. 왜 우리를 감시하고 일일이 보고하냐고.[6] (최O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②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일상적 사찰

경찰의 사찰과 감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이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오는 30여명의 가족들을 미행하다 들통 난 사건도 있었다.[16] 또한 가족들을 몰래 뒤따라 다니며 이야기를 듣거나, 가족회의에 참여하거나[17], 피해자 가족과 언론사의 인터뷰를 몰래 녹취[18]하는 등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감시와 사찰에 대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문제제기에 경기경찰청장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19], 그 이후에도 가족들에 대한 감시는 계속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이 역시도 시간만 끌 뿐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20] 참사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2차 가해를 가하는 행동이다.

(2) 유가족 감시와 개인 사찰

① 농성중인 유가족을 감시하는 24시간 CCTV

세월호 유가족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16 「경찰 감시, 피해자 가족 분노 키워 "사복경찰 유족감시, 시위참가자 토끼몰이식 체포」, 『내일신문』, 2014.6.20.
17 「특별기획 세월호 침몰에서 참사 키운 부실 대응까지'비극의 재구성'」, 『경향신문』, 2014.5.07.
18 「'그것이 알고 싶다' 세월호 편, 사복경찰 불법 녹음 포착... "대체 왜?"」, 『SBS』, 2014.4.27.
19 「경기경찰 사과, 최동해 경기경찰청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논란 죄송"...유가족 사복경찰 사찰 의혹에 분노」, 『서울신문』, 2014.5.20.
20 「경찰 감시, 피해자 가족 분노 키워 "사복경찰 유족감시, 시위참가자 토끼몰이 식 체포」, 『내일신문』, 2014.6.20.

진행했다. 가족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알려달라는 가장 소박한 요구에 정부는 대답 대신 여러 장비를 동원해 유가족을 감시하였다. 청운동 동사무소 근처 도로교통용 CCTV는 유가족의 농성을 감시[21]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며 CCTV의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22] 하지만 정부는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유가족을 감시하였고, 유가족의 요구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② 유가족 개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등을 진행했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정을 요구하며 가는 곳곳 감시가 이루어졌다. 유가족들에 대한 감시는 농성장을 넘어 개개인의 가족사 및 신상에 대한 사찰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단원고 희생 학생 유가족인 김0오 씨에 대하여 고향에 신상을 묻는 전화를 하고, 국정원이라 신분을 밝힌 사람이 주치의의 신상을 묻는 일도 있었다.[23] 국가권력을 앞세워 개인을 사찰하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두려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부당한 비난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신상공개, 감시, 비난, 모욕,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이러한 기본권리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채 보호받아야 할 국가로부터 도리어 감시받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3) 집회 시위에 대한 감시와 사찰

①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감시

참사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크고 작은 집회 시위들이 줄을 이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의 도보행진부터,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을 위한 크고 작은 행사까지 다양했다. 세월호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진실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민과 피해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모이는 장소 자체를 차단하거나, 도로교통용 CCTV를 활용[24][25]하며 감시하기에 바빴다. 지난해부터 세월호 집회가 있을 때마다 도

21 「24시간 세월호 가족 '감시' 정체 불명의 'CCTV'」, 『경향신문』, 2014.8.24.
22 「세월호 가족위 "경찰이 교통CCTV 돌려 24시간 감시"」, 『노컷뉴스』, 2014.8.24.
23 「세월호 가족들 "유가족 사찰 의혹 해명하라"」, 『뉴시스』, 2014.8.25.
24 「경찰, 교통CCTV 조작해 세월호 집회 감시했다」,『한국일보』, 2014.6.11.
25 「세월호 집회 감시하는 CCTV...'딱 걸렸네'」,『노컷뉴스』, 2014.10.10.

로교통용 CCTV로 집회 시위자들을 줌인·아웃을 해가며 감시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회 시위자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도로의 CCTV는 교통정보 수집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으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나서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4년부터 수차례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도 교통용 CCTV는 집회 감시의 용도로 활용되었다.[26]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는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심리를 위축 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27]

②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경찰은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사람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의 제시나 동의 절차 없이 휴대폰을 압수하고,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페이스북, 사진, 통화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하였으며,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하는 등 수사에 필요 없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였다.[28]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은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주변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상대방 전화번호, 사진파일등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29]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2,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사실도 밝혀졌다.[30]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넘겨진 2,300명의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가기관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 이러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혐의입증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었다. 혐의입증과 무관하게 개인의 사생활이 오롯이 담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인권 침해이다.[31]

26 「서울경찰청장, CCTV 보며 세월호 집회 대응」,『JTBC』, 2015.4.28.
27 「교통용 CCTV 집회 감시는 위법」,『경향신문』, 2015.5.26.
28 「세월호 집회 참가자 휴대폰 압수수색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뉴시스』, 2015.4.23.
29 「경찰, '세월호 집회' 주최자 카카오톡 내역 압수수색」,『한겨레』, 2014.10.1.
30 「카톡 압수수색 때 총 2368개 전화번호 검찰에 제공」,『미디어오늘』, 2014.12.23.
31 「수사당국, 한 명 카톡 수색으로 3천명 사찰」,『오마이 뉴스』, 2014.10.1.

3.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참사 이후 신체적, 심리적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등에 집중하며 생계수입이 줄었다. 생활고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잦아지거나 생계형 대출을 받아 가계부채가 늘었다. 대인기피, 불안감, 고립감과 같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군 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족 간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대화가 줄어드는 사례가 많고 이전과 같은 가족관계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이웃이나 친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피해자 각각이 처한 조건에 따라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는 등 공동체 내 관계 어려움도 대두되었다.

1) 원상회복과 재활에 대한 권리

재난 참사 피해자는 참사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한다. 물론 피해자들은 결코 참사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희생된 가족이 돌아올 수 없고 생존자에게는 트라우마가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공동체는 희생자에게 최대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 생존자에게는 원상회복과 재활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고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고용, 교육 등의 기회 상실, 물질적 손해, 잠재적 소득 상실을 포함한 재산 피해, 건강 위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등 종합적이고 심각한 피해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피해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회제도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치유, 회복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는 경제적 지원, 의료적 돌봄,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 서비스 등을 매개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 보장, 정체성, 가족관계, 고용, 재산 등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필수적이다. 또한 치유 회복의 과정은 진실규명, 정의회복,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조치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정부의 태도로 인해 국가 기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불신이 초래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재활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다.

(1) 경제적 지원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법 제20조2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사 이후 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계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런 생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조치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긴급생계비와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두 가지가 제공되었다. 해당 긴급 지원금은 참사가 발생한지 1개월 후에 지급되었고[32] 그밖에 교육세, 지방세 감면 혜택 그리고 긴급 생필품 지원, 긴급도시락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 체계가 불분명하거나 피해사실을 협소하게 산출해 일부 피해자군은 지원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의 피조사자들은 가계수입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등으로 기존의 생계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나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었다. 생존자 가족의 경우, 생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가정 내 돌봄을 위해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장기 수색과 인양 지연 상황에 따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계 수입 감소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족 간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32 「정부 지원금 쥐꼬리...민간 성금액 '10분의 1' 수준」,『CBS노컷뉴스』, 2014.5.15.

피해자들은 생계유지와 일상회복을 위해서 예전의 일자리로 복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참사 이전의 삶으로의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들의 고용회복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신체, 심리상의 변화로 이전 수준의 노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신수습활동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은 무리한 잠수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고용회복이 요원하다. 25명의 민간잠수사 중 7명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 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병되어 잠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직상태를 감수하거나 다른 직종의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도는 사고 직후 한동안 수색과 방제작업 이외 목적의 출항은 제한되었으며, 조명탄과 기름유출로 양식장을 포함해 조업활동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는 비교적 고가의 수산물 조업 판매로 지역경제 기반이 유지되는 지역이었지만, 참사 이후 판로가 막히거나 판매되어도 제 값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관련법에 따라 재난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도 추진되었지만 주민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33] 지역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진도 어가에 지원한 금액은 가구당 85만 3천 400원에 불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 그나마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34]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특별영어자금을 받으려 해도 대출 이자(연 3%)가 부담이 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례〉

지금 옛날 벌어 놓은 거 하고 이것저것하고 까먹고 있는데… 다른 집들도 부모들 거의 70~80%는 회사 안 나가. 공무원들이나 국영기업체 같은데 몇 명만 나가고, 다 집에 있고 울고 다니고, 광화문 맨날 가 있고. 많이 흩어져 가 있어 광화문, 진도, 여기 몇 곳 흩어져서, 또 어떤 부모들은 간담회에도 많이 다녀요. (중략) 아예 생계 포기하고 다니는 거지. 자기 돈 들여서, 25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은 활동을 해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33 「진도 취재 : 진도 주민 "생계가 막막하다"」,『KBS』, 2014.6.19.
34 「사설(하) 진도 주민들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해야」,『무등일보』, 2014.6.26.

〈사례〉

한부모 가정은 동생이 있으면 이모네 등에 보내고, 맞벌이 부부는 한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챙기고, 아니면 집에 있는 아이와 병원에 있는 아이 챙기느라 두 부모 모두 정신이 없고 일을 그만둔 집도 있고. 생계는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우선이고 지켜봐야 했고.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아이들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서〕 외벌이가 돼요. 최근에도 일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희생된 학생 자리에 가서 오열하다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뛰어가야죠. 애들이 '엄마'하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학교로 가거나, 〔집에〕 끼고 있어야 하죠. 혼자 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어떤 아이들은 책상 밑에 친구가 있는 거 같다고 하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혼자 놔둬요. 학교 가 있는 그때도 저희는 비상대기조라고 생각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가정이 피폐해지고 생계문제도 생기고, 싸우는 일도 많아지고, 아빠들이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는데, 와이프들은 직장 나가라고 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나서서 하지 않아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냐 그러죠. 모든 가정이 그런 상태일 것 같아요. 〔중략〕 시민 단체나 종교단체가 생계비를 지원하면 항상 생존학생은 제외잖아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긴급생계비 108만원 석 달, 경기도에서 3개월 연장. 해수부에서 168만원 1회 지원. 그거 밖에 없다. 엄청나게 받은 듯이 말하는데. 솔직히 맞벌이를 하던 가정이 외벌이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특히 저희대표나 활동하는 아빠들은 남자들이잖아요. 아빠들이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잖아요. 엄마들이 벌면 얼마나 되겠어요. 남자 벌이가 없어진 상태에서 엄마로만 벌어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또 웬만한 집에서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저희 집사람하고도 좀 많이 싸우지요. 지금. 돈은 없지, 돈 들어갈 데는 많지. 학비 들어가야 되지. 이 돈 못 내면 당장 신용불량자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강0기, 생존자)

〈사례〉

조리하는 사람이니까 인제 그쪽으로 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그쪽으로는 힘들 것 같아, 지금.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이에 뭘 바꾼다는 게 어렵고. 〔중략〕 근데 복지사 님이… 방과 후 수업, 거기에 다가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주셨는데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건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체력이 안 따라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김0임, 생존자)

〈사례〉

〔여기 계신 분들 중 잠수사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벌어 놓은 거 쓰는 거죠. (민간잠수사 여러 명)

〈사례〉

양식장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양식장을 하면 일 년을 먹고 삽니다. 애들 키우고 노후대책도 하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이자 비싼 은행권 빚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중략〕 미역에 기름 떠요. 유막이 생기면 〔가격이〕 반 토막 나고 사지도 않아요. 유류피해 안 나도 기름은 묻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죠.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나는 기름 유출 걱정은 안 했어요.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고 전복은 2m 30cm 아래 있기 때문에 기름은 다 위로 뜰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복이 어느 순간부터 밥을 안 먹어. 3일이면 다 먹는 양을 일주일이 지나도 안 먹어. 9일 만에 들어 올려 보니까 싹 죽어있어. 〔중략〕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투입

되는 배들이 〔중략〕 간조 때도 들어오니까 스크류에 섞여서 기름이 들어가서 다 죽어 버린 거 같아요. 전부 저거 죽여불고 했는데 내 속이 속이것소…. (최종호(가명), 진도어민)

② 지원 설계 시 피해자의 참여배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참사처리의 모든 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을 설계함에 있어 피해자의 참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 중대본은 세월호 탑승자와 그 가족, 구조 활동 참여자 등에 대한 신체 및 심리·정신적 치료비를 지원계획을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원계획은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과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분개했고 이후 해당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여 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다.[35]

〈사례〉

그냥 가족대책위 우리 회의할 때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생계지원 안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언론에 자기들 이익을 찾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 언론에 보고하고 난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에요. 지금. 솔직히 지금 가장들이 많이 손 놓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지급을 하려면 생색만 내지 말고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게 지원을 해야지. 이건 뭐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고 국가는 생색만 내고. 이게 재난지역이 되었으면 지원이 되는 건데도 저희가 구걸하듯 받아야 했어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35 「정부 장례지원단, 희생자 가족에 1대1 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CBS노컷뉴스』, 2014.5.8.

③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긴급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백여만에 불과한 턱없이 낮은 액수였다. 지원의 최대연한은 긴급생계비 6개월분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2개월이었으나 이를 모두 보장받은 피해자는 드물다. 이러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지원과정에서도 거주지역이나 기존 복지 수급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저축이나 퇴직금, 혹은 대출금으로 버텨가며 가계 빚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진도나 제주도 거주자의 경우 트라우마 센터 또는 화상 치료를 위해서 주거지 인근이 아닌 서울이나 안산으로 와야 하는 불편을 겪으며 비용을 긴급생계비에서 충당했다.

〈사례〉

맨 처음에는 우리 일단 긴급생계지원 있잖아요. 그거 받고. 그런 거 갖고 생활하다가 지금은 없죠. 저는 지금 있는 것만으로 전에 있던 퇴직금 그거 갖고 생활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출 이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하고 계신 거고. 저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대출밖에 더 있습니까. 나중에 갚아야죠. 뭐, 다. 그거 갖고 생활하고 (박0수, 생존학생 부모)

〈사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쓰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거는 어찌되었든 받아먹어야 돼. 억울해서라도 받아야 돼.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직장 생활을 첫째 못하니까 생활이 지금 엉망이고… 급하니까 이제 은행대출 받아서 지금까지는 생활을 해왔는데. 은행에서 처음에는 이자를 되게 싸게 받았어요. 제가 2천만 원을 대출을 했는데 1% 대 이자를 받았어요. 〔중략〕 근데 지지난 달부터 이자가 갑자기 이자가 5.5%로 올랐더라고요. 그래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지원 받은 게 한 39만 원 정도 돼요. 매월. 39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는 생활이 안 되고. (김0임, 생존자)

〈사례〉

위로금은 초기 3개월간 120만원씩, 총360만원 지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제주도로부터는 생계비지원이 2014년 12월까지 5개월간 4인 가족 기준 150여만원이 다였다. 이는 치료를 위한 안산 온마음센터로의 이동경비에 사용하였기에, 아내가 돈 벌러 다니고, 고3딸은 학원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0수,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④ 차별적 지원금 산출방식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자

참사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식은 체계적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군 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원금 수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피해자들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거나 [故 한0지] 베트남 가족의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무르며 고통을 겪은 장기 자원봉사자, 잠수사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들을 지원할 법·제도가 없다는 게 이유다.

〈사례〉

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안정자금이나 뭐 이런 그것도 매달 주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을 주는 건데, 이걸 차별은 둔 다는 것이 난 이해도 안 되고. 이건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 이 돈 안 받겠다 했어요. (최0영, 생존 화물기사)

〈사례〉

생계는 그때는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우선이고 지켜봐야했고. 일단은 정부에서 나온 게 108만원 긴급생계비. 6, 7월인가부터 3개월간 지급했고, 그 이후 경기도에서 3개월 해줬고, 회사 휴직한 분은 고용보험에서 받았고, 긴급생계비라는 것이 해수부에서 나왔는데 생존자라 반으로 잘라서 나왔어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긴급생계비 신청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나와요. 그것도 선지급 후서류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재산상황, 휴직서 등은 나중에 내도록 하고 서류도 간소화해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해줬어야 하지 않나. 재산상황을 내라고 한 것은 긴급생계비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통장잔고가 300만원 이상 있으면 안 되고 그래요. 먼저 그걸 설명해줘서 어떤 분들은 신청도 못했어요. 한부모 가정은 그전에 받고 있던 108만원이 있으면 이중이라고 제외되었고 너무 행정적으로 하니 저희가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중략〕 한 시간에 5500원을 받는데 하루에 2~3시간을 해요. 목요일 날에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는 수업을 받는 건데 그리고 아버님이 어깨가 아파서 마사지를 하고 그 시간 빼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광화문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한국어는 금요일 날 배우고 정신적 치료도 하고 일주일에 한 8시간은 일을 해요. 한 달에 지난번에 16만원 2000원 정도 벌었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주변분들 집에서 하루 이틀 자다가 그것도 못할 짓 같더라구요, 길게 있을 거니깐. 그래서 고시원을 얻었어요. 〔보증금은〕 없었어요. 저도 길게 하다보니까 공과금부터 그런 게 좀 치이긴 해요. 오랜 시간 보내면서. 근데 주변에 저를 좀 잘 아는, 그나마 저보다 좀 나은 분들이 방을 얻을 때 도와주시고. 담배도 한 갑씩 사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주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세요. (백0혁, 자원봉사자)

〈사례〉

고모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 기준은〕 체육관이나 팽목항에 와서 이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에 한해서 준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중략) 그래도 최저 생계비래도, 나중에 차감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휴, 사람 찾는데도 저긴데 그까지 얘기는 못 하겠더라구요. 정부 관계자한테. 물론 그런 걸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없

어요. 최소한의 생계는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줬으면 더 이상 바람은 없구요.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⑤ 대중들의 인식과 괴리된 지원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이들이 국민성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성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지난 6월 5일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2억1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만 내려진 상태이다.[36] 참사 이후 지금까지 모인 국민성금은 1천141억 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 중이다.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지원 과정에서 전혀 불필요한 물품이 전달되거나 배달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례〉
제가 알기로는 성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든데, 힘들 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힘들 때 좀 와서… 〔눈물〕 우리한테… 도움이 됐으면…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성금을 받은 걸로 우리가 지원을 받은 줄 알아요. (김0임, 생존자)

〈사례〉
지원물품이라고 해서 김치, 드링크 하나, 빵 하나, 사탕 두 개를 진도군에서 보내줬었죠. 긴급지원품이라고 갖다 준건데 날짜도 다 되어가고 먹을 것을 준 것도 아니에요. 김치는 버렸어요.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2) 심리지원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대인기피, 불안감, 고립감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심리

36 「세월호 희생자 유족에 국민 성금 2억1천만 원씩 지급」,『연합뉴스』, 2015.6.5

적 외상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의료서비스의 단순 이용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치료 등 피해상황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심리치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 스스로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측면도 있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초기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비일관성, 비체계성이 심리치료 효과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① 심각한 심리적 외상 증상

피해자들은 모두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다. 생존학생들은 탈출할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친구들에 대한 기억으로 일상적인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시신을 수습한 민간잠수사들의 경우 업무 자체로 인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도 심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나 주변인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생계에 대한 압박 등 다양한 측면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

구조작업에 참여했던 진도어민들은 생활공간이 참사지역이 됨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러나 이들 주민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심리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민들 스스로 치료 욕구를 갖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심리적 외상은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들 중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어 심리적 고통의 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에서는 우울증을 앓던 자원봉사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37], 진도에서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하던 문00 목사가 건강 악화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38]

피해자들은 심한 고립감에 시달렸다. 미수습자 가족의 경우 장기간 진도에 머물면서 가족을 찾지 못한 고통과 더불어, 수색 과정 전 단계에 걸쳐 충분한 조력을 얻지 못해 심각한 고립감에 시달렸다. 수색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았다. 가족들은 피폐해진 심신상태로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무능한 범대본에 대응해서 더욱 지쳐갔다.

37 「세월호 침몰 참사-유가족 돕던 40대 자원봉사자 목매 숨져」, 『국민일보』, 2014.5.12.
38 "목사님이 침몰 사고 과정을 지켜보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심적으로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본인이 편히 쉬고, 먹고, 자는 것조차도 사치처럼 여기시고 끼니도 거른 채 밤낮없이 봉사에 전념하셨죠." -「세월호 자원봉사 중 투병하다 숨진 고 문0수 목사」, 『노컷뉴스』, 2014.10.24.

그러나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거나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부는 본인의 심리상태를 돌보는 것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었다. 미수습자 혹은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거나 참사의 잔상규명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정책 등이 이들이 심리치료 자체를 억제하거나 단념하고 치료를 거부하도록 방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사례〉

고3 되면서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까 우울해 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한번 우울해 하면은 공부를 아예 못해요. 〔중략〕 친구들 생일 돌아올 때마다, 4월 16일이 올 때마다 힘든 거 같고. 저는 4월 16일이 점이면 1년을 삥 돌아서 제자리로 왔다가 다시 삥 돌고 제자리로 왔다가. 〔중략〕 1년 살다가 다시 4월 16일 오면 다시 힘들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아요. (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저 같은 경우에는 웃음치료 강사를 하다보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울한 상태가 되게 오래 갔어요 저도. 〔중략〕 저 자체도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그 때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몰랐어요. 〔중략〕 장기로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였더라구요. 〔중략〕 뭐를 겪었냐면 불면증에 시달렸고, 빗소리만 들으면 가족들이 잘못 될까 봐 쫓아나가는 게 3층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고, 맨발로 뛰어가고, 잠옷 입고 쫓아내려가고. 이런 것이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신0혜, 자원봉사자)

〈사례〉

어떤 아이는 물속에서 친구가 발목을 잡았는데 뿌리치고 나온 아이, 복도까지 나왔다가 뒤에 한손 잡고 있던 뒤 친구들이 싹 물에 떠내려간 아이. 물이 들어와 장이 떠다니며 어떤 아이는 거기에 머리가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바락바락 해서 나온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중략〕 화장실에 있는 걸 봤는데 나오라고 손 내밀어도 무섭다고 안 나오더래요. 〔중략〕 걔는 그 아이 생각이 난다고. 화장실만 가면 그 생각이 나고.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선아(가명)는 샤워를 하는데도 문열어놓고 하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해요. 뜨거운 물로 하면 습기가 차서 배에서 본 창이 생각난다고. 지금도 내가 있어도 문을 열어놓고 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 하더라구요. 연수원에서도 밤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계속되고 과연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맞는 건가 싶고. 이게 짧게 끝날 일이 아닌가보다.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평생 그런 거를 처음 본거라 〔희생자 발견〕 그때부터 맘이 불안해서 술을 몇 잔씩 했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잠을 못자고 그 후로는 상담을 많이 했어요. 진도군보건소, 나주병원, 해남에서도 왔고. 악몽, 눈만 감으면 악몽 꿈을 꾸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중략〕 미친놈처럼 전화하고 기억 못하고 악몽을 꾸고, 귀신, 무당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어제 오후 00병원 정신과에 다녀왔어요. 전에는 안산에서 한번 받았고 이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는 이쪽으로. 근데 아직도 똑같아요. 약을 먹어도 잘 못자고. 2일 3일씩 잠을 못자도 밤에 눈이 무거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귀에서 이명 소리 같은 거 나고. 옆에서 누가 뭔 소리만 해도 깨고. 아직도 그래요. 근데 또 잠 못자고 어렵사리 들었다가 깼는데 잘 자야 삼십분에서 한 시간. 그러다 아침 맞이하고. 〔중략〕 아는 사람도 사람이냐 귀신이냐고 할 정도로. (윤0옥, 생존 화물기사)

〈사례〉

〔주변관계〕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오래된 사람들이죠. 우리 아들 친구, 딸 친구들, 내가 아는 엄마들. 웃긴 건 같은 또래니까 못 만나죠. 그리고 유가족들은 실종자기 때문에 만나기가 그렇겠죠. 그리고 나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못 만나죠. 생존자는 또 못 만나죠. 고립되는 거 아세요, 고립? 〔중략〕 찾아와도 못 만나. 전화 딱 오면 아는 전화다 하면 못 받고, 모르는 전화는 기자일까 봐 못 받고. 아는 전화는 할 얘기 없어서 못 받고.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아픈 거고,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아픈 거예요. 근데 뭐에요? 정부가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돌리잖아요. 위에서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돌리잖아요.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될까요? 〔중략〕 실종자도 사람이고 싶고 실종자 부모도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실종자는 사람이 아니구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가족협의회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만나지도 않고. 거기서 뭐 총회도 나오고 뭐하고 하라는데. 내가 괜히 내 자신이, 아마 우리 실종자 가족들은 거의 그럴 거예요. 가족을 찾고 못 찾고, 거기에 좀 생각의 선이 있어요. 나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부인으로서의 〔중략〕 선생님 가족들하고는 많이 얘기를 나누고, 같은, 똑같은 저기니까, 〔중략〕 처음에는 학생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으니까 학생 위주로 많이 갔죠, 흐름이. 선생님들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심리치료도, 지금… 내가 심리치료를 받는다고 한들 치유가 되지도 않거니와, 내가 지금 심리치료 받아야 치유가 되겠어요? 남편을 찾지도 못했는데… 남편도 못 찾았는데 내가 심리치료 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겠냐고….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심리치료 할 사람이 있을까요? 현재 진행형인데… 20년 가까이 키운 부모가요, 실종자에서 유가족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떠나는 부모들을 축하한다고 보내는 게 그게 부모들이야. 이게 이상적이에요? 또라이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치유해요?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 심리 치료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데요? 없어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생존자 학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의사에 대해서 대개 불신이 많았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심리치유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해 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쓰〔실수〕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예민한 상태니까 상처로 남았고, 그러니까 심리치료든 의사든 간에 굉장히 불신이 많았어요.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사례〉

그때 당시에는 괴로웠어요. 못 구했다는 자멸감,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술을 끊었었는데 술로만 밤에. 밤에 잠이 안 오고 누우면 머릿속에 죽어간 애들이 떠올라서 술이 취해야 잠을 자고 아침에 눈뜨면 바다에 나가야 되고 잊혀질 만 하면 또 떠오르고, 아마 지금도 떠오르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뛰쳐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구했으면, 죽은 애들은 어쩌지. 〔중략〕 처음엔 불안 증상이 많았어요. 〔중략〕 초창기에는 장염까지 걸려서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②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지원방식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심리치료가 제공되는 방식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생존학생들의 경우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한 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빠듯한 치료일정에 피로감을 느꼈다. 또한 피해자 개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프로그램이 오히려 심리안정을 저해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생존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의사를 충분히 존중받기보다 통제와 일방적 통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례〉

단원고 아이들도 받아줬잖아요. 단원고 지하 주차장 쪽에 상담실이 생겼었대요. 근데 애들 말이, 말할 때마다 상담사가 바뀌어서 할 때 마다 설명해야 하고 별로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상담한 애들 중에 내 얘기 듣고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하지만 거의 공감 못해주는 사람들, 이게 너무 큰 아픔이니까 더 큰 배려와 공감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아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집에 문을 막 두드려요. 〔중략〕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문 두드리면서 상담 받으라는데, 누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미리 전화 연락을 해서 문자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솔직히 유가족이란 거 빼고 생판 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게 무례한 거죠.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중략〕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상담 받으세요, 하면 돈 맡긴 거 찾으러 온 것 마냥 〔중략〕 그걸 몇 번이나 거절했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심리검사가 힘들었고, 신체검사는 귀찮아서 도망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힘든 건 심리검사… 막 1000문항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게 1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거기서부터는 계속하고 그리고 같은 걸 연수원가서도 계속하고 학교에서도 계속하고 〔중략〕 병원에서는 3일에 한번, 연수원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서도 지금도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번 이상씩 받았어요. (박민규(가명), 생존학생)

〈사례〉

〔연수원 생활은〕 처음에는 되게 안 맞았어요. 너무 일정도 빡빡하고.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고가 나서 좋은 점을 얘기해보래요. 그래 갖고 그냥 애들 다… 에… 뭐… 싸웠던 친구랑 연락이 닿았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사실 사고가 나서 좋았던 점이 어디 있어요? (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처음엔 수업을 하나도 안하고 멘토링 수업, 방과 후 수업 같은 건데 그걸 했는데 해도 되고 안하는 친구는 들어가 쉬어도 되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빡빡했어요. 처음에는 치료만 하다가 나중엔 치료하고 멘토링 하고 밥 먹고, 치료하고 멘토링 하고 밥 먹고, 치료하고 멘토링 하고 자고 거의 이런 스케줄이었는데 나중에는 좀 풀어주고… 처음에는 불만이 좀 많았고 가면 갈수록 좀 괜찮아졌고. (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율성을 침범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애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중략〕 병원에 혈기 왕성한 애들을 몇 주 동안 넣어 놨으니까 1,2주 넣어 놨으니까. 〔중략〕 왜 입원해 있어야 되는지 설명도 못 듣고 우리가 입원해 있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중략〕 이런 큰 트라우마는, 청소년들 트라우마는 우리는 처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다들 미숙했던 거죠.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사례〉

〔연수원에서〕 학생들끼리 회의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었어요. 얘기해서 일정이 너무 빡빡한거 같다 얘기해서 일정이 좀 조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심리치료 좀 빠지고 교과목도 좀 하고... 저는 친한 친구들이 많아 살아나와서…그래도 저도 외출통제는 싫었어요. (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한도병원에서는 생존학생을 위한 별도의 치료프로그램은〕 없죠. 〔중략〕 고대 같은 경우는 외출이 전부 다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사〕선생님은 유리(가명)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있어주는 게 좋다 해서 하루에 한 이삼십 명씩 왔어요. 친구들이. 선배, 후배 전부 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리고 선생님 말씀은 외출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휠체어 태워서 친구들 만나게 했죠. (박0수, 생존학생 부모)

〈사례〉

3월 달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고 강제적이었어요… 충분한 동의 없이, 얘기 없이, 정한 규칙들을 몇 주 후부터 실시한다고 말하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동아리 활동도 외부 활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전면 금지시킨 거예요. 동아리 담당자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면담 신청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정말 꼭 필요한 거에 한해서만 외출이 되게끔. 볼링부, 포켓볼부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 볼링이랑 포켓볼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꼭 필요한데 아예 금지시켜 버리니까

당장 걔네들은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인 거예요. 그래 갖고 꼭 필요한 거에 한해서는 나가게끔 됐고.(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

(학교에)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 갖고. 갑자기 다 통제하고. (왜 그런 건지) 말도 안 해주시고 그냥 통보 식으로만 하니까 저희들은 그 통보하는 거에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너무 통제하는 거 같애요. 멘토링도 못하게 했잖아. 아름다운 배움이라고 단체에서 멘토링 해 주는데 그것도 막아버리고.[39] (박민규(가명), 생존학생)

③ 물리적 접근성 취약

진도와 제주도 지역 거주 피해자들은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거주지 인근의 치료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부재로 안산이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시설 위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심리치료의 불편함, 거부감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사례〉

안산 온마음치료센터처럼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기하는 제주도 차원의 집중치료병원이 필요하다. 생계 때문에 10월에 화물기사일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중도포기하고 다시 안산온마음치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주에 이런 곳이 없었기에 제주도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선 치료 후 근거자료 제출 등으로 제주도에 교통비 청구하는 방식〕 그나마 접근은 하였지만 이동과 숙박에 대한 장시간 피로로 상담 치료 후에는 또 상황이 비슷해지는 상황 반복이 있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39 "1년 가까이 생존 학생들과 희생자들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밴드, 요리, 마술, 원예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고원형 대표는 '최고의 전문성은 오래 같이 있어 주는 것,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편이 되어 주는 단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생존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편'이 되어 줄 한 사람, 세월호 생존자와 희생자 형제자매 돌보는 아름다운배움 고원형 대표 인터뷰」,『뉴스앤조이』, 2015.4.23.

〈사례〉

〔민간에서조차도 지원공간을 만들어도 멀리 있다, 생존자 가족이 갈 만한 데가 안산온마음치료센터 한 곳 밖에 없는데, 멀다〕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갈 만한 장소는 만들어주려고 생각 못하고 왜 센터가 생기면, 와동. 여기서 멀어요. 아이들이 가려면 불편하고, 멀어요. 왜 그런데만 생길까. 〔중략〕 저는 항상 말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하려 하지 말고, 공간만 만들어 달라. 프로그램 하면 벌써 뒤돌아 도망가요. 보려고 안 해요. 공간에서 친해지면, 뭐 해달라고 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갈만한 곳이 없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④ 한정된 기간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시행령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치료 지원기간 종료 후 회복되지 않거나 재발할 수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 지원기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항의한 피해자의 사례가 있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 않다.

〈사례〉

배·보상법에다가 5년으로 해놨어, 내가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따졌는데. 〔중략〕 왜 이걸 5년으로 묶어놨냐? 5년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5년 이후는 그냥 잊어버리겠다. 그 때가서 결정하면 된대. 〔중략〕 10년으로 해놓지. 5년만 지나면 정권 5년 동안만 정기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야. 〔중략〕 〔내가〕 따지니까 그 때가서 다시 결정하면 된대. 그게 쉽겠어? 5년 넘어가면 그 때 가면 또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동력이 다 떨어졌는데. 5년 지나서 다시 모입시다, 다시 한 번 합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나는 그게 아쉬워.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아이들 치료 문제도 5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 기본적으로 10년. 그런데 저희가 10년을 요구하면 해주겠냐고요, 안 해주죠. 시행령에도 의견은 다 냈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⑤ 치료에서 배제되는 피해자

참사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해자의 직계 가족과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삶의 터전이 참사지역이 된 후 생계가 막막해진 진도어민들은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심리치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례〉
〔앞으로도〕 심리치료는 기대도 안 해요. 그때도 팽목에 다 집중됐고 힘들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잘못 말이 나오면 공적이 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까봐. 우리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팽목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컸어요. 지금은 말을 하기에 늦었죠.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나보다도 더 힘든 유가족들도 있는데 내가 큰 걸 바라겠나. 약이라도, 치료가 되더라도 끝까지 해줬으면 좋았겠고 내가 활동력이 떨어지고 벌어서 살아야하는데, 어제도 잠을 못 잤어요. 뭔 말만 들으면 잠을 못 잤어요. 좋은 일 해놓고 일 못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약이 먼저고 두 번째는 생계가 상당히 힘들어요. 함께 있던 조카도 술로 인해 살고 있다. 나도 그 당시에는 술로 7개월 가까이 지냈는데 미친놈 같으니까 지금은 줄였죠.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3) 의료지원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고 적절한 의료지원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 회복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복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피해자들은 큰 충격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이므로 기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① 참사 이후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와 체력 손실, 그리고 직접적인 사고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에 직면했다. 참사 이후 수술과 같은 중대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피해자들도 발생했다. 특히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치료를 받아도 생업을 이어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과잉대응이나 혐오행동에 의한 직접적인 폭력으로 상해를 입기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과정 중 질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례〉

12월 달에 보름 입원했어요. 그 신우신염이라는데요? 몰랐어요. 신우신염인데 그니까 뭐 스트레트 받고, 체력이 떨어지고, 아무튼 그로 인해서 오는 게 신우신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심각, 그니까 조금 만 더 놔뒀으면, 수술? 까지도 갈 상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정을 취해야 되고, 체력 안 떨어지게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법원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그냥 이 몸이, 항상 이러고 이러고 머릿속이 멍하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근육이 다 굳어요. 그니깐 물리치료. 물리치료, 체육관에서 했던 그런 식… 그런 거랑. 또 기력이 떨어지니까 일단 식사 같은 것도 잘 많이 못 하니까 링겔 수액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항상 내가 이제, 이가, 사고 나고서는 이가 안 좋아져요. 잇몸이 솟고 하니까 치과치료라던가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처음으로 저기 한 거는 100일 보냈을 때. 그 때 우리 행사한 거 있잖아요. 그 때 저 맞았어요. 〔중략〕 그러면서 제가 이제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경찰 그 방패 이러면서 잡았어요. 그 애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손가락 펴요, 하나

씩 하나씩.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잡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펴요. 〔중략〕 그러면서 주저앉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는데, 〔중략〕 안 들여 보내줘서 앰뷸런스가 한 시간 만에 왔대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잠수병이라는 거는 무조건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거는 많이 할수록 축적되는 거예요. 〔중략〕 통증들이 다 있어도 내가 안 하면 다른 잠수사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무리했던 거죠. 〔중략〕 잠수병 포함해서 다른 데 아픈 것도. 쉬니까 증상이 막 나타나더라고.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이런 말 해도 되나… 시신들이 부패되면서 물이 혼탁해져요 방안에 고여 있고 막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닿으니까 피부가 약하니까 염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료를 받았고, 그담에 삼천포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으니까 어깨 골 괴사와, 부위가 많이 나온 거예요.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김0우, 민간잠수사)

〈사례〉

물속에서 무리하게 문을 잡아 뜯으려다가, 좁은 데서 일하다 보니까 훅, 하고 여기 디스크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6월 24일 날 긴급 후송돼 갖구 삼천포 병원에서 5일 뒤에 수술을 했어요. 지금도 목 디스크 수술 자국이 있는데, 급성이라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과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5일 정도 있다가 바로 수술을 했는데, 진단이 14주가 나오고, 차후 10주 이상은 잠수를 하면 안 된다는, 총 이십 몇 주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잠수를 못한 시간이. (이0호, 민간잠수사)

② 획일적인 의료지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단순히 기존 의료서비스를 사용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의료지원은 다양한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의료지원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원체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의 필요와 적절히 연결되는 특화된 서비스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

〔진도에서〕 한국병원에 다시 갔죠. 아이들 데리고 〔안산으로〕 가도 되냐고 하니까 원무과직원이 병원비를 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략〕 아직 국가 배·보상이 없으니, 아이들은 해운조합에서 치료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부모나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공단인가? 거기로 알고 있어요. 〔중략〕 전에는 그냥 12월31일까지는 약까지도 됐었어요. 아픈 정도가 다 다른데. 부모님들도. 그런데 약은 안 되고. 본인이 지어 먹어야 돼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앞으로 치료도 마찬가지에요. 생존자 아이들 치료 어떻게 할 거냐 그 정답은 한 명 한명이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주는 게 사회의 역할인 거죠. 일괄적으로 몇 년? 생존자 아이들 5년이면 끝나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애는 평생을 받아야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지금도 필요 없는 애가 있고, 그 한명 한명한테 맞게 가야 되는 거고 교육적인 거나 보상이나 그런 마찬가지고. 개별적으로 맞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사례〉

초기 입원 시, 병실 확보가 안 된 채 지원을 받아, 초기부터 입원을 포기하고 귀가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일반 환자들과 섞여서 입원치료를 받다보니, 정신적, 심리적 고충에 대한 안정을 기하는데 부족함이 컸다. 악몽으로 소리를 지르며 수면을 취하거나, 불면에 따른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했는데, 일반 환자들과 섞여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 편하지 않았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소견서 하나도 제대로 안 떼어주고. 다 무관심하고.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해주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귀찮은 거예요. 정신적인 지원만 가능하다고 하고, 골절은 안 된다고. (양0환, 희생자 가족)

③ 의료지원의 부족한 접근성

피조사자들의 상당수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병원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지정병원에서 치료 받는 경우 시일이 오래 걸려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용을 자비로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례〉

〔의료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내과를 다니거나 하는 부모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대병원에 가면, 정신의학과 상담하고 이렇게 아픕니다, 하면 연결을 해주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아이들이 수업 중에 갈 수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잖아요. 개인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중략〕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모든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체계가 복잡하더라고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지정병원은〕 고대 하나밖에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한도병원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갔잖습니까. 근데 신경을 안 써요. 담당선생님이 정형외과고요. 처음에 올라올 때. 그 다음에 계속 바뀌었어요. 유리(가명) 같은 경우에는. 척추가 안 좋아서 척추 그 쪽으로 또 주치의 바뀌시고. 유리(가명)가 총 9개, 9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박0수, 생존학생 부모)

〈사례〉

저는 그 기록만 있으면 보상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 며칠 전에 보상 설명회를 갔는데 병원을 다 지정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료 받았던 건 다 소용이 없고 서울에 있는 병원 열네 개를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 골라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시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가고… (김0임, 생존자)

〈사례 〉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자다가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고, 한참 잠도 못 자고. 마을에서 나까지 4명인가 5명인가 병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누가 거 까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일 해야 되는데. 〔오가는 데만 1박 2일이 소요되는데, 일당으로 지급되는 수색작업과 공공근로를 포기해야하니까〕 그래서 나 포함해서 아무도 치료 안 받았어요. (최종호(가명), 진도어민)

〈사례〉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 받을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요,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가 언딘 오고, 뭐 이00씨(희생 민간잠수사) 사망 사고 나기 전에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군의관이라고 그 저 해군 배에 우리하고 뭐 몇 백 미터씩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있지. 우리 바지 위에는, 작업 바지 위에는 의사라는 '의'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0영, 민간잠수사)

④ 책임회피 및 보수적인 산출방식

정부는 참사 이후 민간잠수사 등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다 딴 소리만 해요. 벌써 다 잊혀졌어요.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복지부 부장, 과장들이 정말 잘해줬는데. 지금은 물어봐도 몰라요. 발뺌하고. 1년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고. (양0환, 희생자 가족)

〈사례〉

한 달, 한두 달 정도. 기브스가 안 된데요. 갈비뼈는. 안되는데 그 교정하는 저기 있어요. 그거를 개인이 돈을 주고 맞춰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 36만 원 정도 들었는데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조가 안 된대요. (김0임, 생존자)

〈사례〉

말 바꾸기 하는데, 해경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 잠수사들 일할 때는 이것도 해주고 다 해 줄 것 같이 막 〔중략〕 다 하고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사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등한시 하는 정부가 진짜… 좀… 아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0호, 민간잠수사)

〈사례〉

골괴사는 수술 밖에는 없어. 그건 치료가 완전히 100% 되지도 않고… 골괴사 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나와요 영구 장애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보류를 시켜놨어요.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잠수사들이 잠수하다가 골 괴사라든가, 병명들이 자꾸만…나오니까 거기서 산재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 해서 나온 게 나중에 수난 보호법을 적용해서 해 주겠다, 지금 몇 명은 수술도 못하고 있어요. 일하러도 못 가고. 여기서 결정이 나서 의사 결정이 나야만 다른 현장에 가서도 일을 하지….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그게 수술 하고도 완치 기간이, 100% 완치라는 건 없지만, 활동할 수 있고 다시 다이빙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이에요. 공백 기간이 또 있어야 돼. 지금 수술해도 8개월 후에나 다시 다이빙, 그러니까 산업에 뛰어 들어 갈 수 있는데, 지금 미뤄 온 게 지금 8개월이에요. 계속 보류를 하고 있어요. (김0홍, 민간잠수사)

⑤ 차별적인 의료지원 지급범위와 금액

의료지원 체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군 별로 치료비 지원에 대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원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일부만 지원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례〉

그러니까 제가 팔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소에 몇 번 주사 맞았는데 그때는 무료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스스로 돈 내야 돼요. 지난번에 00병원에 갔었는데 돈 꽤 들었어요. 〔중략〕 의료보험 없으니까. 지금까지 의료보험 없잖아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유가족이라고 하니까 유가족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거다, 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적용하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내가 왜 이걸 〔1인실 비용〕 내야 하냐 원무과는 상급 병실료는 자동차보험이든 의료보험이든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고 이제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난 1인실을 써야 하는 사람인데, 정신과에서도 1인실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한대요. (최0영, 생존화물기사)

〈사례〉

담당 교수님한테 물어 봤어요. 저는 왜 치료를 안 해주냐고 기본적인 주사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주고 피부 마사지라든가 피부 재활 프로그램은 저한테 가동을 안 시켜주냐고 따지니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략〕 비급여 부분이 보험회사하고 원무과하고 아마 말을 맞췄는데 한 달에 300만원 넘지 않게 치료를 해라 그 얘길 했다고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0영, 생존 화물기사)

〈사례〉

1월 이후부터는 개인 부담으로 약을 지어 먹고 있어요. 진도보건소에서 배·보상 발표 이후 어떻게 지내시냐고 연락이 한번 왔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저기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일반 약〔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품목을 자비로〕을 먹고 치료하고 있어요.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군에서 해경에서 그리고 기자들이 밤낮없이 전화는 하지 헬기가 떠서 방에서도 전화통화는 어렵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계속 머리가 아파 뭍에 나가 정밀검사도 많은 돈 들여 했는데 그것도 다 자비로 했습니다. (김정민(가명), 진도어민)

〈사례〉

진찰을 받으니까 메니에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략〕 스트레스 받고 해서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소견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백제 병원에서 서울의 어디다 전화를 하니까 민간잠수사라고 그러니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있다 다시 가니까 안 된대요. 원무과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잠수를 않고 위에서 잠수 감독을 했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의료 지원이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요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 여러 차례 나오고 나서… 재개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이 안 다뤘다면 과연 재개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한0명, 민간잠수사)

〈사례〉

의료비 지원 중단됐다가 재개하면서 일부 항목은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비급여라든지 약 부분… 빠지고… 전에는 다 포함됐던 것들이 지금은 빠져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보험에서도 빠진 것이 있고 비급여 치료 받은 부분에서 빠진 것이 있고, 약도 어떤 것은 제외되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0홍, 민간잠수사)

(4) 공동체 회복에 대한 권리

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속한 공동체는 크게 흔들렸다. 심한 충격을 겪은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는 줄고 서먹해졌다. 피해자들은 이웃과 친지들의 공감 부족에 서운함을 느끼고 기존 관계

속의 상실을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따라서 기존 관계는 깨지고 피해자들은 고립되어갔다. 언론과 SNS 상 유언비어들이 한 몫 했을 것이라 피조사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웃과 친지들과 관계를 단절한 경우도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처한 조건에 따라 피해자 간 갈등과 반목이 생기기도 했다. 여론은 분열되고 지역공동체는 이에 따라 나뉘기도 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왔다. 공동체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희생자, 생존자, 단원고 교사 부모,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진도어민 모두에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참사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절박한 피해자들은 공동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오롯이 피해자들 몫인 양 여겨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정부는 근거 없는 소문의 유포자가 되기도 했고, 낭설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행태를 통해 확산되었다. 참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입었고, 이를 조정하고 회복할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① 정부와 언론의 공동체 갈등 조장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는 재난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불행, 생과 사의 고비에서 힘겹게 살아나온 공포,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막대한 직접적 피해에 더해 참사 처리를 위해 구조, 수습과정에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포함해 실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나, 구조, 수색활동 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횡행하였고, 이는 무책임한 정부와 언론에 의해 확산되었다. 왜곡된 시선과 근거 없는 소문은 피해자들을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도록 해 공동체 갈등과 와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례〉

이제 특히 안 좋은 게 이제 그 내부에서 우리를 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청와대 이 수석인가, 그 분이 민간잠수사들 시신 한 구 수습하는데 뭐 500만원[40]이라든가 〔그렇죠〕 그게 떴잖아요. 야, 그런 거 들었을 때는 그냥 딱 때려치우고 그냥 나오고 싶더라구요. (공0영 민간잠수사)

40 「세월호 참사 : 청와대 대변인 '잠수사 일당' 발언에 잠수사 반발」,『연합뉴스』, 2014.5.25.

〈사례〉

가장 화가 났던 게, 니네 거기서 그렇게 돈 많이 벌었대매, 이 소리. 아 그래 가지고 같이 술 한 잔 먹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그 민정 수석 말 한 마디에 모든 그걸 봤던 사람들은 니들 한 구에 오백씩 받았다, 라고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 거야.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사람들은 기사의 헤드라인만 읽고 상황을 파악해. 그래서 이웃에게 조심들 해라, 자꾸 이야기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냐. 방송 보고 쓸 데 없는 이야길 하지 말고, MBC, 조선방송을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 도와주지는 않아도 되니까 욕만 하지 말아라. (어0태, 러시아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여동생이 00지역이 시댁인데, 작년 추석 때 00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네 오빠는 보상금 10억 받았다며?" 여동생은 잘 알잖아요. 여동생이랑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자주 만나고 그랬으니까. 누가 그러냐고 물으니까, 할머니들이 돈 10억 다 받고 돈 더 받으려고 저 지랄 떤다고 〔중략〕 4촌, 6촌들 전화 많이 왔지. 많이 왔었어요, 당시에. 많이 와서 물어봐요. 보상금 얼마 받았냐고. 그래서 4촌, 6촌하고 안 만났어요. 통화도 안 하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작년 9~10월 달 이때 MBC에서 보도가 올라와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나 빵가게, 과일가게나, 식당이나… 그 동네 12년 살았으니까. 나를 보는 식당 주인이나, 과일가게 주인이나 나를 보고 당시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보상금 얼마 받았냐고. 그게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하냐고 하니까 보상금 다 나왔다는데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 사람 자체를 안 만나고 싶더라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제가 유가족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가끔 들으면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돈 다 받고 저런다고. 돈을 얼마나 더 받으려고 저런다는 둥. 다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자리가 술자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실수를 하다보면 싸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유가족이 싸웠네, 어쨌네. 갑질 논란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동호회 등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② 정부 정책 대응에 따라 피해자군별로 나타나는 갈등

세월호 참사는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자군이 다양하게 나타난 대규모 참사였다. 처리 과정이 부실, 장기화되면서 추가적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유가족과 장기 미수습자 가족, 희생자와 생존자, 단원고와 비단원고, 교사와 학생, 승객과 (비선박직) 승무원 등 여러 형태의 구별이 발생했다. 민간잠수사, 진도어민, 자원봉사자 등 참사의 일차적 피해자와 구분되는 피해자군도 광범위하다. 피해자들은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지만 참사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 간 구분이 분명해지고 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생겨 났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분열을 조장하는 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례〉

너무 화가 나는 게 사람들에게 제발 진실 좀, 제대로 된 진실 좀. 그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말하는 것만 그렇게 듣고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참 그냥 시행령이 뭔지, 특별법이 뭐였는지, 배·보상 기준이 뭔지 몰라요.[7]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아픈 거고,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아픈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부가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돌리잖아요. 위에서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돌리잖아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갈등이 많이 생겼죠. 이제 수색 중단을 요구하는 쪽하고 수색 계속해야 된다는 쪽하고 갈등이 있었죠.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사례〉

긴급자금 1%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서거차 동거차 맹골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서 나중에는 돈이 부족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았거나 뒤늦게 받았죠… 정부에서 동네에 와서 조사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만 좋은 일 한 거죠. 〔중략〕 이제 보상금 나오면 싸울 집도 몇 집 있겠죠. '일 해줬으니까 돈 좀 주쇼' 하면 '돈 이거 쪼금 나왔는데' 그러면 동네 쌈 날 수밖에 없어요.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우리가 세상을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이렇게 같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같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서 그냥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어디서요?〕 안산 분향소에서. 뭐 이게 6.25 전쟁도 아니고. 어. 그런데 그러니. 6.25 참전한 사람들이 와서 막 행패 부릴 때는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조0상, 자원봉사자)

〈사례〉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자식이잖아요. 선생도 딸이고 학생도 딸이고. 똑같은 자식이야 따지고 보면. 직업상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들 안 구했다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 있는데 선생님 가족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일반 저희 〔생존자〕 부모님들은 아직도 못 보세요. 저 분들을. 죄진 거,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스스로도 아이가 살아왔으니까 못 보는 거죠. 저 분들을. 그런데 집에 가면 뒷집에 살았던 분들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먹던 사람들이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박0수, 생존학생 부모)

③ 사회적 관계 회복의 어려움

피해자에 대한 주변 시선은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웃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등 주위 눈치를 본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피해 입은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조심하거나 위로의 말이 상처를 깊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이전 사회관계로 돌아가기 어려워했다. 회사를 떠나고 학교를 떠나고 단골가게를 피하게 되고 심지어 지역을 떠나 이사를 가기도 했다.

〈사례〉

가장 힘든 거, 가까운 측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 얘기하고 그러는 거 제일 힘들어요. 〔중략〕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같이 살지만 힘들어요, 얼굴 보는 자체가. 진짜 힘들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혼자 있고 싶다, 라는 걸 많이. 그냥 조용히 (고O희, 단원고 학생 어머니)

〈사례〉

솔직히 제가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별일 없으면 집에 있고 갑자기 당일 날 부르거나 전날 연락하면 미리 연락했어야지 싫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고 딱 터지고 나서 집에 못 있겠어요. 집에 동생이 너무 많아서 집에 못 있겠어요. (최O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맨날 엄마가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엄마가 음식해주시는 게 손에 꼽아요. 엄청 손에 꼽고 항상 집안일도 사람이 많으니까 나눠서 했는데 그것도 막내 동생이랑 저랑 거의 했었고. 모든 게 다 변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웃기라도 하고 일요일이면 다 같이 개콘 보고 소소한 일상이었는데. 동생이랑 학교 다닐 때는 하교 길에 같이 걸어오고 정말 소소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일상은 사라져버렸어요. (박O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사회관계가 되게 조심스럽고 너무 깊이 알기에는 골치 아파 보이고, 주위 사람도

회사 사람도 다 그런 거 같아요. 건드리지 않기에는 이것이 나의 깊숙한 일상이고 하니까 건들이자 하니 되게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려는 주위분위기라 웬만하면 저는 친구들이랑도 잘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입을 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동생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웬만하면 이야기 안하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제가 00(희생자)랑 같이 성당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서 00(희생자)를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00(희생자)를 잊고 싶지 않아서 성당을 나갔는데 제가 일부러 웃고 다녔어요. 웃을 기분도 아니고 신경안정제 계속 먹고 몰래 다닐 정도로 힘든데 웃으면서 씩씩하게 이겨내는 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고 다녔는데, '어 너 웃으니까 괜찮아 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아이가 있는 러시아 친구가 전화 와서 "모두 잊으라"고 말했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했어. "내가 돈을 모두 줄 터이니 너네 식구와 우리 식구와 바꾸자고. (쿠0000가,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동생이〕 누나 흔적 찾기를 한다고… 잘 가던 빵집 같은데 다니더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맨날 울고 다녔죠. 분향소 같이 가서 울기도 하고 납골당 가서 울기도 하고 정신이 없었죠. 그냥 집이 완전히… 심한 말을 하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 밥도 안 해먹고 맨날 집이 이상하게 돼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웃음도 없고 TV도 안 틀어놓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전에 우리 유가족들끼리 그런 말 많이 했다, 엄마들만 힘들 걸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아버지도 힘들다고, 남자들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처음에는 같이 울고불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의연해졌는데,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돌아다니니까 아픔이 없는 줄로 그리 생각하더라고. 엄마들이 막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도 아프다고, 우리도 더 슬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예전의 관계들은 거의 다 끊어졌다고 봐야죠. 나는 나대로 아는 척하면 싫은 거고. 시장도 요즘은 가끔 한 번씩 가는데 그 전에는 전에 안 가던 멀리 있는 시장에 갔었어요. 20년 넘게 거기서 장사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받기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다 끝났지. 보상받고. 애를 빨리 잊어버리고. 살길 찾아야지. 장사해야지. 얘기하는데 그게 더 속상해.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딸내미가 울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말하는데 아빠 때문에 진짜 집에 와서 숨소리 한번 못 내고 있다고. 나도 얘기 들으니까 다시 가슴 한쪽이 메어 오는 거 같아. (윤0옥, 생존 화물기사)

④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공동체 갈등과 분열의 상흔을 간직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정부 대응이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방관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 희생교사 가족은 희생학생 가족을 만나 서로 슬픔을 나누었다. 생존학생은 희생학생 가족을 만나서 힘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함께,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알려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사례〉
우리 반이 26명이 희생됐는데 나는 22군데 장례식을 돌았어요. 우리 반 학생들 빈소를. 부모들 잡고… 그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 처음 보니까. 처음에 인사하고 누구냐 그러셔서 내가 OO선생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빈소 갈 때 나는

사과하러 갔지. 미안합니다, 당신 딸을 제대로 우리 딸이 인솔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러 가면 멱살 잡고 그럴 줄 알았어요. 욕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만 마주보고 인사를 했더니만 그렇게 끌어안고 울더라고.[8]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연락드려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더 잘해드려야지 제가 봄이 몫까지 한솔이 몫까지 더 잘 해드리고 걔네들 몫까지 내가 딸 노릇해야지 이 생각이 더 큰 거 같아요. (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네. 00(희생자)이 어머니랑 연락해요.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긴 했는데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잘 애쓰는 거죠. (박민규(가명), 생존학생)

〈사례〉

저번 주에 뭔 생각을 했냐면 병원 내에서 내가 진상규명이라든가 배 인양에 대한 서명운동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서명지하고 다 받아 왔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갖고 다니면서 병원 돌아다니면서 받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내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0영, 생존 화물기사)

〈사례〉

아이들이 죽은 친구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판에 가는 것 같아요. 국회 걸어가는 것〔도보행진〕도 아이들이 하자 했어요. 어른들도 걷기 힘들고 그냥 분향소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아이들이 국회에 가야 되겠다 해서 가보자 하게 된 거죠. 학교와 교육청은 안 좋아했었죠.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이 커져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랬어요. 〔중략〕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처음에는요, 진상규명은 유가족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히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애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싹 바뀌었어요. 진상규명이 돼야 또 다시 이런 참사는 없다. (중략) 우리애도 친구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궁금해 하죠. 아이하고 얘길 하다보면, 내 친구들은 왜 죽었을까,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해요.[41]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제주시민단체가 집회, 서명을 하고 있다고 전해주어 알게 되었고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도 하였다. 동료들도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들고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전하였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43명의 일반인 가족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중략〕 가장을 잃은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우리의 목소리, 권리를 한 뜻으로 외치자. 그래서 인천시에 조율을 해서. 〔중략〕 일반인 정부 합동분향소로 만들어라 해서 그 쪽에 영정을 한 분 한 분 모시게 된 거죠. 49재였죠. 그 때 정부합동 분향소로 되면서 안산보다는 작지만 바람막이 된 가건물 형태로 된 분향소가 지어졌던 거죠. 7, 8개월 정도 거기 있었죠.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제가 여기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 가 있었던 것 중에는 내 스스로가 치료가 돼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만나서 아침에 가서 저녁 11시, 12시 술 먹는 날은 1시, 2시 거기 모여서. 그냥 위안이 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거기 가게 되더라고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41 "저희가 원하는 건 억울하게 죽은 친구들의 한을 풀고자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배가 기울어졌고 또 왜 즉시 구조하지 않았으며 왜 유병언을 바로잡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친구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국회의원님들... 사람답게 살자' 생존학생들이 쓴 37통 편지 전문」,『오마이뉴스』, 2014.7.17.
"이들도 유가족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씨는 '살아남은 75명의 상처를 낫게 하려면 선체를 인양해 억울하게 죽어간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 「힘들게 살아나온 아이들, 아직도 웃다 울다 해요」,『경향신문』, 2015.4.9.

〈사례〉

서로 위안이 됐어요. 심리치료 받은 가족들이 와서 약만 쥐어준다 그러니까. 기피하게 된 거죠. 끼리끼리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형, 아우, 누나, 동생 하면서 서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심리치료〕 그 쪽까지는 나한테는 사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2) 애도와 기억의 권리

참사의 희생자는 애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참사와 관련된 피해자들은 참사를 기억하고 애도할 권리를 갖는다. 참사는 일차적 피해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대를 초월해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형사고, 재난, 참사 등은 사회에 마련된 제도의 실패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긴밀히 관계된다. 즉,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의 권리가 필수적이다.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동체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는 참사의 기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국가가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산하에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를 마련해 그 아래 추모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세월호진상규명법> 상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 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 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전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정부가 주도하는 추모기념관이나 추모비 건립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시민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왔다. 학창시절 가까운 친구들을 잃은 생존학생들이 죽은 친구의 이름표를 간직하고 희생학생들의 교실을 기억의 공간으로서 지키고, 희생학생의 생일파티에 참여하거나, SNS 등을 통해 친구와의 추억을 곱씹

는 등의 행동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집단적 기억 형성과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들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안산시 시민기록위원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서울시 추모기록 자원봉사단> 등을 자발적으로 구성하였고, 이들의 활동이 모여 4.16가족협의회 소속 4.16 기억저장소가 만들어졌다. 4.16 기억저장소에서는 수집된 기록을 온전히 보존하며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록관과 전시실, 유가족과 이웃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희생자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애도와 기억에 대한 권리는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생존자들의 경우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과 '살아 왔으면 됐지'하는 사회적 시선 속에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슬픔조차 드러내기 쉽지 않았다. 또한 유가족들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과정이나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체장사꾼,[42] 종북세력, 거지근성[43], 선동꾼[44] 등과 같은 혐오표현을 마주해야 했다. 이러한 혐오의 표출은 일부 정치인의 입을 통해 대중에게 확산되어 무분별한 혐오행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피해자에 대한 혐오는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45]이나, 세월호 참사 추모리본 철거 시도[46] 등의 구체적인 행동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참사에 대한 기억을 왜곡시킴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시킨다. 이런 인식은 '놀러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말처럼 참사를 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거나, 참사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효과를 가져 온다.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가 연대에 기초하여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참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만들고 전파하는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시,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사례〉

지금 실종자들은 제일 슬픈 게,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때나 명절 때나 구정 때나

42 「양평군의원, 세월호 유족에게 "시체장사꾼" 막말 논란」, 『오마이뉴스』, 2014.9.26.
43 「세월호 유가족 비하 SNS 파문의 약사회 부회장...해임 이뤄질까?」, 『메디컬투데이』, 2015.5.20.
44 「권은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내 '선동꾼' 주장 파문」, 『시사포커스』, 2014.4.22.
45 「일베 등 '보수 청년'들,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서 '폭식 투쟁'」, 『뉴시스』, 2014.9.6.
46 「'서북청년단 재건' 새기고 세월호 추모리본 철거 시도」, 『한국일보』, 2014.9.29.

어디 가서, 찾아가서 뭐 제사도 못 지내고… 가서 뭐 얘기라도 할 그런 납골당이나 뭐 그런 데도 없잖아요. 지금 찾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런 효원이나 하늘공원이나 그런 데 가서 얘기라도 하고, 자기 자식이나 남편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고 그러는데… 우리는 찾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실종자에서 유가족이 되는 게 그게 소원이죠. 그게 실종자하고 유가족하고의 제일 크나큰… 오죽하면 실종자에서 벗어나서 유가족이 되고픈 심정인지…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지금은 내가 막 나서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고. 처음과 지금은 그런 차이가 있고. 처음에는 기억하기도 얘기하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나서 마음이 좀 여유를 갖게 되더라구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그런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세월이 점점 지나고, 세월호 자체가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요. (윤0옥, 생존 화물기사)

〈사례〉

가장 그랬던 것은, 죽은 자도 인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중략〕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고 애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너무 미안할 판에, 그런 것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거 같고.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중략〕 우리 아이는, 내 동생은 이런 일을 겪었지만 당신 아이는, 당신 손자는, 우리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런 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으면 안 된다 진상규명이 돼서 이걸 토대로 안전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정말 일상적인 게 되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진정한 애도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애도고. 눈물을 흘렸다고 애도고. 애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 같아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일상 속에 있는 세월호. 학교만 해도 옳지 않은 일에 나서면 나대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 분위기 자체도 일상 속의 세월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조리한 일들, 그런 분위기들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세월호라고 생각하고.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지금도 터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교육적인 측면, 분위기적인, 근본적인 문제부터 파고들어서, 개혁 변화,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거 같아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이게 다 부조리함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부조리가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이 단 한명이라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나라가 이렇게 부조리한 나라였구나 이런 나라였구나 〔중략〕 16일 날 당장 꽃 하나 주러갔는데 경찰들이 뭔지 무서웠다 어린 학생들 경우. 나중에 그게 이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고쳐야 할 점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해서 바뀌 갔으면 좋겠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아이들이 죽은 친구들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재판에 가는 것 같아요. 〔중략〕 국회 걸어가는 것〔도보행진〕ㅈ도 아이들이 하자 했어요. 〔중략〕 어른들에게 대한 불신이 길을 걸으며 응원도 받고 하면서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자기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고 같이 걸어주는 분들, 노래도 같이 해주는 분들이 오고 하니 아이들도 밝아지고. 〔중략〕 지금은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합창도 하고 아이들 위해 리본도 만들고 하고 그러니 생기가 좀 있어요. 〔중략〕 꼭 공부가 전부는 아니니까.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참사로 생존자는 사망희생자보다 소수이고, 일반인은 더 소수여서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 크고 내가 애도권, 추모권이 있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에는 누가 나를 차로 부딪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죽거나 다쳐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이렇게 같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같이 즐거우면 같이 즐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서 그냥 막 의자를 집어 던지고. 〔어디서요?〕 안산 분향소에서. 뭐 이게 6.25 전쟁도 아니고. 어. 그런데 그러니. 6.25 참전한 사람들이 와서 막 행패 부릴 때는 조금 좀 안타까웠습니다. 나라 잃을 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것도 하나의 슬픔인데. 슬픔의 꽃도 피우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이. 그럴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조0상, 자원봉사자)

Ⅲ.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와 시민의 책임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세월호 참사는 단지 한 명의 개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이 장에서는 국가와 기업, 언론의 의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는 시민들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려고 한다.

우선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난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예방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지금도 없다. 오히려 정부는 참사 피해자들의 가장 우선적 권리인 진실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처리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했다. 또한 정부는 참사 이후의 지원 과정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 자세로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 상실로까지 이어졌다.

기업은 세월호의 소유와 운영을 맡았다는 점에서 참사의 책임자다. 기업은 1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수많은 노동자, 소비자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운영되므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를 소유, 운영했던 청해진 해운은 배에 탄 승객 및 승무원들의 안전은 망각한 채 이윤만을 위해 배를 운영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이미 20년 넘게 운행된 배를 들여오면서 무리하게 배를 증축했고, 적정량의 2배가 넘는 짐을 실었다. 배에 타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교육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언론은 진실 보도를 제1 원칙으로 한다. 언론은 참사 원인과 대책 등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언론은 계속되는 왜곡보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세월호 참사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죽음'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시켰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양한 피해자들 존재를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

시민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참사의 목격자로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 시민들은 여러 영역에서 참사의 아픔을 나누고자 했고, 무책임한 정부에 함께 분노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해결 과정이 난항을 겪고 시일이 길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유가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언론의 왜곡 보도 등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공동체로부터 배제 등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는 특정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의 가치를 망각한 이 사회의 구조와 정부, 기업, 언론 등 여러 집단이 빚은 참극이다.

1. 국가의 의무

세월호 참사와 이후 처리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 생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요구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 물질적 배상과 정신적 위로를 받을 시민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는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선박 연한을 연장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정부는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참사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장에 대한 재판 등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참사를 단순한 사고로 축소하고 <세월호진상규명법>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등을 제정하는 전 과정에서 진상규명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정부는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지원 과정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피해자는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므로 피해자 지원은 그들의 입장에서 요구를 수렴하여 계획이 세워졌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원 과정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은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지원마저 일방적으로 5년의 기간을 못 박았다. 이 외에도 정부의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의 권한만을 내세워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 참사 당사자들과 연대한

사람들에게도 여러 제약을 가했다. 한 예로, 참사 이후 두 명의 민간잠수사가 사망했지만 실제 현장 책임자이던 해경은 도리어 죽음의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기는 뻔뻔함마저 보였다.

1) 진상규명의 의무

진상규명은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당연한 의무일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및 생존자의 치유에 있어서도 필수 전제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 등 참사에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참사 처리 등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참여는 진실규명, 재판,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 등의 전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또한 미수습자 가족은 미수습자의 행방을 알 때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참사에 대한 포괄적인 제반 조치가 착수·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종류의 구제와 지원이 피해자에게 당장 제공돼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그가 왜 죽었는지조차 밝혀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애도는 불가능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참사를 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의문투성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의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되어버린 현실은 참사 이후 피해 가족이 어떠한 결정권과 참여권도 보장받지 못한 현실의 반증이었다.

〈사례〉
이제는 그만, 진실을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사고가 이렇게 났고, 그렇게 되었다. 뭔가 하나 있을 때 유가족한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이제는 진짜 진실을 밝히려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는 뭐 안 바라잖아요. 지금. 아이가 어떻게 죽었고, 왜 구조를 안했고, 그거잖아요. 그거만 말해 달라는 거예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진상규명은 유가족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은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

는지 밝히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애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싹 바뀌었어요. 진상규명이 돼야 또 다시 이런 참사는 없다. 잠수함이 와서 부딪혔다 뭐가 폭발했다 등등 무수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진상규명을 할까, 안 할 것이다. 인양도 안 할 거고. 그런 것에 부딪혔으면 인양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가족, 유가족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세월호가 잘 마무리가 돼서, 그래야지만, 길이길이 후손들한테도 역사에도 남고, 세월호 인양을 해서 큰 교훈으로서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얼른 선체 인양을 해서 가족들 좀 찾고 또 추모공원 같은 것도 다 설립을 해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제일 크나큰 아픔인 거 같아요. 〔중략〕 뭐 대책회의나 4.16 여기는 똑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은 한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그분들도 인양을 해야지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는, 우리 실종자는 가족을 찾을 수 있고 남편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죠.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제 동생은 많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도 어른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죄책감 가지고 사세요! 이게 아니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내 동생은 이런 일을 겪었지만 당신 아이는 당신 손자는 우리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런 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으면 안 된다, 진상규명이 돼서 이걸 토대로 안전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정말 일상적인 게 되는 날까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진정한 애도거든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저희만 위하는 일이라 생각지 않거든요. 삼풍 〔백화점 사고〕 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매뉴얼도 없고 바꾼 것이 없으니 계속

똑같은 거지요. 지원도 20년전 그대로고. 지금은 좀 바꿔놔야지만 앞으로는 달라지죠. 그러니 다른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처음에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막 그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중략〕 나도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딱 끊었어요. 왜? 그게 내 딸을 찾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구. 왜냐면 이렇네, 저렇네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왜 그랬어, 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내 딸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따지질 못하잖아요. 우리 피켓 한 번 보세요. 진실규명 하나도 못 넣어요. 왜? 그러다 안 꺼내준다고 할까봐. 피켓 한 번 보세요. 바닷속에 내 딸이 있습니다, 그 문구만 쓰고 있잖아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2) 피해 지원의 의무

사고 발생 초기 진도에 머물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및 희생자 수습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었다. 정부는 피해 가족들을 위한 대책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빠르게 대처하지도 못했다. 때문에 사고 초기의 몇 가지 지원 또한 피해자 가족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거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의 방문에 맞춰 이루어졌다.

또한 참사 이후에도 정부의 행정지원은 일방적이고 하향식이었으며 전혀 체계적이지 않았다. 때문에 지원은 피해자가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규모나 내용이 달라졌다. 지원의 내용도 피해자의 필요보다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으로만 한정되었다.

(1) 일방적, 하향식 지원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조사하거나 소통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참사 직후 피해자 필요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향식 지원의 방식[47]을 보여주는 단

47 윤건 · 박정호정지범, 「세월호 사건에서의 정부 대응의 문제와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 한국행정연구원, 2014-05호.

적인 예가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 이후 구호물품 변화였다. 장례 과정에서도 정부 지원 역할은 실종되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정부 태도는 지원이 아니라 감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피해자 심리 지원 경우도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기존 방식으로 진행돼 심리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오히려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가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물품 지원 같은 거나 그런 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니까 좀 열악했던 구호물품 같은데, 좀 너무 좋게 바뀌었다는 거죠. 구호 물품 같은 게. 〔이불이나 뭐 그런〕 네네. 그런 자체부터 완전히. 〔중략〕 저기 앞이니까 저기 가서 한 마디만 해주고 가라고. 솔직히 체육관 길잖아요, 오셔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1/3지점, 거의 1/4 지점에서 턴하고 가려고 했어요. 앞에서 가족 몇 명 만나보고. 그거 아니잖아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00연구소에서 〔연수원에 있을 때〕 처음부터 들어왔어요. 자기들 말로는 4개월 프로그램이래요. 그걸 열흘 동안 다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나 부모한테나. 〔중략〕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연구대상, 마루타인 거예요. 그 사람들 논문 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중략〕 딱 잡아서 상담할 시간이 되면 하고.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상담이냐고요. 〔중략〕 무슨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겠다고 와가지고 후벼 파 놓기만 하고 자기들은 열흘 동안 딱 하고 가버리니까. (이0선, 생존학생 부모)

(2) 턱없이 부족한 지원

정부의 행정 지원 내용은 충분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필요한 때에 지원되지도 않았다. 참사 이후 생존학생 부모들은 필요한 지원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충당했다. 긴급 생계비 경우도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급방식도 모욕적이었다. 생계비를 구걸하듯 받아야 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 우선 원칙도 없었고, 현실적 지원도 하지 못했다.

〈사례〉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2주정도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교육청에서 쫙 나와서 대한적십자사에서 물품을 준 것 같아요. 한 열흘 정도는 풍족했죠. 어느날 첫 외출을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싹 빠지고 없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물부터 아이들 간식 딱 막힌 거예요. 부모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나와 계신 선생님한테 요청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은 간식을 대줘라. 한번은 우리 부모가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중략〕 제가 아이들 간식을 구걸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긴급생계비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긴급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상황이 어렵다는 걸 증명해야 주는 일반 복지비 지급과 같은데, 세월호 참사에서 조금 완화된 것은 서류만 나중에 받는 것일 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 시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복지 지원과 동일했지요. 관에서 먼저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고. (오0연, 생존학생 부모)

(3) 지원의 비체계성

정부 지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지원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이다.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여러 부서 및 정부 기구를 오가야 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정책적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회적 지원들을 행정 벽에 부딪혀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이후 지원 과정에서도 지원부서가 통합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러 부서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원을 요청 했다. 의료 지원의 경우도 지원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비체계적인 지원은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할 피해자의 삶을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사고 초기 피해자들이 머물렀던 진도 체육관의 경우, 모든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을 몰아넣으

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피해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노출되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안정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제공되지 못했다. 시신 수습 과정이 초반에는 3~4일씩 걸렸고, 시신이 들어오는 항구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유가족이 팽목항 아닌 다른 곳에서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시신 확인 과정도 유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참사 직후 팽목항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비용을 개인에게 책임지도록 했다.

〈사례〉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는 바다에서 난 사고잖아요. 해양수산부로 넘어가잖아요. 해수부 장관에서 책임을 딱 주면 좋겠어요. 〔일원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곳으로 전화해라 저곳으로 해라 그런 거 없이 딱 한 라인만 있으면 좋겠어요. 생존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딱 연락해서 알아 볼 수 있게 연결해주고. 〔중략〕 저희는 자식이 사고를 당한 것이고, 저희가 더 오래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O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가족카드를 만들어보니 더 가관인거죠.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안되겠다 싶어서 지원을 못 받은 가족들만 또 따로 뽑았어요. 밑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 도움 요청해서 제가 머리 털 나고 처음으로 장관님 만나봤어요. 장관님 만났어요. 장관님 만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떠들러 찾아갈 때는 안 되더니 담당자들이 지들이 먼저 와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가족들 지원 기준 자체도 모호했고, 매뉴얼화도 아예 안 되어있었고. 그냥 급하게 부랴부랴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밑에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옮겨 놓고 거기다 멘트하나만 바꿨죠.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번 사고에 관련한 특례적용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부분적이라고 해놔버리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버린 거죠.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팽목항 한쪽에 배 들어오는 데 있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처음에는 그랬어. 모르니까. 나중에는 유전자 검사하고 했고. 처음에는 일반인들도 다 가서 보고 그랬어. 나중에는 유가족만 해서, 유가족만 보여주는 식으로.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처음에는 개인으로 하는 건줄 알고 얼른 빨리 가자고 해서 길병원으로 간 거지. 왜냐면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해봤어야지. 아들도 다 산 줄 알고 찾으러 갔다가 그런 건데. 경험이 있나.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잠을 못자니까 일단 힘들었죠. 잠을 잘 데도 마땅치가 않았고. 〔팽목항에〕 텐트를 치는데 넘버링을 붙여요. 1부터 17번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게 천막의 동수인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단원고 1반, 2반이 텐트였던 거예요. 어디 가서 빌붙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머니 친구 아들하고 저하고 팽목항에서부터 같이 차에서 잤어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유가족들 있는 틈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중략〕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하… 너무 한심하고, 그런 거예요.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너무 그걸 쳐다보는

거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들더라구. (이0종, 생존자)

〈사례〉
해남에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죠, 해남에서 서울로 가시겠냐, 여기서 치료 받으시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서울로 가겠다고 했죠, 그러면 구급차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태가 장난이 아닌데 구급차를 어디서 구하냐고. 의사들은 그때부터 관여를 안 해요.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고 거기 계시던 분이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구급차를 하나 불러드릴까요 해서 네 불러주세요 하니까 그때 얼마였더라, 45만원인가 〔내야한다고〕. 그때는 돈 줄 생각이었죠. (최0영, 생존 화물기사)

〈사례〉
〔정부 측에 단일한 창구를〕 만들라고 해봤죠. 긴급으로 해서 뭐 안산시청, 보건복지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 때도 제가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아직까지 된 게 없어요. 제가 거기에 제시한 거는 온마음센터가 됐든 어디 한군데에서 아이들 전체를 다 공유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얘길 했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날 이후로. 그게 바로 12월 21일입니다. (박0수, 생존학생 부모)

(4) 지원의 편향성 및 불균등성

지원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완전히 배제된 집단도 있었다. 정부의 공식적 지원은 단원고 위주로 진행되었다. 초기 안내책자도 단원고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지원 기준 자체가 모호했고 적용 기준도 모두 달랐다. 일례로 같은 사고를 당했지만 피해자 주소지에 따라 각 지자체 지원이 달랐다. 똑같은 사고 피해자인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원 내용에 차별을 받았다.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주민 유가족의 경우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었지만 항공권 등 입국에 필

요한 비용은 공식적 지원이 없었다. 유가족 입증에 필요한 서류 공증 비용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48] 이주민 유가족들은 입국 이후에도 비자 갱신과 관련한 안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불안한 체류 생활을 유지해야 했다. 정부 차원의 통역 지원도 팽목항에서 열흘 정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속적인 차별에 노출되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에 참여한 진도 어민의 경우 사고 직후부터 생산품이 유실되고 조업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생계 지원은 공식적인 피해전수 조사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조작업 및 기름 방제작업에 대한 일당과 가구당 1인의 공공근로 형태로 진행된 생계지원도 행정적인 조치 없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어민들이 손해사정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피해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사례〉
자꾸 소외되니까 속상해서 모이게 된 거고 모여 놓고 보니까 5월 16, 17일쯤. 사고 한 달 만에 지원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받은 책자에는 단원고 것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2개 다 갖고 있는데. 안되겠다 싶어서 인천시 공무원들, 인천시 의원들, 경기도 의원들, 도청 관계자들 전화를 안 해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해서 떠들고 해서 일반인용 책자를 3, 4일 만에 증보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근데 그 부천 사는 친구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거기는 뭐 여러 번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관성이 없고 그냥 지방 자치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다 다른 거죠. (이0종, 생존자)

〈사례〉
한국대사관 연락이 왔어요 〔그 출국비용이나 이런 거는〕 그 연락이 왔는데 그때

48 박진우,「국적은 달라도, 슬픔은 같다」,『한겨레 21』, 2014.8.12.

는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떡하냐 라고 여쭤봤더니 어디 빌려야 된다. 일단 우리가 도와주는 건 비자만 발급해주지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 이웃사람들 조금씩 빌려서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발급한 다음에 비행기표를 샀어요. (쿠0000가,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딜 가도 통역인을 대동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바쁘면 안 되고 만약 생활용어만 하면 굳이 필요가 없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 통역이 필요할 때 제대로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한국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고 한마디 해도 통역 부탁해야 되는 거고 어디 가면 같이 가자고 하면 시간 안 되면 그만이고 되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눠주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바로 아는데 저는 찍어서 통역인에게 보냈어요. 언니 이것 좀 해석해달라고 그 언니는 뭔가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쁜 거에요. 그래서 저는 못 받고, 그때그때 도움을 못 받는 거죠.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우리는 여객선도 끊어버리고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유가족들이 찾아올까봐 그랬을까. 다 관매도에서 몇 km, 서거차도 km로 그러고 우리 섬을 지워버릴려고 그랬을까? 우리 동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면 어떤지 현장을 살피고 지원을 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 그런 게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루트라도 만들어서 뛰어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실무자가 아 이집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총괄적으로 살펴서 해줘야하는데 사회적으로 그런 게 없죠.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3) 민간 참여를 보장할 의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조와 피해 복구 1차 책임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연대가 이를 뒷받침한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세월호 참사 직

후에도 민간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이 진도에 내려와 사고 수습 과정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참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수습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 민간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등은 안정적인 숙소나 정보 제공 없이 개별적으로 구조 및 피해자 지원 작업을 진행했다. 사고 구역이었던 진도 어민들의 경우 시신 수습 및 수색 과정 등에 직접 동참하기도 했고, 미수습자 수색 기간 동안 생업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심리 및 생계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

(1) 민간 참여에 대한 정부지원 부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수색 종료까지 5만여 명 사람들이 다양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1박 2일 단기 자원봉사자, 몇 달씩 자신의 시간을 내 봉사활동을 한 장기 봉사자도 있으며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원 봉사자들은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했다.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재난과 관련된 자원봉사였던 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정부 차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봉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원과 보상은 커녕 정부는 자원봉사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했다.

민간잠수사들 업무 당시, 잠수 작업 후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수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작업 당시 필요한 장비나 식사 등의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참사 초기 자비로 구조작업과 수색작업에 발 벗고 나선 어민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이어갔으나 정부의 부족하고 늦은 대응으로 고통은 가중되었다. 이들은 시신을 직접 목격하고 수습하는 등 큰 충격을 겪었으나 이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지원은 짧았다. 수색 종료 후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정부 모든 부처가 팽목항에서 철수했다. 이후 민간 자원봉사자만이 남아 팽목항에 남아있는 미수습자 가족을 지원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원봉사자 개인의 문제로 남았다.

〈사례〉

나중에 6월 3일인가, 1일인가. 6월 1일부터 아마 감사를 받았거든요. 참사 관련

해서 정부기관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보겠다고 어디 정부기관 어디서 나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가족대기소가 있던 옆자리 쪽에 텐트 앞에 자원봉사자 숙소 남, 자원봉사자 숙소 여 붙어있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어떤 천막 중에 하나를 비는 곳에 계시다가 힘드시면 잠깐 눈 붙이고 오는 데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로 분류되지 않았기에 아예 잠잘 데가 없었던 거고. 어느 시점에 뭔가 통제하고, 생색내고, 통계내고 정리할 때만 무언가가 관이 손을 내뻗는 거 같아서. (하0옥, 자원봉사자)

〈사례〉

올라와서 있는데 피정 자체가 원래 해경 뭐 인원도 워낙 적은 인원이 타다 보니까 잠자리도 없고 그 전에 미리 또 준비된 먹을거리도 없고 그냥 긴급하게 막 모포, 실제로 모포가 뒤에 갑판에 나뒹굴길래 그거 하나 덮고, 그 당시에 수트도 입고 그날 또 비도 왔어요. 비도 부슬부슬 왔는데, 잘 자리가 없으니까 잠수복 입고 그냥 갑판 위에서 잤어요 그냥. (전0근, 민간잠수사)

〈사례〉

거기서 밥도 전부 다 우리가 그, 해먹지는 못해가지고 섬에다가 이제 돈을 얼마씩 주고, 그걸 이제 언딘에서 다 그렇게 했죠. 해경에서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고 다 했는데, 지금은 해경이나 정부에서 언딘에 그 뭐 장비비도 뭐 이십 몇 % 밖에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 청구된 금액에다. 그것 가지고 문제가 많대요.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보상에 대해서 해경팀이 전남도청으로 처리가 넘어 왔어요. 그런데 전남 도청에서도 근거가 없다고 해경으로 넘어 갔어요. 해경에서도 다시 전남도청으로 문서를 제출했겠죠? 그런데 전남 도청 담당자 왈, 이런 게 누구도 지금 처음이라 스스로들 책임질 수 없는 거다. 차라리 소송해서 결정을 받아갖고 오면, 법원에서, 결정문 받아갖고 오면 집행을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법제처로 넘긴 거야. 결론은 법제처에서도 안 된다고. (김0홍, 민간잠수사)

(2) 민간 참여자에 대한 후속 지원 부재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민간 참여자들도 물리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다. 정부는 후속 조사를 통해 이들이 심리적 문제를 겪는지, 봉사 활동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 참여한 민간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정부 조치는 부족하면서 늑장이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센터에서 안내를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심리, 건강, 경제적 문제 등 현황에 대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봉사 종료 후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례〉
지금 어떻게 사냐 물어보면 지금 빚쟁이가 됐고 아직도 심리적으로 신경성위염이나 두통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한번 〔언론이나 정부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나마 제일 먼저 사고 현장 가깝고 제일 먼저 고생한 사람들인데 정부에서 신경써줘야 하지 않나요.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당시에는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나 의견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얼마 후에 아직도 약 지급은 없다면서 근데 그거를 할려면 정신과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입원치료.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고. 공짜로. 제가 좋은 일 해놓고 이런 병이 와 있는데 내가 왜 정신병원 그 꼬리표를 달고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자식들에게도 아버지는 뭐 그런 일을 해놓고 정신병원까지 갔냐는 이야기를 할거 아닌가요. 비싸니까 그렇지 처방안하는 약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를 〔자비로 사서〕 먹고, 딸이 보내주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듯한 부분도 있어요. 지치고 다치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해 하거나 지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거나 하면 집으로 가길 권유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우고 그런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와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을 허망하게 뭐 하나 조치 취해주지 않고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와서 짐 취급하는 듯한 말을 하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뭐 없을까 하는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백0혁, 자원봉사자)

〈사례〉

참사에 대한 자원봉사는 다른 자원봉사와 다르잖아요. 힐링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도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뭘 얻고 갈 수 있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자원봉사는 내가 마음을 삭아서 뺏기고 가는 자원봉사잖아요. 〔중략〕 자기 시간 뺏기면서 까지 때로는 밥 제대로 못 챙겨가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한지 혹시 마음은 심리적으로 받은 상처는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0옥, 자원봉사자)

(3) 민간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 전가

정부는 시신 수습 과정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나 보상은 커녕 해경이 져야 할 법적 책임까지 떠넘겼다. 검찰은 민간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사망 사건에 대해 선임 민간잠수사를 기소했다. 사망한 민간잠수사의 유가족은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소된 동료 잠수사에게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형사 사건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해경은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에서 빠져 나갔다. 자발적으로 구조 과정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두 민간잠수사에 대한 의사자 지정은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서 유가족들이 일일이 자료들을 모으고 1년 가까이 주장한 끝에야 겨우 이루어졌다.

〈사례〉

억울한 것들이 많죠. 공0영 선배님은 재판까지 받으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갖고 떳떳하게 입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4월 13일 날 마지막 증인 신청인데, 그 때 증인하고 결심공판하자고 변호사가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할 거고 그 때 무죄 재판 나오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입증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죠. (전0근, 민간잠수사)

2. 기업의 의무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다. 그러나 기업은 소유자나 CEO만의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등 사회 구성원들을 포괄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 또는 잠재적 인권 침해와 위험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노동자와 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는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밀려나거나 아예 망각되는 경우가 많다.

세월호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선박의 불법개조, 과도한 증축과 과적 등으로 벌어진 참사였다. 세월호를 소유, 운영하던 청해진 해운이 2013년을 기준으로 승객 모집을 위한 광고 선전비 및 접대비로 3억 원을 쓴 반면 안전교육 등 선원 연수비로는 54만 원을 사용한 점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이윤만을 위해 안전, 생명 존중 등의 가치를 저버린 기업의 책임이다.

그런데 세월호에 탑승했던 비선박직 직원들은 선박의 구조, 안전 장비의 위치 등도 알지 못했다. 안전이나 구조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자체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불, 기름 등 위험 물질들이 선박 안에 있음에도 사고를 대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 환경도 열악했다. 조리원 등 비선박직 직원들의 작업 공간은 주변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고, 이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적절한 탈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대부분의 비선박직 직원이 참사로 목숨을 잃어야 했다.

참사 이후에도 청해진 해운은 피해 구제를 위한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 등을 받지 못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던 화물기사의 경우 참사 이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지원 부족은 화물기사 뿐만 아니라 세월호에 탑승했던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사례〉
배를 타면은, 제가 배를 타서도 배 구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출입구하고 제 기숙사. (김0임, 생존자)

〈사례〉
배가 운항 할 때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도착해갖고 두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럼 두 시간의, 인천에 도착하든, 제주에 도착하든 두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배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 외로는 배를 타면, 제가 배를 타서도 배 구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출입구하고 제 기숙사. (김0임, 생존자)

〈사례〉
조리부하고 식당 칸 하고 홀 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주방 식구들만, 네 명이서. 〔중략〕 나가는 중에 의자가, 선원식당에 있던 의자가 굴러 떨어지면서 제가 갈비뼈를 다쳤는데 그거를 다친 줄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너무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언니는 올라가다가 다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못 올라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이런 바닥이라 미끄러운 데다가 기름 솥이 그날… 아침에 탕수육인가 돈까스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튀기고 기름 솥이 올라가 있는 상탠데 그게 쏟아져 바닥이 더 미끄러운 거예요. 〔중략〕 고립되어 있어서 겁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저도 올라오면서 두 번이나 포기를 했었어요. (김0임, 생존자)

3. 언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이로 인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언론 스스로 이를 반성하며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기도 했으나 이 준칙은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언론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았다.[49] 언론은 참사 초기 전원구조라는 대형 오보를 시작으로 각종 유언비어의 주요 유포 경로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자연히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나 취재 등을 꺼리게 됐다. 이는 신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언론의 왜곡 보도로 주변인이나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름이나 사진 사용 등에 관한 확인여부도 당사자에게 묻지 않는 등 언론의 사생활 보호 노력도 부족했다. 언론은 참사의 일면적인 면만 보도함으로써 일부 피해자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언론의 보도행태의 문제점은 정보의 일방적 전달, 공감과 배려의 부족, 미확인 선정보도로 요약할 수 있다[50]. 참사 초기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전원구조라는 오

49 〈재난보도준칙〉 2. 피해자 인권 보호 (2014년 9월 16일 제정)
제18조(피해자 보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등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신상공개 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제20조(피해자 인터뷰)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터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비밀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하지 않는다. 인터뷰에 응한다 할지라도 질문 내용과 질문 방법, 인터뷰 시간 등을 세심하게 배려해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21조(미성년자 취재) 13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피해자 대표와의 접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표자를 정했을 경우에는 이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하고 보도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와 언론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와의 접촉도 이와 같다.
제23조(과거 자료 사용 자제) 과거에 발생했던 유사한 사건 사고의 기사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사건 사고와 관련된 사람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한다.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과거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50 방문신,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 방송특보를 중심으로」,『관훈저널』, 131호.(2014). 19~20쪽.

보를 냈고, 충격에 빠진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를 경쟁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되었다. 취재 내용이 언론사 편의대로 재해석, 왜곡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취재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요청이 무시되기도 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 없는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1)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한 무책임성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사고 소식을 대부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그러나 참사 직후 대다수 언론이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보냈다. 이는 참사 정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51]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직후 뉴스를 듣고 당연히 가족이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도 생각하지 못한 채, 간단한 옷, 생활필수품만 챙겼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가족들의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례〉

전원구조 소식이 났어요. 아 당연히, 그렇게 큰 배가 침몰됐으면 당연히 구조가 되겠지 애들 구명조끼 입고 애들 다 탈출했겠지 에이 뭐야 하면서 갔다 오면 에피소드 들어야지 생각하고 집에 가고 있었는데, 〔중략〕 애 춥다고 옷 입혀야 한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가셨어요. 〔중략〕 뉴스에서 나온 모습이 아니고 구조도 안하고, 저는 계속 엄마한테 전화할 때마다 성호 살아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5일째 되는 날 그거 제 눈으로 직접 보고나서 그냥 빨리 가라고 했어요, 성호한테. 더 버티면 너무 힘드니까. 어차피 안 구해줄 거니까. 누나가 할 수 있는 말이 빨리 가라는 말밖에. 너무 힘드니까. 〔흐느낌〕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51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진원지는 경찰 무전」, 『한겨레』, 2014.7.9.

2)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방해, 사생활 침해

언론인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ICFJ)는 『재앙과 분쟁보도』(Disaster and Crisis Coverage) 원칙을 만들며 '침착할 것, 분명하고 정확하고 같이 아파할 것,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공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언어를 피할 것'을 언론의 의무로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특종 경쟁에만 몰두했고, 피해 당사자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 큰 충격을 겪은 미성년자가 다수인 생존자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병원 등에서 보호자 동의는 물론 당사자 동의조차 없이 취재를 강행하기도 했다. 언론의 이러한 취재행태로 인해 피해자들은 안정을 찾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회복할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언론 트라우마로 규정될 만하다.

〈사례〉

주변에서 기자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나는 엄마다, 나는 배 안탔다. 나는 내 아이… 그래서 5분 만에 주사 뺐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기자들이 생존한 여학생한테 가서 핸드폰이 깨졌는데도, 그 핸드폰 내가 복원해도 되겠냐, 복사해도 되냐,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아이들이 나왔을 당시에 어떤 기자는 그랬대요. 돈줄 테니까 얘기 좀 하자. 뒤의 상황을 알려달라고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나 봐요. 〔중략〕 진도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친구들이 뒤에 올 거라 믿어서 어떤 말을 해도 상관이 없이 아이들이 구조되어 올 거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못 온다는 걸 알고 나니 그렇게 말한 자기한테 죄책감이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했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구조되어 올 거라 인터뷰한 친구들은 더 심하게 울기도하고 죄책감고 컸고.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도 반 눈을 뜨고 자고.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저도 인터뷰 6~7번인가 했어요. 〔기자들에게〕 여기저기 시달리고, 저희 인터뷰

하다 선원 보이니까 바로 선원 인터뷰하러 가버리고. 〔중략〕 병원에서도 기자들이 많이 오고 어떤 기자는 일반인처럼 와서 인터뷰하고 가고, 1층에는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병원에서 불편한 것은 별로 없는데 나갈 수 없는 게 좀 그렇고 기자들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박민규(가명), 생존학생)

〈사례〉

저희 아빠의 경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아이 유학 갔다고 한 집이 되게 많아요. 쓰러지실까봐. 저희 집은 언론 때문에 아버지 얼굴이 나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고 싶지 않았어도 이미 다 알려진 후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모자이크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인 그림, 더 좋은 그림을 뽑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보내고, 허락도 안 받았어요. 저는 거기서 저희에게 취재허락을 받은 기자를 한 번도 못 봤고, 한번 본 게 외신이었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너무 시달린 거죠, 언론 기자들한테. 수법이 다양하더라고. 피자 사주면서. 병원에 있을 때 피자, 치킨 사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진실을 내보내줬으면 상관없죠.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첨부터 잘못 된 거죠. 전원구조라는 것. 그리고 구조란 단어를 싫어해요. 우리 애들은 탈출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도와서 탈출을 했으니까. 언론은 0.1%도 믿지 않고, 애들은 기자라고 하면 이제 아주 경기를 하죠.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그러니까 이제, 첫날, 이튿날. 첫날 구조 때부터 가족도 있고 어린 아이에게도 초상권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전 국민이 알아버릴 정도에요.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많이 여러 번 봤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냥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이라도 배려를 해줬었으면, 그런 마음이죠.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3) 유언비어와 사회적 편견의 확대재생산

언론은 사실에 기반을 둔 정보 전달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경쟁 과열로 언론은 부정확한 정보 보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시민들에 의해 유언비어가 확산되기도 했다. 특히 배·보상 관련 문제를 둘러싼 유언비어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확산에는 언론이 크게 일조했다.

〈사례〉
문화일보는 '화물 기사들은 세월호 침몰을 알고 있어서 〔중략〕 밖으로 모두 다 나왔다'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매도했다. 그런 언론들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다. 그러한 보도가 우리 화물 기사들을 품성이 나쁜 인간처럼 몰아갔다고 본다. 이런 유언비어나 사실왜곡 보도에 분노한다. (김0수,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세월호는 진짜 보상 많이 진짜 받았네, 이러면서. 참 솔직히 말해서 세금도둑이라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의사상자 지정이 돼서, 기사가 나왔는데 내가 댓글을 내가 항상 꼭 읽어 보는데 그런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고.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심한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같은 환자들이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가슴이 아팠죠. 다른 환자가 그게 아니야 하면서 변명을 해주더라고. 내 바로 주위에 있는 환자도 그런 말을 하는데 일반국민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0영, 생존 화물기사)

4) 다양한 피해 양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획일성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다수가 청소년이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언론도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중심으로 다뤘다. 이후에도 언론은 학생들 희생만 부각시켜 다양한 피해자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로인해 참사의 다양한 피해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으로 희생학생 부모들이 참사의 책임을 모두 지도록 만드는 편향도 낳았다.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가려졌고, 이들이 당하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사례〉
자꾸 단원고 얘기만 나오니까. 계속 거기서 소외가 되었던 거예요. 실질적인. 보수 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자꾸 그 얘기. 근데 지금도 그래요. 1년이 지났음에도 언론에는 학생들 위주에요. 저희는 들러리에요. 단원고 얘기 50분 얘기하면 일반인 가족 얘기 1분.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얘기 안하죠. 지금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언론에서 비춰준 적 있어요? 이번에 그분이 자살 기도해서, 음 뭐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사실 좀 생존자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거 뿐이지, 그 잠깐 얘기 나온 게 끝이잖아요. 한번 얘기 나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0종, 생존자)

5) 국적 차이 등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음

세월호에는 이주민 피해자도 있었다. 이주민 피해자 가족들 경우 기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언어차이에 따른 의사 전달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보도된 기사 내용을 점검하기도 어려웠다. 언론은 항변권, 반론 청구권을 위해서라도 기사화될 내용에 대한 번역 등을 고려했어야 했으나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취재·보도 과정에서 이주민 피해자 가족들은 또다른 상처를 받기도 했다.

〈사례〉
어떤 기자가 혹시 가족이 알고 계시는지, 지금 신문에 떠들고 있는 내용이 당신들이 보상금을 받고 조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갈 의도가 있다, 살아있는 조카딸을 데려갈 의도가 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여기 와서 아직도

가지도 않는다, 그런 돈 때문에 한국에 왔다, 돈 욕심이 많다, 아직도 가지도 않는다, 왜 여기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당신 가족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내가 방송 SBS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나쁘다, 라고 했는데 방송되지 않았다.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방송한다. 〔희생학생 어머니〕 우리 가족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문제는 없다. 단 하나 초창기에 언론에서 00〔희생학생〕 출생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다. 나의 친자라는 기사도 있었고, 내가 새아버지라는 기사도 있었다.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고 기사화한 것이 아니다. 모두 추측성 기사이다. 이것을 보고 엄마가 화를 냈다. 물어보면 될 일인데.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조사자 정리)

4. 시민의 책임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에 탔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 친구 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참사일 뿐 아니라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사회 구조의 단면을 전 국민, 세계 시민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연대하며 참사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바탕으로 세월호 이후 다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성찰하고 대형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 모두의 몫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은 참사 피해자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 피해와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참사 피해자들은 국적·신분·지위·나이·성별 등과 무관하게 재난의 예방·구제·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었으며, 각종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세월호 참사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았다. 학생과 그의 가족이외 피해자들은 관심 밖에 묻혔다. 심지어 '학생들을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어른'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생사 갈림길에서 겨우 살아나온 생존자들은 죄의식에 시달렸고, 학생 생존자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베 등의 혐오 세력과도 만나야 했다.

1)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피해자 구분 짓기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와 비단원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 때로 비난 대상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됨으로써 이웃과 가족 안에서 소외를 경험했다.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이와 같은 구분 짓기 대상이 돼 사회적 관계망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생존자들은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을 죄로 인식하는 심리적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변 편견으로 더욱 고통 받았다.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전형적인 피해자 상을 원하는 사회적 시선에 시달려야 했다. 생존자의 경우 생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장벽을 만나야 했다.[52]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평범하게 봐달라고 말한다.[53] 참사 피해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가 절실하다.

참사 피해자들을 순수하고 가련한 존재로 고정화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용되기도 했다. 참사 초기 언론과 정부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어린 아이를 부각시켰다.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권00 양의 경우,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언론에 시달렸으며 대통령도 권00 양을 보듬는 장면을 널리 활용했다.[54] 이들은 피해 당사자의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극적 이미지로서만 활용했다.[55]

52 "생존학생 유모양은 '이 사고 때문에 다른 분들이 욕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거나 해서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저희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단순히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은 건데, 이런 걸 교통사고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 - 「남은 이들의 법정 증언 "다시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경향신문』, 2015.4.18.

53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시선과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가도 불쌍하게 쳐다보는 시선들, 그리고 기자들, 어디를 가든 집중되는 사람들의 시선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18세 소년 소녀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로 바라봐 주세요." - 「학교복귀 앞둔 단원고 생존학생들 '부탁의 글' "괜찮냐·힘내라... 말하지 말아주세요, 단 세월호 사고는 잊지 말아주세요"」,『경향신문』, 2014.6.22.

54 "한겨레는 '권00양은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구조된 뒤 목포한국병원에 입원했고 바로 할머니와 고모에게 인계됐다'며 '하지만 과자를 먹다가 토할 만큼 '쇼크성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양은 다음날인 17일 낮 목포한국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17일 오후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 진도체육관을 찾았는데 거기에 권양이 사진이 찍힌 것이다. 합리적인 의심이었고 〈한겨레〉는 '홍보를 위해 권양을 데려다놨다는 의심은 말이 안 된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함께 실었지만 피소당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 '지침' 내리거나 '고소'하거나 : 출범 2년차 청와대가 고소한 보도 모음」,『미디어스』, 2014.12.31. 한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는 문제의 사진을 '제25회 신문사진 인간애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55 "재난, 화재, 성폭력, 신체학대, 교통사고 등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는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관리와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인지능력이나 표현능력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이는 사건, 사고에 대한 왜곡현상이 더욱 심하게 이뤄질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생애 전반에 걸친 심리적인 치료와 관심이 절실하다. 즉, 성인이 되기까지 관리와 보살핌이 계속돼야 한다는 말이다."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 보듬을 대책 있나요 : 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 트라우마 지원사업' 추진」,『베이비뉴스』, 2014.8.13.

〈사례〉

제가 한 간담회를 한 40~50회 정도 갔다 왔어요. 그 때 당시, 그 때도 저희는 있었으니까 항상 유족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민, 신촌 쪽인가 간담회가 잡혔었는데 저희가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전날에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저희는 유족이 필요합니다. 생존자는 안 오셨으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 이후로 제가 간담회 다 접었어요. 유족이 와서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래야 하는데 생존자가 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박0수, 생존학생 부모)

〈사례〉

친구들도 그래요. 선아(가명)가 살아나왔으면 됐지, 뭐. 저도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친구들은 선아(가명)가 대학특례 한다더라 그러구. 그렇다고 친구들과 막 싸울 수도 없고 하니 안 만나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지금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고 문서도 보내주고 하니까 친구들은 좀 나아졌어요. 형은 조카가 그렇게 되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릴 하니 속상하고 야속하고 그랬죠. (오0연, 생존학생 부모)

〈사례〉

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도 따지듯이 얘기하고 갑갑해서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에요. 사람 대접을 해달라는 거. 실종자나 실종자 부모들이나 인권이라고 인터뷰를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 바탕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거기 있는 가족들을 꺼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죠. 왜 이 엄마는 따지냐, 우리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팽목항에선 인터뷰를 안 했어요. 왜? 내가 선동꾼에 뒤통수 한 번 맞았구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전에 있던 친구들하고 연결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나오는 게 또 세월호에서 살아온 친구야! 벌써 이렇게 탁! 소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니까 그런 데서부터 그건 하나의 사고고 이거지만 내가 거기에 늘 움찔움찔하는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중략〕 그런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나랑 가깝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저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있을까, 심리 상태가 어떨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의식이 부족하다. (이0종, 생존자)

〈사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지낼 수 있도록, 악플 같은데도 벗어났으면 좋겠고. 〔중략〕 너희만 살아와서, 이런 말 안하고. 솔직히 격려만 해주면 좋겠어요. 〔중략〕 그런 말 많았잖아요. 문제 아들이 살아왔다고. 담배 피우러 나와서 살아왔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중략〕 내 아이 내 조카, 내 동생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말하진 않겠다는 거죠. (이0선, 생존학생 부모)

2) 잘못된 정보 유포와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립감

언론에 의해 유포된 잘못된 정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확대 재생산했다. 예를 들어 사고 초기에는 화물 기사들이나 생존자들이 학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갔다는 등 언론 보도나 소문이 무성했다. 추측성 보도에 의해 확산되는 편견 때문에 생존자들은 주변과 만남을 꺼리게 되었다.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계 단절과 고립감을 경험했다. 생존자들은 배·보상 과정에서도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 받아야 했다. 사회적 편견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이나 아픔을 드러내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관계 맺기, 사회적 접촉을 기피하게 되면서 피해 회복과 상처 치유를 포기하게 된다.

〈사례〉
선원들이 다 자기네들 살자고 다 승객들을 버리고 나왔다고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저도 거기에 이제 일조한 사람으로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황적으로

저희가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됐고 제가 아… 거기 배를 타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승객을 구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중략〕 선미인지 선수인지 그런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놓고서는 우리한테 승객들 못 구했다고 그거를 갖다가 비난을 해가지고 승무원들을, 선원들을 다 구속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분들도. 〔울음〕 살아야 될 의무는 있는 거잖아요. 누가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살아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못 구했다고 다 구속을 하셨더라고요. (김0임, 생존자)

〈사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잖아, 지금. 그렇다고 국민들이 돈이나 겁나게 받고 더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 줄 알고. 동네에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배상 다 받고 끝난 줄 알아. 끝나긴 뭘 끝나. 지네들이 해준 게 뭐있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뭐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한국에서 제일 슬픈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정이 정부에게 지원받아서 아주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한국정부에게 아무 관심 못 받고 마음씨 착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서 보태는 것 말고는 정부에게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1년 동안 아주 힘든 1년이었고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너무 무관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판0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3)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모욕 표현과 행동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점차 강화되었다. 혐오행동은 온라인 공간과 언어폭력을 넘어서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나타났다.

정당한 집회 시위, 도보행진 과정에서 혐오행동은 스스럼없이 표출되었다. 공권력의 방관과 무책임 또한 혐오 행동을 용인하고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혐오 행동은 참사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다.

〈사례〉
가장 그랬던 것은, 죽은 자도 인권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베도 그렇고. 너무 심해요.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도 있고. 〔중략〕 00아버님이 입원해계신데 00아버님이랑 남아있는 딸이랑 엮어서 되게 성적으로 묘사한 글도 있고. 되게 더러워요. 그런 거 봤을 때 죽은 자의 인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거 같고.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직접 겪은 거긴 한데, 저는 서명 받으러 갔다가 자식 죽었는데 슬퍼해야지 여기서 니들이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니들이 유가족을 이용하냐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런 적 있어요. 그때는 막 싸울 수 없으니까 서명 받다가 울고. 〔중략〕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갑자기 다짜고짜 빨갱이라고 유가족인거 증명하라고.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처음으로 저기 한 거는 100일 보냈을 때. 그 때 우리 행사한 거 있잖아요. 그 때 저 맞았어요. 여기를. 〔중략〕 어떤 사람이 역으로, 역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리 가야하는데, 어떤 남자가 나도 좀 가자, 그러면서 여기〔명치 위쪽을 가리키며〕를 퍽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쓰러졌거든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Ⅳ. 피해자별 권리 쟁점과 평가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이 장에서는 각각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처지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여러 주안점을 인터뷰 그룹별로 다시 한 번 정리했다. 그룹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피해자를 간단히 소개했다. 군에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생존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 교사,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단원고 학생, 그 밖의 단원고 재학생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인터뷰 그룹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과 정부 지원을 분석한 이 장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는 정부와 사회의 정책적, 제도적 그물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밝혀지기 바란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단지 사고 당일 세월호에 탑승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에게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1.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희생자와 피해자[56]를 정의하는 기준은 '세월호에 승선'했느냐 여부이다. '희생자'는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사망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며, '피해자'에는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희생되지 않은' 사람들과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그리고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승선 여부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법 규정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형 참사가 낳은 다양한 위치의 피해자들을 모두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57] 이는 '직접적' 피해(자)만을 피해(자)의 '전부'라고 보는 사회적 인식과도 연결된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 감정을 포함한 여러 시선에 노출된 사람까지 피해자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보상 문제가 연관될 경우 오직 법 규정에 따라 '물질적' 지원을 받을 사람만으로 피해자를 한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피해 규모가 304명의 죽음에서 그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 누구도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전 국민이 생중계로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전체가 슬픔에 빠졌고 동료 시민으로서 이와 같은 비극에 한마음으로 아파했으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를 목격한 이들도 모두 넓은 의미의 피해자일 수 있다. 참고로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58]에서는,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에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직계가족과 피부양자, 그리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포함된

56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제2조

57 민간 잠수사 이0욱씨의 유족 인터뷰에 따르면, "네, 해양수산부에서 답이 왔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고인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라고 한다.-「자원봉사 한 세월호 민간잠수사가 왜 가해자?」, 『CBS라디오-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5.5.27.

58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유엔총회의 결의(A/60/509/Add.1), 2005.

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법 제도나 사회 통념에 따라 규정해 왔던 피해자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을 드러내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피해자이되 피해자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생존학생의 부모와 형제자매 같은 경우, <세월호진상규명법>이 정의하는 피해자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 절차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1) 생존학생의 부모[59]

생존자 역시 참사의 피해자다. 그러나 다수의 '희생자'가 있다는 현실 앞에서 이들은 쉽사리 고통을 드러내지 못한다. 상당수의 유가족이 학생 '부모'인 판에 "살아 돌아왔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냐"는 식의 수군거림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시선 속에서 '생존'학생 '부모'는 자신들이 가지는 불안, 자책감 등을 표현하기가 어렵다.[60]

〈사례〉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진짜. 학부모끼리도 서로 못 믿는 것 같더라고요. 불신이 제일 크고. 나는 세금을 따박 따박 잘 냈는데 이 사람들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부모님이 상담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한 언니가 절 불러서,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나 혼자 질질 짜고, 자기는 앉아서 '아 그러셨군요' 뭐라고 해주는 말도 없고

59 단원고 생존학생 학부모대책위 장0원 대표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들도 수면제를 안 먹은 사람이 없고 몸은 피곤한데 긴장감을 놓지 못하니까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시사인』, 2014.7.10.

60 단원고 생존학생 학부모대책위 오0연 씨(언론담당) 인터뷰에 따르면 "부모라고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책감만 쌓인다. 예전에 부일외고 수학여행 때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적이 있다. 생존 학생들이 불안해하니, 부모들이 방문도 뜯고 생활했다고 하더라. 아이들이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 부모들도 무섭다. 잠도 못 잔다. 아이들이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 뛰어간다"고 한다. 또한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피해자인데, 희생자가 있다 보니, 살아 돌아온 게...."라고 말했다. -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시사인』, 2014.7.10.

'그러셨군요, 이제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러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다야. 나 혼자 다하고, 혼자 울고, 울고 나면 머리 아프고 트라우마 더 와. 근데 이걸 해야 돼?" 이래서 상담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중략〕 나도 안 해요. 딱 한 번 하고 안 해요. 수요일마다 안산생명센터라고 천주교에서 해 놓은 센터가 있는데, 수요일에 가면 매듭으로 팔찌를 만들거나 손을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끝나고 점심 같이 먹고 수다 떨고, 이런 게 우리는 치유프로그램이라고. 그런 게 필요해요. 〔중략〕 지금 보면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이 거의 소외됐다고 보시면 돼요. 야근도 하고 일곱시 이후에 끝나고, 주말에 해 주는 데도 없고, 〔상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도 해 달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O선, 생존학생 부모)

2) 생존학생의 형제자매

단원고 희생자가 아닌 생존학생 형제자매에 관한 기사 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도 학비를 지원[61]하겠다는 기사 정도가 전부이다. 한 동네에서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진학제도를 고려할 때, 자신의 형제자매는 살아 돌아왔지만 친구의 형제자매는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데다, 더불어 부모의 관심 또한 생존학생에게 집중되면서, 생존학생의 형제자매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각종 심리 지원 프로그램 역시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생존 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다.[62]

〈사례〉

선아(가명) 여동생〔당시 중2학년〕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반에만도 단원고 2학년에 언니오빠를 둔 아이들이 여덟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선아만 돌아오고 나머지 일곱 명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해 선아 동생도 많이 충격을 받았지

61 「단원고 2학년생·생존학생 형제자매 학비 지원」, 『연합뉴스』, 2015.5.8.
62 「단원고 2차 멘토단 모집: 세월호 생존학생 및 희생자 형제자매 멘토모집」(~10/5), 『아름다운배움』, (http://beautifullearning.org/onboard.php?BID=notice&mode=view&UID=219).

요. 우리는 선아 돌보느라 못 간 장례식장을 선아 동생이 다 갔고, 나중에 알았는데 한 달 동안 무려 스무 번을 갔다고 해요. 둘째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학교도 계속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발견되어 안산으로 오면 친구들의 언니오빠라서 가야 했고, 그래서 선아 못지않게 동생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한번은 아이가 웃지도 않고 그래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30분을 계속 울더라구요, 속마음 털어놔 보라니까. 참,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죠, 선아도 선아지만 둘째도 참 많이 마음이 아팠겠구나. 〔중략〕 형제자매들도 영향을 받아서 동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 힘들어했지요. 예전같이 언니오빠랑 장난도 못 치고, 친구들이랑 언니오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트라우마 관련한 서비스를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큰일이 있을 거예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3)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들[63]

단원고 2학년 학생 중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학생은 13명이다. 불참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어쨌든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있고, 이들 또한 '생존'학생과는 다른 차원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사례〉

〔한도병원에〕 아이가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직도 입원한 상태구요, 한 아이는 수학여행을 안 간 아이예요. 근데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해요, 지금. 걔 같은 경우는 아버님을 만났는데 자비로 병원을 다니는 상태구요, 뭐든지 다 배제죠. 그쪽 부모님도 생활이 되게 힘드시니까. 아이의 병원비가 한 번 정신과, 정신의학과 한 번 갈 때마다 33만 원이에요. 한 시간을 하든 십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상관없이. 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박0수, 생존학생 부모)

63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수학여행 불참 안산단원고등학교 여학생 "친구 통화 중 비명소리..."」, 『뉴스핌』, 2014.4.16. 기사에 따르면,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단원고 2학년 학생은 13명이다.

4) 단원고 재학생[64]

단원고 1,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생존학생과 함께, '단원고'라는 참사의 또 다른 현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곳에 다시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무방비 상태에 과잉 취재에 노출됨으로써 겪은 2차 피해 또한 상당하며,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품게 되었다.[65] 2014년 당시 3학년이던 재학생들은 2015년 1월 모두 졸업했지만, 이들이 단원고를 떠나 마주하게 될 사회에서도 이들에게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단원고 교사[66]

단원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켜보아야 함과 동시에 학부모 요구에도 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처를 돌볼 틈은 없었다.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했다.

〈사례〉

교사들도 트라우마가 커요. 이 분들도 상담이 필요해요. 교육청에서 처음엔 이 분들도 치료받게 한다고 하곤 하지 않았지요. 이 분들도 심리가 불안정하니 욱욱하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악순환이죠. 더군다나 학교에 교실이 보존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 하거든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64 "정운선 교수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단원고에서 상담을 받은 한 학생의 편지를 보여 주었다. 이 학생은 단원고 3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추천으로 단원고를 선택한 동네의 친한 동생이 세월호 침몰로 목숨을 잃자 '동생이 죽은 게 내 탓'이라며 심하게 자책하며 자살을 생각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인터뷰통: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 정신 상담 정운선 교수」, 『매일신문』, 2014.7.26.
"정도는 다르지만 안산에 남아 있던 1·3학년 학생들도 뉴스와 온갖 뒷말을 접하며 급성 스트레스 증상, 우울 장애 등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과 교사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슬픔을 공유하고 극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유법이라고 조언한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슬픔 공유해 트라우마 극복을」,『경향신문』, 2014.4.22.

65 「"직업병 걸린 기자분들께..." 단원고 학생 편지 '눈길'」, 『한겨레』,2014.4.24.

66 「단원중·고 선생님들의 '슬픈 스승의 날'」, 『한겨레』, 2014.5.14.

〈사례〉

교사들은 진도에 내려가서 시신 확인하고. 진도에 사실은 계속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이 일을 해야 됐고, 그러면서 신문기자들이나 온갖 행정 관련된 기관에서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는 와중에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한밤중에 전화해서 죽이러 간다 이런 전화들이 오고, 계속 당직 근무를 서야 했고, 교사들이 너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엄마들이 애가 아프면 그 아픈 게 슬프잖아요, 그 슬픔을 드러낼 수가 없죠. 〔중략〕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지금 애들을 무사히 졸업시키고 학교를 무사하게 하는 게 이 선생님 역할이고 그렇다보니까,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억눌려 있는 상태죠. 예전에 00고등학교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교사들은 대체로 휘몰아치는 게 지나가고 나면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나게 돼요.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6) 군에 입대한 생존자

세월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탑승했던 네 명 중 두 명은 사망했고, 두 명은 생존하여 군에 입대했다. 이들은 세월호 탑승 당시 입영영장을 받아 놓은 상황이었다.[67] 또한, 생존학생 중 남학생의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군에 입대해야 한다. 트라우마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발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입대 문제는 생존학생과 군에 갈 아들을 둔, 희생유가족 부모들에게도 커다란 근심 중 하나이다.

〈사례〉

둘이 군대 가 있어요. 어차피 다 영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00〔생존자〕가 인사하러 왔어, 첫 휴가 때. 걔들이 너무 힘들었어. 계속 울고.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 4월 16일에 여기 참석하려고, 휴가인지 뭔지 몰라도 00〔희생자〕한테 온다고, 이놈들이. 그 소리 듣고 내가 눈물이 나서, 군대 〔돌아〕갈 때까

67 「세월호 침몰 참사: 군 입대 앞둔 친구와 세월호 올랐다가... '선상 알바' 죽마고우 넷 엇갈린 생사」,『국민일보』, 2014.5.1.

지 울고 다녔어요. 동생이 알바를 하더라고. 형은 잘 있지? 하니까, 예, 잘 있는데 00형(희생자) 때문에 1주기 때 군대서 나온대요, 하더라고.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저는 지금은 걱정 안하는데, 졸업 후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행령에 보니, 〔심리지원이〕 5년이라던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군대도 문제이고. (중략) 남자애들 부모는 그것 때문에 가슴 쓸어내려야 하고, 이 아이가 군대 가서 사고라도 치면 어쩌나. SNS 올라온 거, 아이가 군대면제… (중략) 악플들이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특례도 그랬지만 왜 면제를 받아야 하냐. 애들은 담담한 것 같아요. 첨엔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넘어가더라고요. 첨에 분노가 심했어요. (이0선, 생존학생 부모)

2. 피해자 그룹별 권리 쟁점 분석

1) 희생학생, 교사 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자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단원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다. 이 중에는 가장 주목받은 단원고 학생 외에도, 희생된 교사와 외국인 학생도 있었다. 참사 초기부터 현장 가까이서 지내야만 했던 이들은 많은 권리를 침해당했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애도할 권리 등 박탈당한 권리는 다양하다. 참사 현장을 떠나 장례를 치른 이후에도 인권침해는 멈추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유가족은 집회 시위 권리를 침해당했고,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강제연행 등 공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혐오세력이 퍼붓는 모욕과 조롱 또한 속수무책으로 견뎌내야 했다. 참사가 남긴 트라우마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 때문에 단원고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을 세밀하게 고려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떤 지원이 필요하며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유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적절한' 심리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심리치료 센터의 직원들은 유가족의 참여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와 치료를 받으라고 종용했다. 유가족의 심리상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작된 심리치료는 대상자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나마도 처음에는 희생자 부모에게만 제공되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에게

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부모들이 지적하고 나서야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 역시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희생학생 유가족 관련하여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사항은, 참사 이후 가족 간, 그리고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그나마 같이 있을 때도 세월호 관련된 일이 항상 가족들 사이에 놓여 있다. 희생학생의 부모는 대부분 진상규명 등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형제자매들은 소외되었으며 또 부모의 슬픔이 더 커질까 봐 마음껏 애도조차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유가족의 상황에 공감하려 하지 않기에 친구나 지인과 관계도 끊어진 경우가 많다. 상처를 주는 질문과 배려심 없는 행동을 겪으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된 유가족도 있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사람도 있다. 이 때문에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가족만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많다.

희생자들 사이를 갈라놓는 차별도 있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은 일을 맡고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해 순직에 따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여행자 보험도 들지 않아 어떤 상해·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학생을 구하려고 했던 행동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의사자 지정도 받지 못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특성을 잘 살펴 지원을 제공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참사 발생 초기에 희생학생의 외국 출생 어머니에게는 참사 소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또한 이 학생은 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대사관의 확인서류가 있어야만 화장을 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은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것에만 신경 쓰며 유가족을 재촉했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처도 문제였지만 그 후에도 계속된 권리 침해와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지원 방침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나날이 깊어지는 상처를 끌어안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

(1)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단원고 유가족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집회 참가 중에 폭력을 당해도 경찰은 보호하기는커녕, 참가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감시하기 바빴다. 경찰은 특정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거나 직접 대오를 형성해 길을 막음으로써 집회에 참가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도 불편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찰은 집회 시 유가족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연행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통신 내용을 확인하거나[68],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행인까지 연행하는 등 공권력 남용을 일삼았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마치고 헌화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던 유가족과 시민의 발걸음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게 가로막혔고[69], 유가족과 시민은 이날을 포함해서 수차례 캡사이신 섞인 물대포를 맞기도 했다.[70] 이처럼 경찰은 무력을 행사하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했다.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를 감시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당시 서울경찰청은 오후 1시 40분부터 밤 10시 40분까지, CCTV를 이용해 집회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되 화면을 외부로 송출하지 않도록 차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71] 또 희생학생의 부모형제가 도보 순례 도중 자신들을 미행하는 사복경찰을 발견한 경우도 있었다.[72]

〈사례〉

처음으로 저기 한 거는 100일 보냈을 때. 그 때 우리 행사한 거 있잖아요, 그 때 저 맞았어요, 여기를. 근데 그 때 우리가 선두에 있었나 봐요. 00〔희생학생〕이 아빠가 8반 대표여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역으로, 역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리 가야 하는데, 어떤 남자가 나도 좀 가자, 그러면서 여기〔명치 위쪽을 가리키며〕를 퍽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경찰 그 방패 이러면서 잡았어요. 그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손가락 펴요, 하나씩 하나씩.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잡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펴요,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서 주저앉고 호흡곤란이 오고 그러는데, 앰뷸런스가 한 시간 만에 왔다는데요? 안 들여보내줘서? 안 들여보내줘서 앰뷸런스가 한 시간 만에 왔대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68 「경찰, 세월호 시위 연행자 휴대폰 압수... 페북·카톡까지 뒤졌다」, 『한겨레』, 2015.4.23.
69 「"이 꽃이 무섭냐" 분향소 가던 유가족·시민들 경찰과 충돌」, 『미디어오늘』, 2015.4.17.
70 「세월호 시위에 고농도 캡사이신 물대포 난사... 돌연사도 가능」, 『참세상』, 2015.5.2.
71 「CCTV로 세월호 집회 감시·지휘한 서울경찰청장 고소」, 『뉴시스』, 2015.5.6.
72 「사복 경찰 또 세월호 유가족 미행하다 '들통'」, 『한겨레』, 2014.7.14.

〈사례〉

초기 국회에서 농성하실 때, 아. 그때 짜증나는 인권침해가 있었구나. 그때 버스에서 못 내리게 했었어요. 입구를 경찰이 막고 있었어요. 왜 못 내리냐고, 우리가 범죄자냐고, 왜 버스에서 못 내리냐고 했더니, 아 여긴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다가 어머님들이 화장실가고 싶다고 하더니 경찰청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 여경이랑 동행하라고. 범죄자처럼. 실제로 어머님들이 화장실 갈 때 여경 데리고 갔다왔어요. 그런 게 심했어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범죄자도 아닌데 뭐 하러 경찰이 우릴 데리고 가요. 저희가 국회 근처만 가도 경찰들이 졸졸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 (최O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집회 중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와 최루탄 가스를 쓰고, 연행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사례〉

그러다가 청운동에 가족들 있었잖아요. 그때 또 못들어가게 하는거야. 학생 부모들은 다 명찰을 달고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명찰 다는 부모들 많아요. 또 못 들어가게 해서 가족하고 똑같이 했지. 형사 여기〔얼굴〕까지 〔올려서 신분증을〕 보여줬어. 그래서 내가 이거 꼭 보여줘야 되냐고. 상부 지시래. 이거 뭐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냥 유가족이다 하면 보내 주면 되는데 굳이 일일이 검사 다 하는 거예요. 벽을 다 쌓아 놨잖아요. 그때 기자하고 유가족 아니면 못 들어가게 했어요. (김O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안 그래도 토요일에 〔사람들〕 연행을 했잖아요. 나도 한 번 차벽 쌓는데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어떤 시민이 둘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잡혀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차를 바퀴 붙잡고 하는데도 당당하게 끌고 가더라 경찰들이. 나쁜놈들. 시민하고 나하고 차 밑에 들어가서, 차벽 쌓아 놨으니까, 나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나는 노란 자켓 입고 있으니까 유가족인줄 아나 봐, 그래서 나보고 유가족이냐고 해서, 못 믿나 봐, 그래서 이거〔신분증〕 또 꺼내서 보여 줬거든

요. 그 사람은 결국 연행됐어. 자기는 시위하는 게 아니고 차 밑으로 들어가서 한 번 들어와서 확인만 한다는데 그래도 잡아끌고. 안 갈라고 그 사람은 나 내일 회사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끌고 가더라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오늘 보니까 경찰서 과장 경질 됐더만. 그 사람도 그날 광화문에서 그랬잖아요, 방송으로, 연행하라고. 저번에는 해수부 왔을 때는 경찰이 뭐랬는 줄 알아요 우리보고? 무전기가 다 달려 있어, 우리한테 "야 유가족들 쓸어버려." 쓸어버리래.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우리가 차도로 가면 위법이죠. 차도에는 차만 가야 돼. 인도에는 사람만 가야 되고. 그런데 인도로 가는데도 경찰이 막아. 그러면 그게 누가 불법이에요? 경찰한테 그랬다니까, 나는 지금 인도로 가고 있다, 그런데 왜 막냐, 내가 불법이냐 니가 불법이냐라고 하니까, 경찰이 왜 먼저 불법을 저지르냐, 왜 막냐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저기 너머에 불법 시위를 할 조짐이 있다, 그래서 못 가게 한다, 그래서 내가 참석할 것 같대. 그럼 나는 참석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보내 줘야 할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불법 시위에 참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막는대. 그러면 차도에는 가면 불법이고, 인도도 자기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2) 쏟아지는 혐오표현

단원고 유가족들은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까닭에 빈번하게 혐오세력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유가족들은 시체장사꾼이라는 막말을 들어야 했고[73], 종북세력, 거지근성[74], 선동꾼[75] 등과 같은 말을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도 들었다. 유가족들은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혐오 표현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에 대응해 법적인 조

73 「양평군의원, 세월호 유족에게 "시체장사꾼" 막말 논란」, 『오마이뉴스』, 2014.9.26.
74 「세월호 유가족 비하 SNS 파문의 약사회 부회장... 해임 이뤄질까?」, 『메디컬투데이』, 2015.5.20.
75 「권은희, 세월호 실종자 가족 내 '선동꾼' 주장 파문」, 『시사포커스』, 2014.4.22.

치를 취하기도 했다.[76] 그러나 혐오 표현은 온라인에서만 오가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폭식투쟁'[77]을 벌였고, 서북청년단은 추모리본을 철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78]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쏟아진 혐오 표현은, 특정 단체나 집단이 조장하고 양산한 것부터 개인의 감정 발산까지, 종류가 다양했다.

〈사례〉
처음에는 시체팔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례입학 때문에. 너무 열 받아서 제가 댓글로 싸웠어요. 그 사람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기본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옆에 천막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 천막들도 있고, 집회할 때 종북처벌 방송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고. 집회 발언 중인데 종북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뭐 꼭 단체가 아니라도 개인이 와서. 달빛행동 할 때, 인사동을 가로지를 때, 저는 물도 맞아봤어요. 식당 위에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한 컵도 아니고 무슨 대야로 뿌린 거 같아요. 거기 사람들 맞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되게 많아서.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직접 겪은 거긴 한데, 저는 서명 받으러 갔다가, 자식 죽었는데 슬퍼해야지 여기서 니들이 이러는 게 말이 되냐고, 니들이 유가족을 이용하냐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런 적 있어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76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 회원 실형 선고」, 『한겨레』, 2015.5.29.
77 「일베 등 '보수 청년'들, 광화문 세월호 단식 농성장서 '폭식 투쟁'」, 『뉴시스』, 2014.9.6.
78 「'서북청년단 재건' 새기고 세월호 추모리본 철거 시도」, 『한국일보』, 2014.9.29.

〈사례〉

서북청년단이나 일베나 그런 사람들이 맞은편에 와서, 종북세력 물러가라, 북한…. 그 사람들 한 번 만나 보고 싶어. 우리가 무슨 종북이에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일베가〕 단식할 때 많이 애를 먹였는데, 지금은 맞은편에 와서, 현수막 두 개 걸려 있잖아요, 방송에서 하고. 지금 유가족 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00(희생학생) 아빠하고 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끔 부딪히는 모양이더라고. 와서 지금도 천막 걷어달라고 하고 부딪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다른 문제인데 어묵 사건… 그것도 한 명 구속되어 있고 한 명 더 조사 중에 있을 걸요? 걔 부모가 처음에 왔더라고. 왔길래, 처음에 구속된 애 부모가 왔길래, 부모하고 아들하고 왔길래, 분향소 한 번 더 갔다와라, 가 보면 나오거든, 학생이 250명…. 그냥 생각 없이 쓴거야 댓글들…. 결국 구속됐지 한 명. 1년 선고 받았더만. 한 명 또 지금 조사 중이에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3) 각종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지원 방식

유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얻지 못했고, 가족협의회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심리치료의 경우 유가족의 의사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와 치료받으라고 종용했다. 심리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심리치료사가 매번 바뀌는 일이 있었고[79], 특히 부모들은 나이가 어린 상담사 또는 의사와 상담을 하는 방식의 치료에 공감할 수 없었다. 형제자매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제공되지 않다가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색 갖추기 수준에 머물렀고 형제자매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79 「이런 나라에서 왜 내 새끼 낳고 키웠는지」, 『여성신문』, 2015.4.13.

〈사례〉

아, 고대병원에는 저기가 있어요, 우리 신랑 친구 분이, 지인이 있어서 〔병원 통해서 했다〕 그리고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치료비 걱정하지 말라고, 〔지원이 된다고?〕 네, 지원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군요, 그니까 직접적으로 정부 관계자를 두고, 담당 공무원이나 그런 얘기들을 들은 게 아니라 아는 분을 통해서?〕 네, 여기 온마음센터 팀장님도 지원될 거니까 괜찮다고, 지원 받으라고.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지원 관련 정보는 유가족대책위를 통해서 들었어. 직접 신청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전화 감면 등의 지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을 한 적은 없어. 도시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하지 않았어.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이 구걸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없고…. 한번은 집으로 도시락이 3일치 배달되어 왔는데 엄마와 막내가 먹기에는 너무 매웠어. 다른 사람을 준 적이 있어.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집에 문을 막 두드려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트라우마센턴가? 상담 받으시래요.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문 두드리면서 상담받으라는데, 누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미리 전화 연락을 해서 문자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솔직히 유가족이란 거 빼고 생판 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게 무례한 거죠.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가니까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주 젊은 의사가, 나이 30대 초반밖에 안 된 의사하고 방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어. 한다는 말이,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나마나 한데… 그냥 그렇습니다…. 한참 있다가, 마음이 좀 어떠세요? 할 말이 없는 거야. 둘이 10분 동안 앉아서 얼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나오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야, 다음에 나오시라고.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형제자매는. 그러다가 부모들이 상담 받으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상담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느냐, 해서 나온 게 와서 아이들 데려가서 상담 받으라고, 해서 뭐 종이 A4 뽑아서 분향소에 붙여 놨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뜩이나 어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형제자매들이 거기 찾아가서 상담 받을까요?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구색 갖추기 마냥.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4) 인간관계의 파괴

유가족은 배·보상 관련된 주변의 시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에 공감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거나 관계가 끊어졌다. 유가족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더이상은 참사 이전처럼 다른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단원고 희생학생 부모들은 직접 나서서 투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희생학생 형제자매들은 삭발을 하는 등의 싸움을 해 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까지 잃을까봐 걱정하는 한편으로[80], 본인의 슬픔을 내색할 수 없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81] 단원고 희생교사 가족의 경우 일부 다른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과 관계가 불편하다.

〈사례〉

가장 힘든 거, 가까운 측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 얘기하고 그러는 거 제일 힘들어요. 야, 우리 애들 어디 갔다? 왜 너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이렇게 툭툭 던졌을 때 너무 힘들어요. 나 그래서 저 사람은 앞으로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되요. (고0희, 희생학생 부모)

〈사례〉

가족여행을 가도 죄책감 때문에 다 즐기지 못하고 결국 도보행진 하러 가서 또

80 「형제·자매 보낸 우리, 엄마·아빠 삭발까지 보게 됐다」, 『미디어오늘』, 2015.4.5.
81 「형제자매들... "부모님 앞에서 슬픈 내색 못해요"」, 『노컷뉴스』, 2015.4.11.

행진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저희 가족은. 가족 일상이 거의 없고 일상이 그냥 세월호에 다 관련된 느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화장품이 어떻고 요즘 연예인이 어떻고 요즘 이게 맛있고. 너무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살기도 싫은데. 이해해 주는 친구도 별로 없고. 노력하는 친구는 진짜 한두 명? 지금까지 연락 오는 친구도 대학에서 한두 명?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인사도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해요, 지금은. 지금 거의 연락하는 거는 〔곁에 있는 다른 희생학생 형제자매를 가리키며〕 여기 그리고 다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형제자매들밖에 연락을 안 해요. 거의 다 잘린 상태죠.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사례〉

박근혜가 자식이 없어서 우리 고통을 이해 못해. 그런데 아이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이가 있는 러시아 친구가 전화 와서 "모두 잊으라"고 말했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했어. "내가 돈을 모두 줄 터이니 너네 식구와 우리 식구와 바꾸자고. (쿠0000가,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당시에, 많이 와서 물어 봐요, 보상금 얼마 받았냐고. 그래서 4촌 6촌하고 안 만났어요, 통화도 안 하고. 친형제만 만났어요. 친형제는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오빠, 형님 얘기하는 건 다 믿지. 4촌 6촌은 안 믿고 정부 말만 믿는 거야, 언론만.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우리 입장에서 우리도 자식이잖아요. 선생도 딸이고 학생도 딸이고. 똑같은 자식

이야, 따지고 보면. 직업상 선생님들이 자기자식들 안 구했다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 있는데, 선생님 가족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작년 9월 10월달 이때 MBC에서 보도가 올라와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 빵가게 과일가게나 식당이나…. 그 동네 12년 살았으니까. 나를 보는 식당 주인이나 과일가게 주인이나, 나를 보고 당시에 그런 걸 물어 보는 거야, 보상금 얼마 받았냐고. 그게 굉장히 듣기 싫더라고. 그래서 뭔소리 하냐고 하니까, 보상금 다 나왔다는데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더라고, 사람 자체를 안 만나고 싶더라고. 유가족 외에는 안 만났어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5)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그 결과 순직에 따르는 배·보상도 받지 못했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이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지만, 공무원 순직 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이들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82] <공무원연금법>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순직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정규직 공무원일 경우에만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두 명은 순직자가 아니라고 발표했다.[83] 이에 대응하여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계종노동위원회> 등은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를 촉구하는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참사 당시 기간제 교사들이 학생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고 교감이 증언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사자 신청을 기각한 일도

82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 '순직 심사' 해야」, 『한겨레』, 2015.6.2.
83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죽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정부, 기간제 교사는 교원공무원 아니다... 대한변협 "법원·국회사무처에서 교원공무원 인정"」, 『미디어오늘』, 2015.7.1.

있다.[84] 또 교직원단체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어 따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던 정규직 교사들과는 달리, 기간제 교사들은 교직원단체보험 대상이 아니었고 학교에서도 별도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아 아무런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85]

〈사례〉
복지카드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업무 수행 중에,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이잖아요? 업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니까 보상 배상이 나가는데,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은 비정규직이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또 하나는 정규직 선생님들은 순직 처리가 됐어요. 기간제 선생님들은 순직 처리도 안 되고, 의사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또 의사자는 왜 안 되냐 하면 증인이 없어서 안 된다, 학생들 다 죽어버려서. 본 학생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증인이 없어서, 증인을 가져와라, 복지부에서는. 증인이 있어야 된다. (김0욱, 희생교사 부모)

〈사례〉
여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구하러 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걸 증언 하시는데, 교장선생님도 그것까지 받아 적어서 복지부에 냈어요. 교감선생님이 여선생님들 다 학생들 구하러 밑에 갔다. 교감선생님이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학생들이 증언을 해야 된다. (김○욱, 희생교사 부모)

(6) 외국 출신 유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결여

러시아 출생 유가족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참사 발생 초기 학교 측에서 어머니

84 「죽어서도 비정규직 차별 세월호 희생 교사들 '순직' 인정 안 돼」, 『레디앙』, 2015.5.21.
85 「기간제 교사는 여행자 보험 가입시켜 주지 않아」, 『한겨레』, 2015.5.23.

전화번호로 참사 소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는 문자 메시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유가족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
학교에 슬○바의 연락처로 엄마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학교에서 사고 당일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 11시경에 사무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자꾸 메시지가 온다고 말해.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사례〉
엄마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정보는 나를 통해서 알아. 엄마에게 회의, 집회 갔다 오면 이야길 해 주려 노력하나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TV 뉴스 등을 보면서 궁금한 점은 나에게 묻지. 그러면 내가 아는 한에서 설명을 해 주는 편이야.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7) 장례 진행 절차의 문제

국적을 외국에 두고 있어 해당 대사관의 확인서류를 받아야만 화장을 할 수 있는 희생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교육청은 밟아야 할 절차도 유가족의 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장례를 빨리 진행하자고 유가족을 재촉하기만 했다.

〈사례〉
이미 대사관에서 알고 있어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안산으로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교육청이 시신이 계속 들어오니까 장례를 빨리 치르길 원했어. 그러면서 교육청이 빈소를 지켜줄 터이니 장례를 빨리 하자고 했어. 그런데 나는 대사관에서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하루 기다려라. 그리고 발인식을 다음날 아침에 하겠다고 하니, 저녁에 하자며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자고 하는 거야.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2) 생존학생

75명에 이르는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피해자인 동시에, 참사와 구조 현장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폐해와 부조리를 지켜본 목격자이다. 침몰과 탈출 과정에서 이미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겪은 생존학생들은, 집에 돌아온 후에도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추억을 공유한 친구들, 학교생활을 함께하던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상실을 경험했다. 거기에 더해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까지 짊어져야 했다. 이 같은 생존학생들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가 생존학생들에게 제공한 치유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적절했다. 그 결과 생존학생들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러도 오히려 새로운 고통을 겪어야 했다.

(1) 생존학생의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

피해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특히 단원고 생존학생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를 의식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생존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떠들썩하게 발표했고, 자원봉사 활동이 잇따른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러다 보니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다른 생존자들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생존학생과 그 가족이 참사를 경험했기에 짊어져야 했던 여러 가지 부담이나 그 후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새로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생존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조차 힘든 수준이다. 개개인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전적으로 가족에 전가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생존학생이 겪는 고통은 다시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존학생의 고통을 배려하고 감싸안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원 프로그램을 생존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확대해서 제공해야 한다.

〈사례〉

생존학생들 중에는 자살 시도한 아이도 있고 웃지도 않는 아이도 있고, 며칠 전엔 교실에 가서 두 시간인가를 울어 탈진해서 병원 실려간 아이도 있고요. 아이들을 봐서는 학교에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은 6시면 퇴근하고, 이후엔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학교는 감추려고만 해요. 〔중략〕 이 나라에서는 트라우마가 정신병이 아님에도 정신병으로 만들어야만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요. 이게 잘못된 거지요. 〔중략〕 처음엔 〔학교에〕 닥터 두 명에 임상심리사, 상담사 등 네 명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결국 닥터 1명에 임상심리사 2명이 되었고, 70명만 그 분들이 다 보는 것만 아니고 1학년 3학년도 있으니 아이들 800여명을 보는데, 부족해서 교육부장관 교육감에게도 얘기했지만, 듣고 갈 때는 해 준다 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기간도 내년 6월인가 12월〔까지〕로 정해서, 유가족, 생존가족 형제자매도 단원고간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는 아이들을 다시 수장시키려는 것 같아요. (오0연, 생존학생 부모)

(2) 생존자인 동시에 학생이라는 특수성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인권 실태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십대 청소년'이라는 점과 '올해 고3이자 곧 닥쳐올 졸업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이 뒤섞인 환경에서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겪어내야 했던 특별한 고통이 있다.

① 일방적인 보호와 통제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을 일방적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보호주의가 강력히 똬리를 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십대인 참사 피해자는 단지 보호자 또는 전문가가 '진단, 치유, 보호, 해석, 대변'해야 할 존재로만 여겨졌고, 사회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격리형 치유'와 '통제형 보호'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이라는 이유로 학교측 통제도 강화되어 갈등이 더 늘고 있다.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생존학생들이 구조과정에서부터 구조 직후 언론취재에 노출된 과정에서도, 병원과 연수원에서의 치료 과정에서도, 학교생활에서도, 혐오표현이 쏟아지는 인터넷공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직면해야 했던 것은 오히려 십대 피해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폭력적 태도였다. 한편으로는 '보호'를 명분으로 한 통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약자'에 대한 무시를, 십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사례〉

신체검사는 귀찮아서 도망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힘든 건 심리검사…. 막 1000문항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게 한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거기서부터는 계속하고 그리고 같은 걸 연수원 가서도 계속하고 학교에서도 계속하고…. 아예 검사지 이름이 똑같아요. PS~ 뭐 이런 이름의 검사지를 만날 해요. 병원에서는 3일에 한 번, 연수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서도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 번 이상씩 받았어요. 〔중략〕 애들이 진짜 힘들어 해도, 검사지에는 성실히 답 못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남자애들은 다 그냥 빨리 해 버리려고 체크만 하고…. 〔연수원 생활〕 초반엔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싫었어요. 밥 먹고 검사하고 밥 먹고 검사하고 밥 먹고 검사하면 그러면 밤 열 시예요. 그럼 자야 돼요. 저희 조 애들은 하기 싫어서 뛰쳐나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수업하면 좀 나아졌어요. (박민규(가명), 생존학생)

② 자기결정권과 참여권 박탈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언어를 찾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청소년 시기는 자율성에 대한 열망이 유난히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십대 참사 피해자에게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온전히 보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참사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생존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철저히 박탈해 왔다. 치유 프로그램이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잃어버린 친구를 애도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도, 심지어 진상규명이나 배·보상 문제처럼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생존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뭍사람이 관심을 쏟았지만, 그러한 관심이 '어린 학생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에 그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

〈사례〉

학교에 불만은 너무 많은데, 이미 이거 때문에 한 차례 분란(?)이 있었어요. 3월 달에. 갑자기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았고 강제적이었어요….

충분한 동의 없이, 얘기 없이, 정한 규칙들을 몇 주 후부터 실시한다고 말하고 마음의 준비하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동아리 활동도 외부 활동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전면 금지 시킨 거예요. 동아리 담당자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면담 신청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 〔중략〕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정말 꼭 필요한 거에 한해서만 외출이 되게끔. 볼링부, 포켓볼부 이런 애들은 학교에서 볼링이랑 포켓볼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꼭 필요한데 아예 금지시켜 버리니까 당장 걔네들은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인 거예요. 그래 갖고 꼭 필요한 거에 한해서는 나가게끔 됐고.(박민지(가명), 생존학생)

〈사례〉

〔연수원에 있을 때〕 00연구소에서 처음부터 들어왔어요. 자기들 말로는 4개월 프로그램이래요. 그걸 열흘 동안 다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나 부모한테나. 〔중략〕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연구대상, 마루타인 거예요. 그 사람들 논문 쓰기 위한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중략〕 아이들 친구들 시신이 다 건져지기도 전인데도, 계속 후벼 파서 나오게 해야 한대요. 후벼 파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딱 잡아서 상담할 시간이 되면 하고. 어떤 아이들은 거기서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상담이냐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저기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트라우마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나타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사고 나자마자, 무슨 트라우마 치료를 해 주겠다고 와 가지고 후벼 파 놓기만 하고, 자기들은 열흘 동안 딱 하고 가버리니까.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율성을 침범당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애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 혈기 왕성한 애들을 몇 주 동안 넣어 놨으니까, 1, 2주 넣어 놨으니까. 그때 당시에 잘 설명해 줬다고 해도 잘 듣지도 않았겠지만, 왜 입원해 있어야 되는지 설명도 못 듣고 우리가 입원해 있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그리고 암튼 그럼 좋아 입원은 했어, 근데 왜 퇴원을 안 시켜 주냐, 그거 땜에 분노를 느끼는 애들이 일부 있어요. 〔중략〕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청소년이라는 특징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실질적

으로 얘네들이 입원해야 할 만큼 큰 부상이 있던 게 아닌 상황에서, 아이들을 입원시킨 거고. 〔중략〕 잘은 모르는데 어른들이 걱정이 되니까 방송을 못 보게 한 다든가…. 근데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사실 문헌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청소년이니까 쪼금 다르게 생각했어야 되는 게, 그런 거 제한, 그리고 외출 못하게 하는 거, 친구 장례식장 못 가게 하는 거, 그거는 부모님들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제한들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거 같아요. 〔중략〕 이런 큰 트라우마는, 청소년들 트라우마는 우리는 처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다들 미숙했던 거죠.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③ 이후 삶에서 예상되는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생존학생들은 중대한 생애 전환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부과되는 '사회적 과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사의 경험에서 오는 고통, 잃어버린 친구들로 인한 상실감,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진상규명 요청 등,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은 생존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새로운 짐으로 돌아온다. 대학 진학, 군 입대, 취업 등 졸업 이후 펼쳐질 시간과 공간에서 새롭게 마주해야 할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다.

〈사례〉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학을 가면 혼자라는 거. 대학 가서 친구야 사귀겠지만, 친구들이 넌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살아왔어?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일 것 같아요. 〔중략〕 아이가 또 상처받고 그런 게. 근데 시행령에 보니 5년이라던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군대도 문제이고. 솔직히 군대 면제도 해 줄 수 있어요. 34명 군대 안 간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닌데 남자애들 부모는 그것 때문에 가슴 쓸어내려야 하고, 이 아이가 군대 가서 사고라도 치면 어쩌나….” (이0선, 생존학생 부모)

〈사례〉

생존자 아이들 치료 어떻게 할거냐, 그 정답은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주는 게 사회의 역할인 거죠. 일괄적으로 몇 년? 생존자 아이들 5년이면 끝나, 이런 거가 아니고, 어떤 애는 평생을 받아야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지금도 필요 없는 애가 있고, 그 한 명 한 명한테 맞게 가야 되는 거고, 교육적인 거나 보상이나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별적으로 맞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86]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3) 희생자 가족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가족 잃은 아픔에 더해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들의 말을 들어 보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과 아픔의 무게는 각기 다를 수 없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대한민국의 국민인 일반인 희생자들의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세월호를 잊지 말아 달라. 그리고 그 속에 일반인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 달라."[87] 구조는 하지 않은 채 구경만 했던 정부는 선체 수색과 시신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 등, 참사 이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무능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 기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출신지역이나 가족관계 등이 매우 다양했던 비단원고 희생자들과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혼란과 좌절감은 더욱 심각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원칙 없이 우왕좌왕했다. 때로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규정을 들이 밀었고, 때로는 근거 없이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편중된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의 부재 역시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더 큰 아픔과 소외감을 겪게 만든 요인이었다.

86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미국의 버펄로 크리크의 예처럼 인재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단적 트라우마가 지속돼 치료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윤호경 고려대 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생존학생들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상실감, 혼자 살아 나왔다는 자책감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청소년기 특성상 어른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지 않아 치료가 어렵다"며 "최소 10년 이상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치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세월호 생존 학생들, 국가 차원서 10년 이상 치료 필요하다」,『한국일보』, 2015.4.19.

87 "침묵을 지키며 차별과 무관심을 감내해 오던 비단원고 유가족들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다. 이 말은 그날 이후 비단원고 유가족들이 줄곧 정부와 사회에 대해 외쳤던 울분의 호소이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 "참고 또 참았다... 죽음도 차별하냐"」,『오마이 뉴스』, 2014.05.22.
「세월호 일반인 희생가족... 같이 참사 겪었는데 차별당해」,『중부일보』, 2014.5.23.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차별 여전」,『시사INLive』, 2014.7.22.

(1) 현장 정보제공 체계 부재

참사 현장과 관련해서 모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가 공통으로 토로하는 사항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몸소 뛰어다니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었고, 현장의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부서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빚어진 혼란을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더 첨예하게 겪어야 했고, 때로는 차별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사례〉
명단을 찾으니까, 해경 가니까 없는 거야. 전화를 받고 갔는데도. 해수부 쪽 가서 물어 보라고 하더라고. 해수부에는 명단에 이름이 있는 거야. 한 사무실에 있는 놈들도 서로 명단이 다른 거야. 지들끼리 싸우더라고.〔중략〕 그냥 인천 해경에서도 명단에 있다는 것만 알려 준 거지. 어디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안 알려 줬지. 전혀 없었어.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목포에서부터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다녔어요. 어디 있는 줄을 모르니까. 누가 알려 주는 것도 아니고. 목포 해남 다 들렀다가. 없더라고요. 진도체육관 찾아 보니 없고…〔중략〕 어디가 어딘 줄도 모르고. 천막도 없고 배 들어오는 데만 있고. 혹시나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침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비는 조금씩 오고. 어디 갈 데는 없고.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주소가 서울이니까 서울시에서도 공무원이 나와 있으니까 서울시 공무원한테 물어 봐라 해서. 전화번호 알려주는데 그 사람은 팽목에 가 있더라고.〔중략〕 팽목에서 뭐하냐고 했더니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뭘 대기하냐고 했더니〔중략〕 서울 사람 별로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팽목에 있다고 하더라고. 황당하더라고.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내가 가서 직접 이야기해서 뭘 얻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는 건 없었던 것 같아. 뭐 필요한 거를 가서 이야기해야지. 예를 들어, 처음부터 숙소가 여기라든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안내가 전혀 없었고, 구조상황도 전혀 안내 못 받았고. 모니터, 사람들 통해서 듣는 게 전부이고.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2) 구조, 수색 과정에서의 차별

참사 직후 많은 사회단체가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했지만,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이 머물 공간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 지원도 없었다. 수습된 시신을 확인하거나 인도하는 과정에서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선체 수색 과정에서는 차별대우까지 겪었다.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중에는 참사가 나고 한 달 넘게 지나도록 선체 3층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며 분노하는 이들이 많았다.[88] 선체 3층은 비단원고 희생자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공간이다.

〈사례〉

다들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앉을 데도 없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발붙일 데도 없고. 비집고 한쪽에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가서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냐.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잠을 못 자니까 일단 힘들었죠. 잠을 잘 데도 마땅치가 않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텐트를 치는데 넘버링을 붙여요. 1부터 17번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88 "일반인 실종자 가족 ㄱ씨는 16일 오전 어제(15일)도 수색팀 고위관계자를 찾아가 세월호 3층 수색을 좀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략) 잠수사들이 3층은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중략)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3층은 상대적으로 일반인 승객과 승무원이, 4층은 단원고 학생이, 5층은 단원고 교사와 승무원이 많이 머문 것으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등은 파악하고 있다." –「일반인 실종자들은 주검수습도 차별받아」,『한겨레』, 2014.5.16.

그냥 그게 천막의 동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단원고 1반, 2반 이 텐트였던 거예요. 어디 가서 빌붙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팽목항 한쪽에 배 들어오는 데 있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처음에는 그랬어, 모르니까. 나중에는 유전자 검사하고 했고. 처음에는 일반인들도 다 가서 보고 그랬어. 나중에는 유가족만 해서, 유가족만 보여 주는 식으로.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시신은 바닥에 놓고 확인을 하래. 〔중략〕 검사한테 반말하면서 욕을 했어요. 넌 부모도 없냐. 당신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땅에다가 놨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속이 뒤집어진 거죠. 〔중략〕 그 기억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거예요. 해경 검시원도 경황이 없었겠지만 진짜 매너도 없었어요. 고인에 대한 예우는 아예 없었어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일반인 가족들은 특히나 신분증이 확인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 주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단원고 희생〕학생들은 그냥 가요. 저 기다리라고 해서 분을 삭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에요. 〔중략〕 두 명이 앉아서 뭘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 안산시에서 나왔대요. 우리 신원 확인한 사람도 못 가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가는거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신원보증을 하는 거래요. 이게 말인지…. 〔중략〕 검사가 분명히 그랬어요, 확인 안 되면 못 간다. 〔중략〕 법에 정해져 있고, 차라리 그 법대로라도 했으면 속이라도 안 상하지.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3) 추모 과정에서의 차별

비단원고 유가족 중에는 장례절차 지원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아예 장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89] 안산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때도 정부는 처음에는 비단원고 희생자를 함께 안치하지 않았다.[90] 참사 직후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세울 때도 정부는 비단원고 희생자를 고려하지 않았다.[91] "학생들은 교육 연장선상에서 참사를 당한 희생자지만 일반인은 생계나 여가 목적의 탑승이었기에 경우가 다르다"는 말이 정부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지경이었다.[92]

〈사례〉
처음에는 개인으로 〔장례를〕 하는 건 줄 알고… 얼른 빨리 가자고 해서 ㄱ병원으로 간 거지. 왜냐면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해 봤어야지. 아들도 다 살았는 줄 알고 찾으러 갔다가 그런 건데. 경험이 있나. 뭐 안내해 준 것도 없었고. (방0삼, 희생자 가족)

(4)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 지원대책 차별

정부가 제시한 유가족 지원대책은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나마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피해와 필요한 지원 사항을 분석하여 세운 대책이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 등 기존의 법체계에 기초하여 급조한 결과였다. 다만 참사에 따른 특례를 적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덧붙인 정도다. 참사 유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

89 "청해진해운 측은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측은 아르바이트생은 '여객'으로 분류돼 있다고 못 박았다. 장례비는 인천시가 지급 보증하면서 일단락됐다." -「천막에 적힌 슬픈 문구 '여기를 좀 봐 주세요'」,『시사INLive』, 2014.6.5.

90 "단원고 학생들의 합동분향소와 추모공원 설립 추진 등과는 달리 일반인 희생자들은 현재 임시분향소에조차 안치되지 못한 상황이다." -「단원고에 가려진 일반인... 차별받는 죽음」,『경인일보』, 2014.4.29.

91 "박근혜 정부는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는 자리에 일반인 희생자의 유가족은 부르지 않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 추모공원에 안치될 대상자를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로 한정했다. 정부가 안산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에, 일반인 희생자들은 처음엔 함께하지 못했다."-「참고 또 참았다. 죽음도 차별하나」, 『오마이 뉴스』, 2014.5.22.

92 "대책위는 "안행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세월호에 탄 학생들은 교육 연장선상에서 참사를 당한 희생자지만, 일반인 및 승무원은 생계와 여가목적의 탑승이었기에 정부 입장이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일반인, 승무원 희생자도 있다... 유족들 소외감 표명」,『경향신문』, 2014.5.22.

도록 했다. 그러나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그나마 특례에 따른 지원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93] 지원업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 희생자와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사례〉
00구청에서는 유가족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희생자들 전산 조회해 보면 직계자손, 가족들, 거주지를 알 텐데. 00구청 생활복지과에 전화했더니, 몰라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무슨 지원금이 나왔다고 해서 무슨 서류를 막 이것저것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00에 사는데. 대체 얼마 주시는 거예요? 하니까 42만 얼마예요. 그냥 놔두라고. 안 줘도 된다고, 그거 주면서 무슨 서류를 막 만들라고. 그런 식이었어요. 〔중략〕 00시청에 세월호 관련된 걸로 공문 내려온 거 없냐고 물어 봤어요. 컴퓨터에서 열람하는 게 아니고 프린트해 놓은 거 쌓아놓고 찾아보더라고. 00엔 〔겨우〕 나랑 둘인데. (양0환, 희생자 가족)

〈사례〉
사고 한 달 만에 지원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받은 책자에는 단원고 것만 들어가 있어요. 〔중략〕 안 되겠다 싶어서 인천시 공무원들, 인천시 의원들, 경기도 의원들, 도청 관계자들 전화를 안 해 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해서 떠들고 해서…. 일반인용 책자를 3, 4일만에 증보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럴 정도였어요.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93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 상 특별지원을 받고 있지만, 일반인 희생자들은 이마저도 전무한 실정이다." – 「단원고에 가려진 일반인... 차별받는 죽음」, 『경인일보』, 2014.4.29.
"이들은 (중략) 경기도에서는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 희생자에 대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긴급복지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천시는 차별을 두고 있다. (중략) 3차 지급부터 세월호 유족이 아닌 일반 수급자들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중략)고 분통을 터트렸다.' – 「인천지역 일반인 희생자 '소외감'... 시청앞 합동분향소 유족들 경기도와 비교 불편한 심기」, 『기호일보』, 2014.7.24.

〈사례〉

거기에 특례란 부분을 붙여 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재난안전관리법, 긴급생활지원법 등에, 현 잣대에 맞춰 놓고 일반인 가족들 지원을 했고. 〔중략〕 여기 법령에다가 직계 1촌 이내라고 해 놓고 내가 직계 1촌인데 왜 거기 내가 안 들어가냐, 그리고 특례라고 해 놓고 나서 월 소득 얼마 이상, 금융자산 얼마 이하 등을 세워 놓은 게 특례냐, 〔중략〕 그 기준의 잣대는 어딨냐, 하니까 공무원이 얘길 못해요. 입 그냥 딱 닫아.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5) 비현실적 지원 기준과 무원칙적 집행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에 초점을 맞춰 지원 대책을 세우다 보니 애초부터 비단원고 유가족 상황에는 맞을 수가 없었다. 출신지역이나 유가족이 처한 상황 등이 각기 다른 비단원고 유가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려면 희생자 가정 각각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려해야만 했다. 그러나 비단원고 유가족의 다양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았고,[94] 그나마 결정된 지원책조차도 차별적이고 무원칙하게 적용되었다.

〈사례〉

〔단원고와는 달리〕 43명의 일반인 가족 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43명 소수이긴 하지만. 가장을 잃은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중략〕 부부끼리도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아내가 주부면 바깥 대출금이 얼만지 모르잖아요. 일단 사고가 터지고 경황없는 와중에 사망신고를 하셨나 봐요. 금융에서 추심채권이라고 해서, 사망신고하고 열흘인가 보름인가만에, 하나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 갚으라고.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94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고 최00씨의 아들 이00씨는 (중략) 단원고 학생이 다수인 안산 쪽과 달리 일반인 희생자들은 지역과 국적, 생활조건이 다르고 나이도 다양하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략)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고 초기에 지원된 긴급복지자금의 경우 안산 지역은 4~6월 지급하고 3개월 연장됐지만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 절반가량은 지원 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아 아예 못 받았다고 했다." -「승무원·알바생·중국동포·초등 동창생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소외감」,『한겨레』, 2014.7.23.
"부모-자녀 관계가 대부분인 단원고 학생들과는 달리 일반인 가족들은 관계가 다양해 유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다. 그렇다보니 지원을 못 받는 가족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위나 친척, 형제 등 가족관계가 다른 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 다르다 (중략)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대책위 위원장 인터뷰) -「여전히 소외된 일반인 희생자들... 100일간의 설움」,『KBS인터넷뉴스』, 2014.7.23.

〈사례〉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원을 못 받은 가족들만 또 따로 뽑았어요. 밑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한테 도움 요청해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장관님 만나봤어요. 장관님 만났더니 그 다음날 바로 나와요. 〔중략〕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중략〕 대놓고 싸웠어요. 〔중략〕 안 되는 거 기준 적용시키라고. 왜 갑자기 된다고 하냐고. 내가 거지새끼냐고.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6) 언론과 사회적 관심의 부재에 따른 소외감

정부의 차별적인 유가족 처우에 더해 언론과 사회의 관심도 편중됨으로써 비단원고 유가족의 아픔은 더욱 커졌고 깊은 소외감을 겪어야만 했다.[95]

〈사례〉

맞아요. 우리는 〔단원고에 관심이 집중된 것 때문에〕 서운했어요. 서운한 것도 그랬지만 알바다 보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주위만 뱅글뱅글 도는 식이었지. (방0삼, 희생자 가족)

〈사례〉

어디 가서 얘길 할 수가 없어요. 해수부가 되었든 해경이 되었든. 처음에 결성한 이유는 솔직하게 저희의 이야기가 부각되기를 바란 것도 있었어요. 우리도 희생자 가족이 있다. 자꾸 단원고 얘기만 나오니까. 계속 거기서 소외가 되었던 거예요, 실질적인. 보수 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자꾸 그 얘기. 근데 지금도 그래요. 1년이 지났음에도 언론에는 학생들 위주에요. 저희는 들러리예요. 단원고 얘기 50분 얘기하면 일반인 가족 얘기 1분.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95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차별 여전」, 『시사INLive』, 2014.7.22.
「여전히 소외된 일반인 희생자들... 100일 간의 설움」, 『KBS인터넷뉴스』, 2014.7.23.

〈사례〉

20일 동안 체육관에서 잠을 못 잤어요. 승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중략〕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찾아서 올라갔으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어. 〔중략〕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20일만에 체육관 들어가서 발 뻗고 자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간호장교가 링겔 놔 주면서 옆에 앉아서 울고. (양0환, 희생자 가족)

〈사례〉

대통령도 희생자에 단원고 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로 부를 때 단원고 학부모들만 몰래 불렀잖아요. 〔중략〕 정부는 그때부터 편 가르려고 했던 거예요. 과정을 지켜보니까 나도 거기에 놀아난 것밖에 안돼. 〔중략〕 그 놀음에 놀아난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차별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니들 몇 명 안 되고, 니들 소수고.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서 유가족들 계속 욕먹으면 니들은 가만히 있겠지. 마흔몇 명 정도야 가만히 있겠지.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사례〉

우리는 아무 힘이 없잖아, 지금. 그렇다고 국민들이 돈이나 겁나게 받고 더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 줄 알고. 동네에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배상 다 받고 끝난 줄 알아. 끝나긴 뭘 끝나. 지네들이 해 준 게 뭐 있어. 우리한테 해 준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중략〕 그러니까 나는 TV 방송에 우리 진실을 못 보여 주냐 이거야. (방0삼, 희생자 가족)

4) 생존자

비단원고 생존자 그룹을 상대로 폭넓게 인터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로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남성 두 사람과 세월호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여성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앞의 두 사람은 생존 화물 기사들과 비슷한 상

황을 겪고 있었던 반면 세월호 조리원의 경우는 '생존선원'이라는 특수한 처지에서 오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다. 셋 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터라 현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계문제'를 꼽았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생계의 어려움'이 단지 '일을 못해서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끊겼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트라우마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후유증, 탈출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으로 한동안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으며, 이것이 언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약이 없다'는 점이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살기 위해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쌓여 간다. 경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시 가족이나 여타 인간관계 불화를 불러온다.

노동이 생계 해결 수단인 동시에 개인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동력 상실에서 오는 박탈감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생존자들은 참사 이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에 기대어 어려움을 이겨내며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애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사회적 지원이 없어 혼자 헤쳐 나가야만 하고, 그 결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비단원고 생존자들은 또한, '세월호 생존자'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사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통렬하게 호소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듯한 주변사람들의 태도를 대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어야 한다'거나 '내가 나오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밀친 것은 아닐까' 마음속으로 괴로워했다.

세월호 조리원은 '선원'이라는 특수한 처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지역사회에서 고립을 경험했다. 사실 여성 조리원은 참사 전까지 혹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했다. 조리실과 기숙사만을 오가는 고립된 환경에서 서너 시간에 불과한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종일 일해야 했다. 게다가 조리원은 선원이라고 하지만 침몰과 관련된 어떤 책임도 없는 지위다. 그런데 사회 시선은 무분별하고 가혹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 앞에서 비단원고 생존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다 보니 함께 모이기 힘들다는 상황에서 느끼는 답답함도 호소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이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1) 지자체마다 다른 생존자 지원

똑같은 피해자인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피해 당사자 주소지에 따라 달라졌다. 피해자

지원 내용을 지자체마다 임의로 결정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원 내용에 차등이 생긴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이러한 상황이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결여한 우리 사회를 여실히 증명한다.

〈사례〉

〔다른 생존자 중에〕 부천 사는 친구한테 얘기 들어 봤더니 거기는 뭐 여러 번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관성이 없고. 그냥 지방자치제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 버리고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다 다른 거죠. (이0종, 생존자)

(2) 재취업 및 전직에 대한 지원 미비

생존자들은 참사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후유증뿐만 아니라 탈출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에도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참사 이전과 비교해 현저히 저하된 체력, 집중력 부족 등이다. 이는 곧 자신의 직업이 요구하는 노동 강도를 따라갈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지원을 받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지원은 아주 미미하고 모든 과정을 혼자서 감내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자들은 이 과정에서 반복해서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이 전직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는 매우 제한된 조건의 일자리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례〉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이에 뭘 바꾼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단체급식 하는 거를 하려고 두 달 간 〔단체급식조리사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했어요. 〔중략〕 근데 복지사님이 일자리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는데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중략〕 체력이 안 따라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중략〕 며칠씩 가서 일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수를 늘려 가서 취업을 하면 몰라도 지금 월급제로 들어가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김0임, 생존자)

(3) 직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원

화물기사나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은 직장인과 다르다. 아래 사례는 참사를 겪은 피해자가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게 된 경우다. 피해자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이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부가세만 지금 한 7천만 원 밀려 있어 가지고. 그때는 제주도 가 가지고 돈 벌어서 부가세 갚으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배가 사고 나는 바람에 못 갚은 거죠, 여태까지. 그 전에 한 것도 못 갚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 주겠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중략〕 다달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좀 넣어요. 그거마저 안 넣으면 다 잡아넣더라고요, 세무서에서요. (강0기, 생존자)

(4) '세월호 생존자' 꼬리표 붙이는 사회적 시선

비단원고 생존자들은 자신에게 붙어 다니는 '세월호 생존자'라는 호칭이 버겁다. 이 호칭 때문에 이웃과 가족 사이에서 소외당한 경험이 모두에게 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외면한다고 느낄 경우 상처가 크다. 자신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이 오히려 죄가 되어 심리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물론 이런 왜곡된 선입견에 영향 받지 않고 '생존자'인 자신을 예전처럼 믿어 주고 받아들여 준 이웃들에게서 더욱 큰 힘을 얻은 경우도 있다.

〈사례〉
전에 있던 친구들하고 〔만나면〕 바로 나오는 게 또 '세월호에서 살아온 친구야!'

벌써 이렇게 탁! 소개가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데서부터, 그건 하나의 사고지만 내가 거기에 늘 움찔움찔하는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살고 있는 거죠. 〔중략〕 저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있을까, 심리 상태가 어떨까, 이런 〔배려〕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의식이 부족하다…. (이0종, 생존자)

〈사례〉
가족들도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중략〕 내가 어려울 때마다 인제 동생한테 금전적인 저걸, 도움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보상받은 줄 알아요. 우리 가족들도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내가 집에 있는 줄 알지. 내 성격 상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김0임, 생존자)

〈사례〉
전 승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배에서 조리를 했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선원에 속하니까 거기서 근무했다고 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요.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아나온 거에 대한…. 동네 분들은 제가 배타는 거를 아시니까는. 〔한숨〕 오니까 원망 소리가 인제 많이 들리더라고요. 선원들이 다 자기네들 살자고 다 승객들을 버리고 나왔다고 보도가 많이 돼 가지고 저도 거기에 인제 일조한 사람으로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김0임, 생존자)

(5)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생존자들

비단원고 생존자들은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없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힘이 되련만,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단원고 생존자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파편으로 남아 있다. 생존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생존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후회를 할 거 같아서 사회복지사님한테 생존자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없냐고 〔물었어요.〕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입장은. 그러니까는 말을 못한 거예요. 유가족들한테 해 봐야 비난만 당할 거고, 그렇다고 생존자들한테 가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도 연락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김0임, 생존자)

5) 생존 화물기사

세월호는 여객선이지만 화물을 운반하는 대가로 얻는 이윤이 훨씬 큰 배였다.[95]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들은 세월호에 자주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 3층 선미에 화물차 기사용 선실을 따로 마련해 두었을 정도다. 선실의 위치는 기사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생존한 화물 기사들은 2중 3중으로 고통 받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은 '어른' '생존자'라는 죄책감이다. 참사 초기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증언자로 이들을 소개하던 언론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살아남기 급급했던' 파렴치한 어른이라고 어조를 뒤집어 버렸다. 사회 분위기도 자연스레 언론을 따라갔다.

화물차 기사가 겪는 두 번째 고통은 화물과 화물차를 잃은 데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경우 차주인 동시에 기사인 화물차 기사에게, 화물차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매월 적게는 160만 원, 많게는 3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 납입 기간이, 앞으로도 몇 년이나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생존 화물차 기사들은 참사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는 배를 탈 수 없다는 공포를 겪고 있다. 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탈것에도 이 트라우마가 작용하여, 생계수단인 운전조차 할 수 없다고 기사들은 호소한다. 실제로 화물기사 중 일부는 생계 때문에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 그만두기도 했다.

화물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존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도 있다. 참사 당시 제대

95 「세월호 참사: 청해진, 화물장사로 29억 초과 이익」, 『노컷뉴스』, 2014.5.6.

로 작동하지 않은 재난대응 시스템과 그 후 이어진 실효성 없는 지원정책이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생존자와 일선 공무원 간 갈등을 불러왔고, 생존자들은 이 과정에서 다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구조과정을 진술할 때 모든 생존자는 "구조가 아니라 탈출이었다"는 말을 덧붙인다.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해경정 또는 어선에 옮겨 타기까지 과정에서, 우선은 대피방법이나 구조작업을 적절히 안내한 선장과 선원이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또한 구조작업에 적극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육지에 돌아와 입원하거나 집에 돌아간 다음에도 정부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긴급생계지원, 생활안정자금,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생존자들은 제주도청, 해운항만과,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담당 부처를 알아내고 지원을 요청해야만 했다. 생뚱맞게도 정보과 형사만이 유효한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 자녀가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부에 문의했다가 "당신은 살았잖아요."[96]라는 책망을 들은 화물 기사도 있다.

(1) 혼란스러운 지원체계

정부 지원 사항을, 신뢰할 만한 정부 관계자 또는 담당 부처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정보과 형사가 안내하고 처리한 경우도 있다.

〈사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때는 영등포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처리해 줬어요. 병원이랑 〔치료비와 입원비 문제로〕 싸울 때 처리도 해 주고 많이 도와줬죠. 거꾸로 된 세상이죠. (윤0옥, 생존 화물기사)

(2) 실효성 없는 경제 지원

생존 화물기사도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발등에 떨어진 경제적 문제나 생계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기사들은 매월 상환해야 하는 화물차 할부금과 당장의 생활비를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주로 제주 지역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96 〈사례〉
사실 유가족이 자식을 잃어서 가슴 아프고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생활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몇 개월째 누워서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 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한테도 뭐 지원되는 게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당신은 살았지 않느냐고. (최0영, 생존 화물기사)

경기도 안산까지 오가며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장시간 이동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시 참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제주시가 심리치료를 받는 기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지원은 이제 중단되었다.

〈사례〉
생계 때문에 10월에 화물기사일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안산 온마음센터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제주에 이런 곳이 없었기에 제주시가 교통비 지원을 해줬다. 덕분에 치료받으러 다닐 수 있긴 했지만 장시간 이동과 숙박에서 오는 피로도 겹치고 해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 치료받으러 오기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위로금은 초기 3개월 간 매월 120만 원, 총360만 원 지원을 받은 게 전부다. 제주도는 2014년 12월까지 5개월 간 4인 가족 기준 150여만 원 생계비 지원한 게 다였다. 제주도가 준 생계 지원금은 안산 온마음센터에 치료받으러 다니는 교통경비로 썼기에, 아내가 돈 벌러 다니고, 고3 딸은 학원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0수,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3) 죄책감을 강요하는 사회적 시선

언론은 참사 초반에만, 그나마도 참사에 대한 증언이 필요할 때만 생존자에게 관심을 돌렸다. 또한 전체 생존자 중 단원고 학생과 성인의 수를 비교하는 기사를 줄곧 내보냈다. 이런 보도 형식 뒤에는 생존한 성인을 은연중에 책망하는 느낌이 숨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례〉
언론에서 너무 학생들에게만 집중해서 우리는 진짜 산 게 죄인인 마냥 숨도 제대

로 못 쉬고. 보도에서도 처음에 배 전복될 당시 며칠 간만 생존자에 대해서 나왔지 거의 그 이후에는 생존자 잘 사니까 희생자 쪽으로만, 학생들 쪽으로만. 처음부터 난 그랬던 거 같아. 너희들은 살았으니까 됐다, 그런 마음을 언론에서 심어주는 거 같아. 넌 살았으니까 그게 어디냐. (윤0옥, 생존 화물기사)

〈사례〉
참사 생존자는 사망희생자보다 소수이고, 희생자 학생보다 생존자 일반인은 더 소수여서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 크고, 내가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가 있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에는 누가 나를 차로 부딪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죽거나 다쳐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4) 부적절한 원상회복 지원

참사 후 정부는 <세월호 피해 생계형 화물차량 운전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다시 화물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추가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97] 모든 탈것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운전대조차 못 잡겠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비 할부액 상환이 당장 시급한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심리상태부터 생계대책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례〉
솔직히 비행기 타는 것도, 배는 안타봤지만. 〔참사 이후에〕 비행기 타면 기도가 돼요. 무사히 가게 해 달라고. 제발 떨어져도 바다에 떨어져라. 육지에 떨어지면 폭파하니까. 가다가 기압에 흔들리면 미치겠고. (윤0옥, 생존 화물기사)

〈사례〉
다시는 화물노동을 할 수가 없다. 손이 따로 돌아가고, 몸 전체가 따로 분리된 듯

97 지영,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한겨레21』, 제1021호, 2014.7.23.

한 느낌이 크기 때문에 다시는 화물노동을 할 수 없다. (김0수,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사례〉
10월에 화물기사 일을 해보려 시도한 적이 있는데, 중도 포기하였다. 배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배가 뒤집히는 참사 장면이 떠오르고, 악몽만 꾸고 잠을 못 자다 보니, 도저히 3일 간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다. 너무 피곤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교통사고로 이어질까 봐 중도에 포기한 것이다. 다시 화물기사일을 할 수는 없을 것만 같다.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조사자 정리)

6) 이주민 희생자 가족

세월호에 한국인만 승선했던 것은 아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세월호를 탔다가 희생되었는데, 그 유가족들은 한국국적 피해자에 비해 여러 측면의 소외를 경험해야 했다. 이주민 유가족이 겪은 소외를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다.

첫 번째,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특히 참사 초기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가 늦었다. 이주민 유가족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한국정부를 통한 공식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참사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초기에 신속하게 지휘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던 한국정부의 대응방식이 이주민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새로운 결정을 내려도 연락받지 못했고, 심지어 유가족과 정부 간 협의과정에도 참가할 수 없었다.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의사소통에 제약이 많다는 이주민 유가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참사 수습 책임이 있는 한국정부가 유가족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주민 유가족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통역자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보 결핍에 시달린 이주민 유가족은 참사로 떠나보낸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문제가 있다. 시신 수습을 기다리며 이국 땅에서 장기체류하는 동안의 생활

비, 서둘러 구입해야 했던 왕복 비행기 비용 등 이주민 유가족이 참사 때문에 지출해야 했던 비용은 만만치 않다. 심지어 수색 중단 결정이 났을 때 미수습 희생자 가족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공증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주민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매우 미흡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베트남 이주민 유가족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다음으로 사회 일부에서 던지는 싸늘한 시선도 이주민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받았으면서 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는 한국인도 있었고, 같은 나라 출신 이주민에게서 충분히 먹고살 만큼의 지원을 한국정부로부터 받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국적 소지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당한 권리도 있다. 베트남 출신 딸을 잃은 유가족은 한국인 사위와 손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시신을 찾은 딸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사위 직계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대답이 되풀이해 돌아왔다. 똑같이 희생자의 부모인데도 한국인 유가족의 권리와 이주민 유가족의 권리에 차등을 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비자 만료 기한이 다가오면 비자가 연장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떨어야 하기도 했다.

종합해 볼 때, 이주민 유가족은 한국인 유가족에 비해 정부 지원은 훨씬 적게 받고 권리 제약은 더 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이주민 유가족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참사 초기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 정보 접근 권리 제약

이주민 유가족 중에는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공한 자료나 언론은 이들에게 무용지물이다. 이주민 유가족을 위한 연락망을 갖추거나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2014년 11월 11일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기로 한 정부 결정도 우연히 기자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한다.[98] 이와 관련해서, 체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통역을 제공했다면 이주민 유가족의 소외감은 쉽게 해소되고 유가족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민 유가족이 입국한 초기 열흘 정도 통역을 지원하는

98 베트남인 '세월호 유가족' 판반짜이는 말한다」,『한겨레』, 2014.12.27.

데서 그쳤다. 결국 이주민 유가족의 활동 폭은 그날 그날 통역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

〈사례〉
당연히 한국인하고는 좀 편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한국인처럼 바로 접하고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쉬운데, 저희는 한국어를 못하고, 정보를 어떻게 접하는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알려 주고 아니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지, 법을 제정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뭐 다 상황을 저희 언어로 된 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딜 가도 통역인을 대동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 바쁘면 안 되고. 만약 생활용어만 하면 굳이 필요가 없어도, 이 문제 관련해서 통역이 필요할 때 제대로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한국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고 한마디 해도 통역 부탁해야 되는 거고. 어디 가면 같이 가자고 하면 시간 안 되면 그만이고 되게 불편한 게 많았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2) 경제적 지원과 의료 지원 부재

베트남 유가족은 참사로 딸과 사위, 손자를 한꺼번에 잃었다. 딸의 시신은 오래지 않아 돌아왔지만 사위와 손자의 시신이 수습되기를 기다리느라 장기 체류해야 했다. 그러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 전액은 일방적으로 손녀의 친가에 돌아갔다. 베트남 유가족은 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데 드는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했다. 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데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고, 항공권 등 세월호 참사 때문에 지출해야 했던 다양한 비용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유가족에게 한국 사회가 제공한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성금을 제주도청이 전달한 것과 종교단체에서 성금을 전달한 것이 전부다.[99]

〈사례〉
아버지가 아프셔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닭발 껍데기를 까는 걸 하는데 그걸 한 시간에 5,500원을 받는데, 하루에 두세 시간을 해요. 〔그럼 생계는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한 달에 지난번에 16만원 2000원 정도 벌었어요. 아버지가 이빨이 없잖아요. 치아가 밑에 다 없어서 딱딱한 거 못 먹어서 과일을 사 드리고 죽 사 드리고 그리고 버스비 타고 그러면 없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그러니까 제가 팔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소에 몇 번 주사 맞았는데 그때는 무료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스스로 돈 내야 돼요. 지난번에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돈 꽤 들었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유가족이라고 하니까 유가족이 뭐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적용되는 게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출국비용 관련하여〕 그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여쭤 봤더니, 어디 빌려야 된다, 일단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은 비자만 발급해 주지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 이웃사람들 조금씩 빌려서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를 발

99 「국적은 달라도, 슬픔은 같다」, 『한겨레 21』, 2014.8.12.96

> 급한 다음에 비행기표를 샀어요. 19일 여덟 시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3) 국적 차이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베트남 유가족은 한국인 남편과 아들을 물속에 남겨놓은 채 먼저 돌아온 딸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자 했지만, 남편 친가가 동의해야만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말로 계속 거절당했다. 결국 장례식은 치르지 못한 채 시신만 화장해서 수습했다. 내 자식의 장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결정권 침해다. 베트남 유가족은 외국 국적자에 대한 차별이 이런 방침을 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으로, 외국인이라는 신분은 참사가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기간조차 유가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위협한다. 체류비자 기간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입국 당시에는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유가족의 체류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기간 연장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가족은 기간 만료 전에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 〈사례〉
>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공무원인가요?〕 그, 시체를 보관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월 14일 제가 다시 팽목항에 갔어요. 저희가 갔더니 한 번 더 요청을 했어요, 장례를. 그쪽에서 남편 쪽의 허락을 해 줘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데….[9]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4) 돈이 목적이라는 오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생존자인 손녀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가 키우려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내기 편하니까 귀국하지 않고 오래 남아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은 베트남인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한다. 가족을 잃어 고통스러운 마음, 혼자 남은 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는 관심 없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유가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례〉
어떤 기자가 혹시 가족이 알고 계시는지. 지금 신문에 떠들고 있는 내용이 당신들이 보상금을 받고 조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갈 의도가 있다, 살아있는 조카딸을 데려갈 의도가 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돈 때문에 여기 와서 아직도 가지도 않는다, 그런 돈 때문에 한국에 왔다, 돈 욕심이 많다, 아직도 가지도 않는다, 왜 여기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당신 가족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사례〉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슬픈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 가정이 정부에게 지원받아서 아주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한국 정부에게 아무 관심 못 받고 마음씨 착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서 보태는 것 말고는 정부에게 아무것도 받고 있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1년 동안 아주 힘든 1년이었고,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너무 무관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7) 미수습 희생자 가족

구조 실패-수색 부실-인양 미루기로 이어진 과정 때문에 일 년 이상 가족을 찾지 못한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수색작업의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긴 정부는 범대본을 운영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기수색의 부담은 결국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수색작업에 따르

는 위험이 점점 더 강조되고 수색의 성과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결국 수색작업 종료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미수습 희생자 가족은 수색 종료 결정이 세월호 인양 계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정부 여당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인양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비용문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인양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애썼다. 정부의 대응을 보며 불안에 빠진 미수습 희생자 가족은, 세월호 인양 요구에 힘을 실어 달라고, 일인시위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이어지는 일상생활은 나날이 피폐해졌다. 가족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자신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일마저 미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색작업을 종료한 이후 미수습 희생자 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살아 돌아왔든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돌아왔든 세월호에 승선했던 가족을 다시 만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7개월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진도에 머무르며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부대끼던 공간이 텅 비어 몇 안 되는 우리만 남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고립감이 미수습 희생자 가족의 마음을 좀먹었다. 그뿐 아니라 오랜 공동생활 때문에 이미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인데, 수색작업을 지켜보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느라 체력소모가 심했다. 수색활동에 대한 의견 차이 등의 이유로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피해자들이 모인 대책기구와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기에, 특히 수색 종료와 인양 문제를 둘러싼 안건이 될 때는 불신과 원망이 표출하도 했다.

(1) 정부의 일관된 책임 회피

구조, 수색 과정에서 정부는 없었다. 범대본이라는 명색만 내세워 놨을 뿐, 정부는 실제로는 뒷짐 지고 선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민간업체에 맡긴 수색작업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 때문에 민간인 잠수사의 작업에 따르는 위험부담까지도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이 떠안아야 했다. 수색 종료 결정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장기화된 수색작업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 문제를 피해자들의 책임이라는 듯 여론을 조성했다. 심리적 부담감에 짓눌린 미수습 희생자 가족은 세월호 인양 계획이라도 보여주기를 희망했지만 정부는 끝내 대답을 회피했다. 정부의 종용과 여론에 등 떠밀려 수색작업 종료에 동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믿을 만한 협력자는 아무도 없었다고

희생자 가족들은 말한다.

〈사례〉
결국에는 또 정부에서, 해군 해경이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 얘기를, 가족들 얘기를 듣고서 계속 수색 방법을 바꾼 거야.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가 막 난리를 피우면은 그때 가서 또 해 갖고 오고. 그러니까 애가 타지, 애가 타.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수색 종료 그때 시점에서 가족들한테, 우리 실종자 가족들한테 서운하게 한 게, 의료지원이라든가, 가족들이 아픈데 이런 거는 끝까지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밀어줘야 되는데, 지원도 다 끊고, 또 뭐, 그런 인양에 대한 약속 부분 같은 것도 얻어 내지도 않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그때는 넋이 나갔어요. 너무 오래 시일이 지체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진짜 심장만 뛸 뿐이지 그냥 거의 살아 있는 시체 정도 그렇게 됐으니까, 다 넋이 나가 멍 때리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그 당시에 수색이 가족들이 종료하고 싶어서 종료한 게 아니고, 강제 종료나 마찬가지로 수색을 종료하겠다는데 우리가 끝까지 종료 인정을 안 해 주면 계속 수색을 하다가 잠수사나 이제 또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 또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꺼내려다가 산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사실, 그래서 종료를 인정해 주고 한 거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된 거에요.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2) 인양문제를 정치적으로 저울질 한 정부

정부와 여당은 참사의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 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을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며 피해자들을 벼랑에 내몰았다. '세금도둑'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할 정도였다. 특히 인양과 관련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 아니라 위험성도 크다며 사회적 비용의 낭비라는 입장을 흘리기 시작했다. 여론을 조장하여 이런 공세를 퍼부은 끝에, 참사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계획은 2014년 5월에 이미 검토를 끝낸 보고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례〉
특별법에 인양이 없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그걸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지. 실종자가 해경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는 하지 말았어야지. 정부기관들 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원하냐고. 뭘 원할 것 같아요? 살게끔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게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배가 올라오나요.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사례〉
가족을 찾고 진실도 밝혀야 되고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인양이 언제나 될 거냐구요. 지금, 인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깝깝해요. 답답해요, 진짜…. 처음 같아서는 그냥 금방 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수색 종료하고 나면은 인양을 금방 해 줄 것 같기도 한데 해 주지도 않고, 겨울 내내 겨울이라고 동절기라고 해 주지도 않고, 추워서 물살 세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고…. 요새는 왜 못하냐구요, 요새.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빨리 인양을 해야만이 저희도 이제 모든 걸 마감을 할 수가, 종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 이제 또 여러 가족이 있잖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하여튼 많이 지쳐 있거든, 지금. 젤로 이제 반가운 소식이 인양 결정, 그거 한 가지죠.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3) 파괴된 채 방치되는 몸과 마음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의 일상은 파괴된 지 오래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기에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도 빼앗긴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황폐해진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채 치료를 미루고 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사례〉
내가 지금 심리치료 받아야 치유가 되겠어요? 남편을 찾지도 못했는데…. 내 몸 상태도, 물리치료 받아도 그래요. 그냥 그때뿐이지 다시 또 원래대로 아프고 그래요. 항상 이 머릿속과 가슴 속에서 오로지 남편, 건강하던 남편이 훌쩍 떠나 버리고, 지금도 안 믿어지니까, 실감이 안 나니까. 현관문 열고 금방 들어올 것만 같기도 하고. 집에 가면은 남편, 의자에 앉아 있던 모습이, 형체가 그려지고 이러니까. 지금 실종자들은 제일 슬픈 게, 무슨 기념일이나 무슨 때나 명절 때나 구정 때나 어디 가서, 찾아가서 뭐 제사도 못 지내고, 가서 뭐 얘기라도 할 그런 납골당이나 뭐 그런 데도 없잖아요. 실종자에서 유가족이 되는 게 그게 소원이죠. 오죽하면 실종자에서 벗어나서 유가족이 되고픈 심정인지.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사례〉
이제 제발 시신이라도 찾아서 가족이랑 장례를 치러 줘야 하는 마음. 그리고 또 0연〔유일하게 생존한 막내딸〕이를 봐서도. 엄마 아빠는 이사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장례를 못 치르다 보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해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사고 나서 한 달 동안은 저만 남겨 놓고 오빠, 엄마, 아빠가 다 지금 제주도로 이사 가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몇 번 얘기하더니 지금은 깊은 뜻을 물어도 안 보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권0일, 미수습 희생가 가족)

(4) 고립감

미수습 희생자 가족은 오랜 기간 세상과 단절된 채로 진도에 머물면서 가족을 기다려야만 했고, 쇠약해진 심신을 추슬러 가며 희생자 가족은 무책임한 범대본-해경을 상대로 싸워야 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른 후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는 유가족들과 달리,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바닷속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함은 더욱 커져갔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다는 극심한 고립감 속으로 미수습 희생자 가족을 밀어넣은 결정적 요인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제정, 인양 계획 등의 문제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한 정부의 태도였다.

〈사례〉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아픈 거고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아픈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부가 유가족은 유가족대로 돌리잖아요. 위에서 실종자는 실종자대로 돌리잖아요. 근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게 정상적으로 판단이 될까요? 〔중략〕 실종자도 사람이고 싶고 실종자 부모도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실종자는 사람이 아니구요, 어느 누군가나 유가족이나 국민대책위나 판단력 없을 때 와서 물어만 봤으면, 가서 소통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 그건 되돌아가지 않죠. 지금이라도 잘해야죠.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8) 민간잠수사

구조작업과 수색작업에 참가한 민간잠수사들은 이웃의 참담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달려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정부의 냉담한 대우에 시달려, 작업을 끝낸 뒤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색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잠수사들은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쉼 없이 물속에 들어가야 했다. 식사, 취침 등을 위한 휴게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안전장비도 지급되지 않았고 의료 지원도 없었다. 수색 작업의 책임자는 해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색 작업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겼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일수록 민간잠수사에게 돌아갔다. 그러면서도 작업 계획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했다.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무리한 작업 끝에 남은 것은 질병, 트라우마, 경제적 곤란, 그리고 형사기소뿐이었다. 민간잠수사들 대부분이 잠수병, 골괴사, 디스크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25명의 민간잠수사 중 7명은 이 때문에 생업까지 중단한 상태다. 막막한 심해에서 쉼 없이 시신을 대하면서 트라우마도 깊어졌지만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별도의 트라우마 치유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처음에는 민간잠수사들에게 법적 지원과 치료를 약속했다. 그러나 생계비 지원이나 보상은커녕 치료마저 중단된 상태다. 이유인즉 법적으로 민간잠수사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수난구호법 상 장애로 인정될 때에만 보상할 수 있는데, 민간잠수사들은 장애를 인정할 정도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민간잠수사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이 민간잠수사를 피해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고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기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색 작업을 하던 동료 민간잠수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경과 검찰은 선임 민간잠수사를 기소했다. 사망한 민간잠수사의 유족은 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계속된 법정 공방에서는 기소된 동료 잠수사에게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만 가지고서 다투고 있을 뿐이다. 가족의 장례를 치른 후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는 유가족들과 달리, 미수습 희생자 가족들은 바닷속 가족을 찾아달라는 요구밖에 할 수 없어 답답함은 더욱 커져갔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다면 누가 나서서 수색작업에 참여하겠냐고 민간잠수사들은 반문하고 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참사는 없어야 하지만 말이다.

(1)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

맹골수도에서의 수색 작업은 굉장히 위험하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동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의로 찾아온 민간잠수사들의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책임까지도 민간잠수사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수색작업에 참여한 대가로 민간잠수사들에게 지급된 일당은 국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적은 금액

이나마 일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민간잠수사들이 처한 어려움이나 위험성은 의도적으로 외면되었으며, 정부는 민간잠수사들이 찾아낸 실종자를 해경이 찾아낸 것처럼 발표하기까지 했다.

〈사례〉

그 추운데 텐트도 하나 없이 난로도 하나 없이, 그래서 제가 그, 거기 들어갔을 때 윤0두 과장인가? 해경에 그 친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걸 봐라, 해경도 사람이고 우리 민간잠수사도 사람인데, 이게 길바닥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길바닥이에요, 길바닥에서 그냥 지들 편한 대로 추우니까 그냥 웅크리고, 그 시간만 몇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공0영, 민간잠수사)

〈사례〉

저희는 교대가 없었구요.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해경이나 해군은 3교대인가 2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교대〕 저희는 교대가 없이 총인원 25명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왜냐면 잠수를 하면 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잠수를 하기 위해서 폰도 잡아야 되고, 감독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텐더라고 위에서 호수를 잡는 역할도 있고 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내려 줘야 되고, 그 잠수사 하나에 붙는 인원이 3~4명이 붙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사가 내가 끝났다고 나오면은 위에서 또 텐더 일 하는 걸 또 봐 주거든요. 그걸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잠수 일이 끝났다고 쉴 수 있는 건 아니죠. (김0우, 민간잠수사)

〈사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공구를 요구해야 하고 장비를 요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써 봐라 저거 써 봐라 이거 써 봐라, 되려 장비 테스트가 되어 버리는 거고. 저희는 그 물때와 수심과,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작업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전문가이지만, 이런 첨단장비가 필요 없고, 되려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일이 다이버들이 더듬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 우리가 수없이 얘기해도 안 들어 주고, 되려 초창기에 설계도라고 가져다 준 게 그 구조, 그 설계변경 하기 전 걸 가져다 줘 가지고 저희가 다,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되려 방황하게 했다구요. (김0홍, 민간잠수사)

(2)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과 경제적 어려움

무리한 작업의 결과로 민간잠수사들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구조와 수색에 참가한 25명의 민간잠수사 중 7명은 사실상 생업을 접은 상태다. 골 괴사 등의 질병을 얻어 잠수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실업 상태거나 생계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잠수사들 대부분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다. 대형 참사 현장에서 작업하면서 받은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생계에 대한 압박감 등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사례〉
저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때도 저희가 함미 인양을 하면서, 군인들을 두 구를 수습을 했는데, 그 기억도 아직도 나요. 처음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있었고, 아직도 내 그리라면 다 그려 줄 수도 있어요. 그게 한 오 년 됐죠?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수십 구, 많게는 수백 구를 다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기억이 납니까…. 무슨 지나가다 그런 비슷한 일도 있을 거구…. 누군 아디다스 추리닝만 봐두 미쳐 버리겠다구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거는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남아 있겠죠. (전0근, 민간잠수사)

〈사례〉
잠수병이라는 거는 무조건 누적입니다. 누적이라는 거는 많이 할수록 축적되는 거예요. 〔중략〕 통증들이 다 있어도 내가 안 하면 다른 잠수사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무리했던 거죠. (중략) 잠수병 포함해서 다른 데 아픈 것도, 쉬니까 증상이 막 나타나더라고.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골괴사는 수술 밖에는 없어. 그건 치료가 완전히 100퍼센트 되지도 않고…. 골괴사 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나와요, 영구 장애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보류를 시켜 놨어요.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여기 계신 분들 중 잠수사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은 있나요?〕 없어요. (전원)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벌어 놓은 거 쓰는 거죠. (여러 명)

〈사례〉
생활. 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팔 개월째, 구 개월째. 지금 생활을 아예, 뭐,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죠. 이런 얘기, 참 긍정적인 얘길 한다는 게, 난 이 얘기 하면 가장 멋쩍은데, 그게 가장 솔직히 힘들죠. (하0성, 민간잠수사)

(3)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

정부와 해경은 처음에는 수색 작업으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피해자 규정에서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민간잠수사들은 악화된 건강과 경제적 손실을 각자 떠안아야 할 뿐 달리 찾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없다.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치료마저 중단된 상태다.

〈사례〉
해경에서는 치료 보상에 대해서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8월달부터 해 주겠다고 한 게 지금까지도 안 되거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공무원들끼리 문서만 돌리고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쳤지. 8개월 동안… 솔직히 지쳐서 안 된다,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전0근, 민간잠수사)

〈사례〉
〔민간잠수사분들도 4.16 희생자에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구조활동 한 사람이나 승선객이나 돌아가신 분들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됐죠. (이0철, 민간잠수사)

(4) 민간잠수사 사망에 대한 억울한 책임

수색 작업이 과정에서 민간잠수사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과 검찰은 선임 민간잠수사에게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납득할 만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로, 이 사건은 1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법정공방 중이다. 정부와 해경은 민간인 한 명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 나갔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힘없는 이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갈라 서로 싸우도록 이간질한 것이다.

〈사례〉

억울한 것들이 많죠. 공0영 선배님은 재판까지 받으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워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갖고 떳떳하게 입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4월 13일날 마지막 증인 신청인데, 그 때 증인하고 결심공판하자고 변호사가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할 거고, 그때 무죄 재판 나오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입증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죠. (전0근, 민간잠수사)

(5)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분노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나선 민간참수사들에게 정부는 책임 전가, 공로 가로채기, 보상 외면, 위험한 작업 환경 방치 등의 행태로 화답했다. 분노한 민간잠수사들은 다시는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말한다.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가 작업에 참가한 민간잠수사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국가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사례〉

세상이 달리 보이죠. 그전에는 그냥 앞만 보구 애들 키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해경, 검찰, 우린 무슨 관계없잖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식의 정부의 행태나 이런 걸 보고, 싫더라구요. 아 이런 현실도 싫지만, 내가 이런 데서 애들을 키우고 살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김0홍, 민간잠수사)

〈사례〉

말 바꾸기 하는데, 해경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 잠수사들 일할 때는 이것도 해 주고 다 해 줄 것 같이 막. 〔중략〕 해수부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사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나 몰라라 하고 등한시 하는 정부가 진짜… 좀…. 아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O호, 민간잠수사)

9) 자원봉사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부터 수색이 종료되고 범대본이 해체된 11월 20일까지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자원봉사자는 참사가 일어난 순간부터 범대본이 해체되던 순간까지 참사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 모두를 도맡아 처리했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기간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로 사람마다 다른데, 많지 않은 수지만 현재까지도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원봉사자는 국가 차원의 재난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생계와 개인 생활을 뒤로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사람들이다. '자원'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고 보상을 제공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범대본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편(KTX할인권, 셔틀버스)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데서 그쳤고, 그나마도 범대본 해체 후에는 중단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에 참가하고 있는 한 장기 봉사자의 경우, 1년 가까이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범대본이 해체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이나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국가나 행정부의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 현장에 남은 자원봉사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로 떠넘겨졌다. 또 한편, 범대본 해체와 함께 진도체육관 및 팽목항 현장의 자원봉사활동을 지휘하던 자원봉사센터도 철수해 버려 남아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자원봉사자의 심리에 대한 보살핌도 매우 부족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는 사회적 문제이다.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도 심각하지만 피해자들을 지원, 조력했던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에

게는 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에 관련된 안내를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심리치료에 관련된 안내는커녕 심리, 건강, 경제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1) 범대본 해체 이후 자원봉사 지원 체계의 부재

11월 20일 수색작업을 종료하면서 범대본과 자원봉사센터도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부 자원봉사자는 현장에 남아 계속 활동했다. 현장에 남은 미수습 희생자 가족이나 유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기관이 모두 철수해 버렸기 때문에 수색 종료 후 현장에 남은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었고 활동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

〈사례〉
수색종료 하면서 관심이 줄어들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정부측 나갈 때까지 있었던 단체는 없어요. 수색 종료함과 동시에 철수해 버리고 없어요. 예전에는 그걸 다 센터에서 자료화·문서화하고 모든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처음 활동 시작 시간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그래야 그 분들 시간도 올려주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인정이 되니까. 근데 종료 후에는, 이제 제가 하던거니까 그래도 체크는 해드리고 있지만 그냥 한낱 체크만 할 뿐이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백0혁, 자원봉사자)

〈사례〉
주변 분들 집에서 하루 이틀 자다가, 그것도 못할 짓 같더라고요, 길게 있을 거니깐. 그래서 고시원을 얻었어요. 〔보증금은〕 없었어요. 저도 길게 하다 보니까 공과금부터 그런 게 좀 치이긴 해요, 오랜 시간 보내면서. 근데 주변에 저를 좀 잘 아는, 그나마 저보다 좀 나은 분들이 방을 얻을 때 도와주시고. 담배도 한 갑씩 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주변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세요. (백0혁, 자원봉사자)

(2) 자원봉사센터 미등록 봉사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체계의 부재

세월호 참사 관련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심리적 지원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개별적으로 현장을 찾아갔던 봉사자들은 그러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례〉
저 분은 안 좋은 거 같은데, 치료를 꾸준히 챙겨 줘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도, 돌아가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연락을 단절한 경우도 많고, 그럴 땐 저도 알 수 없죠. (백0혁, 자원봉사자)

〈사례〉
지금도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악몽을 꾸고 있어요. 심하게 꿨는데. 지금은 전에 보다는 덜 꾸고 있는데. 제 새끼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꿈. 여기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구요. 그러다 보면은 그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을 지금도 겪고 있어요. 남들에게 이야기를 못하다가 요즘은 조금씩 하거든요. 온마음센터? 온마음센터 이야기는 들었어도, 봉사자들이 가는 건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할 수도 없었고. 뭐 말 못하면 뭐 하러 가서 왜 이러느냐는 소리 들을까 봐 그 말을 못했어요. (신0혜, 자원봉사자)

〈사례〉
자원봉사자들이 새벽에도 작업을 하면 낮밤 바뀌어 가며 지내고, 자기 시간 뺏기면서까지, 때로는 밥 제대로 못 챙겨 가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한지 혹시 마음은 심리적으로 받은 상처는 없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0옥, 자원봉사자)

10) 진도어민

진도어민, 특히 사고 해역에 인접한 동거차도, 서거차도 주민들은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와 참사 처리과정의 참여자인 동시에 피해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주민이라는 다층적 지위에 처해있다. 이들은 세월호가 침몰 중인 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를 통해 내려진 파견지시를 받아 구조인력으로서 현장으로 갔다. 사고 현장에서 이들은 해경의 무능과 정부의 무책임함을 절감하며 세월호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다. 동거차도, 서거차도, 맹골도 어민들은 통상 진도어민이라고 불리지만 '진도어민'이라는 집단으로 묶이는 데 대한 묘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장에서의 기술은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어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진도어민' 집단 전체가 처한 상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린다. 동거차도와 서거차도는 각각 80가구가 안 되는 주민이 거주하는 조그만 섬으로 주민들은 미역양식과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생계를 이어가고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삶의 터전에서 참사가 일어난 후, 피해에 대한 지원과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겪는 갈등으로 공동체는 위태로워지고 어업활동 중단으로 주민들의 생계는 팍팍해졌다. 앞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피해는 배□보상 내역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정부는 참사 처리 과정에서 진도어민을 동원인력으로 삼았고, 동거차도와 서거차도를 베이스캠프 삼아 공간을 점유하고 활용했다. 이러한 기억과 경험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남아 있다. 언론 또한 진도어민을 목격자와 참여자로 호명하며 참사를 회상하게 했다. 진도어민의 막심한 피해상황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주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은 물질적 피해에만 집중된 지원의 한계를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계활동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갈등이 야기되었다. 진도어민은 앞으로도 살아나가야 할 공간에서 여전히 참사를 상기하지만 물질적 보상 이외의 피해상황을 말하기조차 조심스러워 하며 불안한 일상에 내몰려 있다.

(1) 재산상, 물질적 피해에 집중한 배·보상

동거차도와 서거차도가 위치한 진도군 조도면은 진도군 인구의 9.61%가 거주하고 있다. 농사보다는(8.75%) 어업활동을 하는 주민이 대다수이며 조도면의 어가인구가 진도군 어가인

구의 36.87%를 차지한다. 한편 높은 어가인구 비율에 비해 보유 어선의 비율(진도군 어선의 24.82%)은[100] 낮다. 이는 조도면이 진도군 도서지역 유인도의 인구 80%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서 선주 외에도 어선 일용직과 특산품인 미역 양식장 일용직종사, 해산물 채취 등 다양한 어업활동으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배·보상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시적이고 행정적으로 증빙 가능한 재산상, 물질적 피해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피해지원법시행령>에는 참사로 인한 유류피해와 어업활동 중지로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나 생산규모와 매출액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 해산물을 판매하거나 증빙서류 없이 어업도구를 사고파는 등의 지역 특성을 지닌 경제구조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배·보상의 규모와 방식은 차치하더라도 행정 편의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어업 일용직 종사자와 피해 증명을 할 수 없는 생계 형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증명 가능한 피해'에 국한해 '피해대상을 획일적으로 파악'한 지원방식이다. 또한 진도어민에 대한 피해지원은 생계와 생업이라는 물질적 피해에만 집중되어 현장에서 겪은 심리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례〉
배를 가지고 있으면 동네 사람 네다섯 명이 그 배로 돈을 같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생활이 가능하게 지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해야 하는데.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사례〉
나는 개인 양식장도 선박도 없어요. 〔선박과 양식장 일용직으로 유류피해, 어업 배·보상 제외〕 섬사람들은 일 년 농사가 바다 농사인데 미역, 자연산 같은 거, 여기는 〔땅〕농사가 한폭지도 없어요. 선박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멸치도 못하고, 자식 교육은 다 끝났지만 〔부인과〕 둘이 먹고 살고 움직이는 동안은 벌어야하는데 그걸 못하니 힘듭니다. (강진현(가명), 진도어민)[101]

100 진도군청, 『제54회 진도군 통계연보』 2013.
101 사례자는 선박 미보유, 양식장 미보유로 양식장과 선박 일용직에 종사중이다.

〈사례〉

평생 그런 거를 처음 본거라 〔희생자 발견〕 그때부터 맘이 불안해서 술을 먹어도 잠을 못자고… 그 후로는 상담을 많이 했어요. 진도군보건소, 나주병원, 해남에서도 왔고. 눈만 감으면 악몽 꿈을 꾸고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삼사일까지는 밤낮으로 잠을 못 잤고. 솔직히 잠을 못 잔다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멀쩡해 보이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미친놈처럼 전화하고 기억못하고 악몽을 꾸고, 귀신, 무당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조명탄과 비행기 소리가 심해 잠을 잘 수 없었죠. 밤에는 대낮같이 밝지, 새벽 2시고 3시고 언론사와 관계기관의 전화는 계속 오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김정민(가명), 진도어민)

〈사례〉

약이라도 치료가 되더라도 끝까지 해줬으면 좋았겠고 내가 활동력이 떨어지고 벌어서 살아야하는데, 어제도 잠을 못 잤다. 뭔 말만 들으면 잠을 못 잔다. 좋은 일 해놓고 일 못하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약이 먼저고 두 번째는 생계가 상당히 힘들다.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2) 재난참사 현장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

동거차도의 야트막한 산을 올라가면 세월호 참사 현장이 바로 보인다. 어선들은 참사 현장을 지나서 어업현장으로 나간다. 구조와 수습과정에서는 군인과 인력, 기자들이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섬에 상주했다. 참사 이후 주민들이 일상적 삶을 살던 공간은 부정적 공간, 슬픔의 공간이 되었다. 참사를 집단적으로 경험한 국가적 재난현장이 삶의 터전인 사람들은 공간이 주는 참사의 기억과 매일 마주하지만 일상을 위해 재빨리 벗어나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진도어민들은 참사 초기 근접성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구조와 수습과정에 동원됐다.[102] 본인들 또한 기름 유출, 어업활동 정지, 조명탄 사용으로 인한 불면증과 피부병, 호흡기 질환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겪는 피해자였지만 스스로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아이와 가족을 잃은 거대한

102 「정홍원 총리 "진도군 어민 모두 동원"」, 『연합뉴스』, 2014.5.1.

참사 앞에 이들은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지역주민 당사자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자발적인 구조와 수습과정에의 참여도 정부가 재난참사현장의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빛을 바랬다. 이들은 삶의 터전에서 참사가 일어나면서 개인의 삶과 공간이 다르게 바뀌는 경험을 했다. 공간은 통제되고[103] 본인들이 처한 처지를 말하기 어렵고 특정한 외부인[군인, 의료진, 공무원, 기자]만 드나들 수 있었다. 주민들은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사례〉
〔앞으로도〕 심리치료는 기대도 안 해요. 그때도 팽목에 다 집중됐고 힘들다고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잘못 말이 나오면 공적이 되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까봐. 우리도 힘든데 실질적으로 팽목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컸어요. 지금은 말을 하기에 늦었죠.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정부에서 지원받아 살아야겠다는 내 욕심이지만 그런 욕심도 없고 나보다도 더 힘든 자녀 부모들도 있는데 내가 큰 걸 바라겠나.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어느 날 마을 회관 앞에 앉아있는데 군 트럭이 그 앞에 서고 군인들이 우르르 뛰어내리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지? 전쟁 났나? 그러다가 아, 내가 치매에 걸렸나 하면서 제정신이 아닌가보다 싶었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죠. (박현진(가명), 진도어민)

〈사례〉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이게 전쟁 아닙니까. 솔직히.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103 「"뱃길만이라도…" 외딴 섬이 된 진도 조도」, 『뉴시스』, 2014.5.8.

〈사례〉

우리는 여객선도 끊어버리고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랬을까. 유가족들이 찾아올까봐 그랬을까. 다 관매도에서 몇 키로, 서거차도 몇 키로 그러고. 우리 섬을 지워버릴려고 그랬을까?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3) 공동체 파괴를 가속화하는 피해지원 방식

섬은 지리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지만 30년을 살아도 그 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면 '외부 것' 취급을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이다. 200명이 채 안 되는 거주민들은 양식장 공동 작업, 개인 양식장 운영, 선박 운영에 대해 공통의 규칙을 세워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해 왔다. 동거차도 동육 마을의 경우 양식장이나 선박을 가진 사람은 이장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완전하거나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작은 섬에서 적은 인원이 살면서 공동체를 결속하고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참사 이후의 피해지원은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기보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해 공동체 파괴를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와 지원 분배를 편의적으로 이장에게 전달하는 행정, 선주와 피고용인의 생계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 지역별 차이를 현장조사하지 않고 '진도어민'이라는 동일한 피해그룹으로 묶어 지원하는 것, 일관되고 단일한 지원창구의 부재 등 지원방식의 모든 측면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조짐이 주민들은 걱정스럽다. 진도어민은 직접 겪는 반목과 갈등과 더불어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당함을 흠집 내기 위해 이용당하기도 한다.[104]

〈사례〉

이제 보상금 나오면 싸울 집도 몇 집 있다. 일 해줬으니까 돈 좀 주쇼 하면 돈 이거 쪼금 나왔는데 그러면 동네 쌈 날 수밖에 없다. 나는 두 사람에게 들었다. 어장 못하게 신고한다고. 돈 못 받으면 군청 해양과하고 해경에다 신고해서 맨 단속 나오게 만들어버린다 얘기한다. 동네 불화 생긴다.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104 「과도한 요구로 휘청이는 세월호 특조위(特調委)」, 『미래한국신문』, 2015.4.14.

〈사례〉
손해사정인 유로드림 때문에 동네 사람들끼리 편이 나눠졌어요. 옆 동네는 4당으로 나눠졌고. 이번에 유로드림 때문에 얼굴 붉히고 있어요. 두 사람이 강력하게 유로드림 하자고 밀었는데 유로드림이 약속을 6번 어겼어요… 동네 사람들은 15% 수수료 부담을 본인 부담이 아닌 줄 알이여. 그런데 나중에 본인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싸움 나게 생겼죠.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사례〉
생활안정 자금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네 사람이 사는 가정이나 동일하게 지급되었는데 그게 맞나요. 누구한테 하소연해봐야 더 줄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긴급자금 1%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서거차 동거차 맹골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서 나중에는 돈이 부족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았거나 뒤늦게 받았죠. 정부에서 동네에 와서 조사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만 좋은 일 한 거죠.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사례〉
공공근로 나가면 다 같이 나가는 것 말고도 몇 명만 어디 가서 하고 오는 것도 있는데 그걸 정하는 십장도 동네 사람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누군가고 누군 못가는 경우가 생기니 먹고살기 힘들어진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죠. (박현진(가명), 진도어민)

〈사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인다… 뭔 말인지 안다. 그런 것이 있다한들 얘기해야 하나 싶다.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4) 일상에 스며든 불안

도서지역은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농업이 어려운 환경 상 쌀을 사고, 병원을 가고, 자녀들의 학교를 보내고, 출산과 결혼 등의 집안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상시적으로 배를 이용한

다. 큰 사건이나 행사가 아니라도 일상적인 삶의 반경을 이어주는 수단이다. 주민들은 하루에 한번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배편 때문에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의료시설과 지원을 이용하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배를 밀접히 이용하는 일상성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무감각해지게 만들기도 한다. 섬을 다니는 여객선은 차량을 실으며 고박[선박 내 화물과 컨테이너, 차량 등이 움직이지 못하게 로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정대로 고박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준수, 안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야 신뢰도 생기고 일상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경로가 없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은 일상이 되었다.

〈사례〉

오늘 안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하니까 배도 지저분해지고 체크 같은 것도 안하니까 배 고장 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많다. 실질적으로 그게 몸에 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선박 같은 거는 한순간에 사람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준비 같은 거 철저하게 하고 나가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나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 같다. 아마 거기서도[세월호] 오늘은 괜찮겠지 안하면 어때. 한번 괜찮아서 댕기다 보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다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난거 같다. 오늘도 철저하게 해야지 했으면 고박도 하고 했으면 사고도 안 났다. 넘어갈 일도 없고. 지금도 그렇다. 몇 달만 그러고 지금은 안한다. 고박도 안하고 다 넘어간다. 아 귀찮아. 괜찮겠지. 지금도 그렇다.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사례〉

배가 안정성 있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었겠나. 미비하게 만들어서 배 다녔고, 배 검사, 안전점검도 허술하게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은 하고 싶다.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별첨. 인권실태조사단 활동 경과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단 구성

인권활동가들은 참사초기부터 4.16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하 4.16 인권선언) 제정 운동을 고민했다. 4.16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또한 <4.16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가 피해자 전수조사에 대한 원칙을 세울 때 참고점이 되는 중요한 인권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활동가들은 2015년 2월 11일 사전 모임을 시작으로 인권실태조사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첫 준비 모임은 2월 25일에 진행되었다. 준비모임에서는 인권실태조사의 목표와 방향 등을 초벌로 논의하고, 조사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조사단을 모집했고, 3월 2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실태조사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3월 2일 오리엔테이션은 <인권재단 '사람'>에서 오후 4시와 7시 두 차례 진행되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가자들과 인권실태조사의 목표와 조사 방식, 조사대상을 논의하고, 조사대상에 따라 팀을 나누었다.

4.16인권실태조사의 목표는 1) 경험을 통해 참사와 재난상황에서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며 침해되어서는 안 될 권리가 무엇인지 밝히는 근거 마련, 2) 4.16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 피해자 전수조사 기초 자료 제공, 3) 참사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사회화, 4) 4.16인권선언운동의 근거 마련이다.

이를 통해 재난과 참사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할 인권의 문제임을 각인시키고 싶었다.

2. 조사 방법과 범위

1) 조사 방법

- 피해자를 집단별로 분류하여 심층 인터뷰로 진행
- 언론기사, 단행본, 논문 등 참고

2) 현장조사 범위

○ 희생학생 가족, 교사 가족

김0욱, 희생교사 부모 / 고0희, 희생학생 부모 /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 어0태,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 쿠0000가,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 생존학생 그룹

박민규(가명), 생존학생 / 박민지(가명), 생존학생 / 김지원(가명), 학교 관계자 / 이0선, 생존학생 부모 / 오0연, 생존학생 부모 / 박0수, 생존학생 부모

○ 미수습자 가족

이0희, 미수습 희생학생 부모 / 유0형, 미수습 희생교사 가족 /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 희생자 가족

유정식(가명), 희생자 가족 / 최민수(가명), 희생자 가족 / 방0삼, 희생자 가족 / 양0환, 희생자 가족

○ 생존자

김0임, 생존자 / 강0기, 생존자 / 이0종, 생존자

○ 생존 화물기사

최0영, 생존 화물기사 / 윤0옥, 생존 화물기사 / 남동준(가명), 생존 화물기사 / 김0수, 생존 화물

기사

○ 이주민 희생자 가족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 판00이, 이주민 희생자 가족

○ 민간잠수사

공0영, 민간잠수사 / 김0우, 민간잠수사 / 김0홍, 민간잠수사 / 전0근, 민간잠수사 / 하0성, 민간잠수사 / 이0호, 민간잠수사 / 한0명, 민간잠수사

○ 진도어민

김정민(가명), 진도어민 / 박현진(가명), 진도어민 / 이영현(가명), 진도어민 / 이종민(가명), 진도어민 / 최종호(가명), 진도어민 / 강진현(가명), 진도어민

○ 자원봉사자

백0혁, 자원봉사자 / 하0옥, 자원봉사자 / 신0혜, 자원봉사자 / 조0상, 자원봉사자

3. 함께한 사람들

○ 희생학생 가족, 교사 가족 조사단

최홍조, 김애화(전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가원, 홍승기(유엔인권정책센터), 유사라(고려대학교 대학원생)

○ 생존학생 그룹 조사단

호연(인권운동사랑방), 고은채, 배경내, 묘랑, 정주연[루트](인권교육센터 들)

○ 미수습자 가족 조사단

최예륜(빈곤사회연대), 정나위(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 희생자 가족 조사단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최현모(인권재단사람), 조김재훈(인권운동사랑방), 기선, 두인(인권운동공간'활')

○ 생존자 조사단

초코파이(인권운동사랑방), 이범수(사회복지사), 박희정(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 김창순(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김진성(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생존 화물기사 조사단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최현모(인권재단사람), 기선(인권운동공간'활'),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 이주민 희생자 가족 조사단

박진우(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 민간잠수사 조사단

윤지영, 정명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혜민(고려대학교 대학원생)

○ 진도어민 조사단

기선(인권운동공간'활'), 형근(인권운동사랑방), 고건영(이화여대 학생), 깡통

○ 자원봉사자 조사단

안은정, 정유리(다산인권센터)

○ 미디어팀

김일란(연분홍치마), 김상규(다큐창작소), 김성희, 김재영, 김지혜, 류미례(푸른영상), 박소현, 박종필(다큐인), 손경화, 이재환, 정원석

○ 집필팀

박진(다산인권센터), 기선(인권운동공간'활'), 이가원(유엔인권정책센터), 초코파이(인권운동사랑방),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 편집팀

박진(다산인권센터), 정나위(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최예륜(빈곤사회연대), 나무아래(편집자)

○ 통역

원옥금(베트남 공동체)

4. 활동 경과

1) 실태조사 준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요 회의 및 워크샵

4.16 인권실태조사단 1차 회의
-2015년 2월 11일(화) 오후 3시, 천주교인권위원회

4.16 인권실태조사단 2차 회의
- 2015년 2월 25일 오후 12시, 천주교인권위원회

4.16 인권실태조사단 전체 오리엔테이션
- 2015년 3월 2일 오후 4시, 7시. 인권재단 '사람'

4.16 인권실태조사단 1차 워크샵
- 2015년 4월 26일 오전 11시, 4.16연대 사무실

4.16 인권실태조사단 2차 워크샵
- 2015년 5월 31일 오전 11시, 4.16연대 사무실

4.16 인권실태조사단 보고서 집필팀 1차 회의
- 2015년 7월 1일 저녁 7시30분, 천주교인권위원회

4.16 인권실태조사단 보고서 집필팀 2차 회의
- 2015년 7월 8일 오후 3시, 천주교인권위원회

2) 피해자 인터뷰

미수습 희생 학생 부모 이0희 님 인터뷰 (3월 18일)
- 광화문 농성장 / 조사자 정나위, 최예륜, 미디어팀 이재환

자원봉사자 백0혁 님 인터뷰 (3월 20일)
- 광화문 농성장 / 조사자 안은정, 정유리

생존 화물기사 남동준(가명) 님 인터뷰 (3월 20일)
- 조사자 홍리리

생존 화물기사 김0수 님 인터뷰 (3월 23일)
- 조사자 홍리리

생존학생 부모 이0선 님 인터뷰 (3월 23일)
- 단원고 인근 카페 / 조사자 고은채

생존 화물기사 최0영 님, 윤0옥 님 인터뷰 (3월 25일)
- 조사자 최현모, 이은정, 기선, 이재환

생존자 이0종 님 인터뷰 (3월 25일)
- 나들목교회 / 조사자 박희정, 초코파이, 이범수

생존자 강0기 님 인터뷰 (3월 26일)
- 성공회대 / 조사자 김창순, 박희정, 이범수

희생자 가족 인터뷰 방0삼 님, 유정식(가명) 님, 양0환 님 (3월 26일)
- 조사자 최현모, 이은정, 조김재훈, 이재환

미수습 희생 교사 가족 유0형 님 인터뷰 (3월 27일)
- 광화문 농성장 / 조사자 정나위, 최예륜, 미디어팀 이재환

학교관계자 김지원 님(가명) 인터뷰 (3월 27일)
- 단원고 / 조사자 이호연

생존학생 부모 박0수 님, 오0연 님 인터뷰 (3월 28일)
- 경기도미술관 내 대책위 사무실 / 조사자 이묘랑, 정주연

미수습 희생자 가족 권0일 님 인터뷰 (4월 3일)
- 광화문 농성장 / 조사자 정나위, 최예륜, 미디어팀 김상규

진도어민 김정민(가명) 님, 박현진(가명) 님, 이영현(가명) 님, 이종민(가명) 님, 최종호(가명) 님 인터뷰 (4월 3일)
- 1차 진도 방문 / 조사자 깡통, 형근(인권운동사랑방), 재환(미디어팀), 기선(인권운동공간)

생존자 김0임 님 인터뷰 (4월 10일)
- 성공회대 / 조사자 박희정, 이범수

자원봉사자 하0옥 님 인터뷰 (4월 17일)
- 00고등학교 / 조사자 안은정, 정유리

진도어민 강진현(가명) 님 인터뷰 (4월 17일)
- 2차 진도 방문 / 조사자 깡통, 형근(인권운동사랑방), 재환(미디어팀), 기선(인권운동공간)

희생 교사 부모 김0욱 님 인터뷰 (4월 21일)
- 안산 올림픽기념관 / 조사자 이가원, 홍승기

희생 학생 부모 고0희 님 인터뷰 (4월 25일)
- 안산 온마음센터 / 조사자 유사라, 최홍조

이주민 희생자 가족 판00이, 판000인 님 인터뷰 (4월 25일)
- 조사자 박진우, 이은정, 원옥금, 이재환

희생학생 형제자매 최0아, 박0나 님 인터뷰 (4월 27일)
- 안산 온마음센터 / 조사자 이가원, 최홍조, 홍승기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어0태, 쿠0000가 님 1차 인터뷰 (4월 29일)
- 조사자 김애화, 이은정, 이재환

자원봉사자 신0혜 님 인터뷰 (4월 30일)
- 안산 신0혜님 집 / 조사자 안은정, 정유리

자원봉사자 조0상 님 인터뷰 (4월 30일)
- 안산 행복나눔무료급식소 / 조사자 안은정, 정유리

러시아 국적 희생학생 부모 어0태, 쿠0000가 님 2차 인터뷰 (5월 3일)
- 조사자 김애화, 이은정, 이재환

생존학생 박민지 님(가명), 박민규 님(가명) (5월 3일)
- 단원고 인근 카페 / 조사자 이호연, 정주연

희생자 가족 최민수(가명) 님 인터뷰 (5월 4일)
- 조사자 최현모, 이은정, 기선

〈미주〉

1) 디 베이츠, 「현 세대의 과거 세대 책임에 관한 선언」, 『역사와 이론 : 역사 철학 연구』, 2004. pp130-164.
De Baets, 「A Declar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of Present Generations toward Past Generations」, 『History and Theory: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History』, 2004. pp.130-164.

표1: 과거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개요)

분류	책임		영감이 된 자료들
신체 및 소유물과 관련된 책임	조항 1	**신체** 고인의 신체의 온전함을 보존할 책임	AP I, Art. 34(1) ICC, Arts. 8(2)(b)(xxi), 8(2)(c)(ii) JP, Princ. 36 UDHR, Arts. 5, 12a WAC, Art. 1 WHO, Princ. 5
	조항 2	**장의** 마지막 의식을 통하며 고인을 예우할 책임	AP I, Arts. 34(1), 34(2)(b), 34(2)(c) DDRIP, Art. 13 GC III, Art. 120c--d ICC, Arts. 8(2)(b)(xxi), 8(2)(c)(ii) UDHR, Art. 12a WAC, Arts. 1--2
	조항 3	**장례** 고인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묻거나 화장하고, 그의 영면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	
	조항 4	**유언** 신체와 재산에 관련된 고인의 유언을 존중할 책임	GC III, Art. 120a UDHR, Art. 17(2) WAC, Art. 2
'인간임'과 관련된 책임	조항 5	**신원** 시신의 신원 확인; 사망 기록; 그의 이름과 출생일, 사망일, 국적을 보존할 책임	AP I, Art. 33(2)(b) DRC, Art. 3 GC III, Art. 120b JP, Princ. 36 UDHR, Art. 15(1)
	조항 6	**이미지** 고인을 전시물이나 이미지로 나타낼 때 고인의 사생활 및 명성과 공익 사이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할 책임	ICOM, Art. 6(6) UDHR, Art. 12
	조항 7	**진술** 고인에 대한 사실을 공식화하거나 공개할 때 고인의 사생활 및 명성과 공익 사이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할 책임	UDHR, Art. 12
일반적 책임	조항 8	**유산** 고인이 남긴 유산을 밝히고 지킬 책임	UNESCO, Art. 7
필연적 권리	조항 9	**추모** 애도하고,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고인을 기릴 권리	AP I, Art. 34(2)(a) JP, Princ. 2, 36 UDHR, Art. 19a
	조항 10	**역사** 과거의 인권 학대에 대한 진실에 대해 알 권리	AP I, Arts. 32, 33(2)(b), 34(4)(b) AP II, Art. 8 JP, Preamble, Princ. 1--4, 13--14 UDHR, Arts. 8, 19b

〈출처〉

AP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1949.8.12.),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DRC	아동권리선언(1959)
DDRIP	선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1994)
GC Ⅲ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규정(1998)과 범죄의 요소 (2002)
ICOM	미술관·박물관의 기본 원칙 및 전문 직원의 윤리 요강(1986.2001)
JP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Joinet Principles""] (1997)
UDHR	세계인권선언(1948)
UNESCO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1997)
WAC	인간의 유해에 관한 버밀리온 헌장(1989)
WHO	인간 장기 이식에 관한 지침(1991)

2) 우리 선생님 가족들은, 남자 선생님 가족들은 거의 다 부부교사야. 남자 선생님 사모님들은 부부교사였고, 두 분은 공무원이야. 공무원들은 이런 활동하면 잘못하면 제재를 받는대요.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대요, 그래서 유가족 중에 공무원이 많아요. 그래서 못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국영기업체 다녀서 못 나오고. 나는 초기부터 혼자 살살 다녔어요. 정식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작년 11월 달에 세월호 대책위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 학생들 1반부터 10반부터 대표가 꾸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없이 있었던 거야. 11월 달에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 희생교사도 대표를 선출해서 대책위 들어가서 활동을 해라. 그래야 다음에 배·보상이나 추모공원, 추모비 할 때 어느 정도 같이 활동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는 식당에 만나고 그랬는데, 미술관에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서 변호사님 모시고 우리 가족끼리 모였지. 배·보상 문제로 물어보고 그럴 때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연합 가족 다 모였을 때인데 이 자리에서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 얼떨결에 선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대책위 가서 신고를 했지, 어제 대표로 선출됐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작년 11월 10일경부터 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 대표들은 그래요, 말 그대로 봉사직이야, 무보수. 우리끼리 내부방침 정해서 아침 10시경 출근해서, 요즘은 같이 움직여요. 오늘 어디가자고 하면 거기 가고, 광화문, 진도 팽목항, 광주 재판하는데, 청운동 이런데 매일 못 다니고 어디 가서 북콘서트, 간담회 이런데 가자고 하면 나눠서 가요. 진상조사 위원회 사무실이 서울지방조달청에 있어요. 광화문에서 가깝더라고. 거기도 몇 번 왔다갔지. 우리 대표들은 아예 회사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실업자야. 진즉에 회사 포기하고, 일부 부모님들은 대표들이 특혜 주는 줄 알고, 무슨 월급을 받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안 받는데. 그래서 학생 반 대표들 자주 바뀌어. 자기들끼리 막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내요, 대책위에 회비를 내고 있어요. 사단법인이 되면 회비를 내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나 있어.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대학원생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근무하면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활동하려면 활동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외적으로. 그래서 6만원씩 내고 있거든. 우리 대표들은 3만원 더 내서 9만원 내. 일반 부모님들은 6만원씩 내고 우리 대표들은 3만원 더 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부모들은 대표들이 무슨 큰 특혜가 있는가 싶어서 자기들끼리 막… 반 대표는 자주 바뀌어. 한 달에 하나씩.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또 들어오고… 지금도 없는 반 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와서, 대표가 있어야 전달도 하고 그래요, 중간 중간에 일어나는 일, 독려도 하고 그러는데. 반 대표가 없으면 전달을 못하잖아요. 학생 부모들은 한 달에 한 번 당직을 분향소 대기실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거기서 어떤 안 같은 게 나오면 자료 받아서 대책위 가서 전달해주고, 변호사님이 당직 때 와서 법적인거 설명 다 해주고. 그런데 반 대표들은 다 회사 그만두고 와서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는 일단 무보수 명예직… 명예? 크게 명예는 모르… 서로 헐뜯고 그러니까 안 좋더라고. 우리 선생 가족들은 나한테 완전 다 맡겨놨어. 전혀 문제 없어, 모임 할 때만 한 번씩 나오고, 내가 뭐든지 카톡 해서 한다하고 하면 공지하면 내 맘대로 다 하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지. 데모하는데 광화문도 혼자가고, 진도도 혼자가고, 재판도 혼자가고, 광주도 재판하느라 몇 번 왔다갔다, 혼자 다니니까나는 나는 상징적으로만 대표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다른 가족들은 아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학생 부모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예 안 나오니까 나한테 다 일임해가지고 가끔 우리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면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아 자리에서 설명 많이 해요, 두 시간씩 설명도 하고 나한테 일임을 했어. 앞으로 계획은 그래요, 일상으로 돌아 갈 데도 없고, 내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당분간은 진상조사 이것도 1년 반 해야 되거든요. (김0욱, 희생교사 부모)

3) 그 당시에 수색이 가족들이 종료하고 싶어서 종료한 게 아니고 강제 종료나 마찬가지로 수색을 종료하겠다는데 우리가 끝까지 종료 인정을 안 해주면 계속 수색을 하다가 잠수사나 이제 또 사고를 당하면 가족들이 나쁜 사람이 또 되잖아요. 죽은 사람을 꺼내려다가 산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 들을까봐서 사실, 그래서 종료를 인정해주고 한 거지,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 거에요. 〔중략〕 그 당시에 우리야 정신이 없었지만 변호사라면 전개과정이나 법률관계를 뚫어보는 분 아니에요, 모든 걸 잘 아시는 분이 참 아쉽게도 왜 인양이라는 문구를 몇 글자만 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그냥 쫓기듯이 정부에서 이제 얘기한대로 쫓아가기 급급하고 말은 거죠. 〔중략〕 그 당시에는 수색을 중단하면 이주영 장관이나 해경 측이나 해수부 측에서도 이게 중단을 해도 이게 수색은 중단되는 거지 인양도 하고, 다… 인양도 수색의 한 방편이니까 기다려봐라. 〔중략〕 어떤 면에서 봐서는 인양이 똑같은 얘기였었는데 이렇게 벌써 수색 중단되고도 4~5개월 지나게 된 거죠. 〔중략〕 일을 더 서둘렀다고 봐야죠. 〔서두른 느낌이?〕 조금 있었죠. 〔인양이〕 물론 바로야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수색하면서 이미 배의 상태나 인양할 수 있는 저기 조건을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략〕 우리는 늦어봤자 금년 1월쯤 해서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이제. 근데 지금 4월인데도 아직 얘기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권0일, 미수습 희생자 가족)

4) 저는 일부러 SNS를 안 봐요. 정신건강상 내 기분만 나쁘고, 그래서 일부러 안보고. 저희가 시행령 터지고 나서, 청운동 쪽에 농성을 하겠다는 의지로 갔었잖아요. 그전과 다르게 과잉진압을 시작했었어요. 범죄자 취급하고. 전에는 유가족들은 만나게 해줬었는데 이제 통행도 막고. 심하게 하는데, 원래 모이던 형제자매 주축이 돼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행령 폐기 성명서를 준비했는데, 그때부터 배·보상 문제가 터지고 이문제도 터지고 뒤통수를 너무 많이 때리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준비를 악에 받쳐서 했어요. 그러면서 배·보상 기준이 터지고 나니까 저희가 노숙 농성하는 게 돈으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유가족으로 호도되는 거죠. 언론에서. 그래서 너무 억울한데, 엄마아빠들은. 저희 엄마도 삭발하고 00언니 아버지도 삭발하셨거든요. 그런 걸. 저희는 지켜봐야했으니까. 생중계로도 보고, 도보행진 하는 날. 직접 엄마가 삭발하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봐야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목숨 을 건다는 의미잖아요. 저희는 되게 참혹하고 불안했어요. 동생까지 잃었는데 엄마아빠까지 잃게 될 거 같고. 왜 우리가 내 동생 죽여놓고 내 동생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데, 그때 구조도 안 해 놓고 왜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데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이게 목숨을 걸만한 일인지, 뭐 하나라도 알려면 목숨 걸고 뭐 하나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외치고. 사람들은 호도되고. 아…(탄식) 참담했고, 너무 어이없고, 가장 중요한건 그 배·보상안에 국가의 책임이 없잖아요. 구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음… 완전 중요하다면 그게 중요한데, 이 시기에 터트리는 것도 웃기지만,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는…. (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5) 그냥 인권침해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생각이 나서, 집회현장에서 굉장히 많았으니까. 집회 중에서 겪

은 것 중에… 어… 차벽도 그렇고, 물대포, 최루탄 가스 때문에 목도 이렇게 됐고. 캡사이신 뿌리는 거 자체가, 우리가 폭력적인 시위도 아니었고, 항상 뭐 청와대로 행진한다고 해도 행진하는 것뿐인데, 무장한 것도 아닌데, 시위대 막는 것은 평화적 행진과 미신고 집회더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합법이고, 의사를 표현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같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 침해되는 거라 느꼈고. 시위자 백여 명을 연행했는데 40여명이 핸드폰을 압수당했대요. 그런 거 봤을 때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시위집회에 관련된 집회에 관련된 정보만 보는 것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당사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영장 발부 전에 압수수사 영장 발부 전에 빼앗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런 걸 봤을 때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고 막무가내였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한 거? 저희가 나가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해산시키려고 하니까. 부모님도 잡아서 경찰들 있는데 조그만 통에 해가지고 소변 보셨던 거 너무 화가 났고, 음료수 병도 가방 뒤져서 이런 거 있으면 던질 수 있고 폭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이 안 된대요. 그렇다 쳐요. 돗자리나 담요는 왜 반입이 안 되는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막는 건지 모르겠어요. 돗자리도 훔쳐간 적 있거든요. 인권침해를 떠나서 도대체 경찰이 돗자리 훔쳐 가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이없는 일이 많았어요. 음… 과잉진압으로 일반인 통행방해 하는 거. 시위행위 많아서 집회를 방해하더라도 통행을 하게 해줬잖아요. 전보다 너무 심해지는 거 같아요. 일반인들 통행을 방해하는 거. 퇴근길이 30분인데 세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올리는 분도 많고. 4.16만해도 일주긴데, 헌화만 하려고 평화적으로 행렬을 가고 있는데 미리 차벽설치하고 캡사이신 뿌리고. 너무 어이없고.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6) 17일 날 내려갔는데 팽목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계시는 줄 알고. 근데 진도 체육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촌오빠가 차로 데려다 줬는데 너무 먼 거예요. 진도체육관이. 가면서 깨달은 건데, 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호수랑 산이랑, 사람들이 슈퍼를 가려면 걸어서 한 삼십 분을 나가야 하나? 그 정도로 동떨어진 곳에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왜 이런 곳에 있지? 첨에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아무리 구조 안하고 있다고 외쳐도 아무도 못 들어요. 거기에 있는 언론인 가족, 정부만 듣고 그냥 거기에 갇힌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갇힌 거였구나,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그 한 번 진도 대교까지 행진했을 때 제대로 깨달았는데, 그때 저도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된 이유가 뉴스나 언론의 내용은 그냥 울분과 슬픔을 참지 못한 유가족들이 대교를 건너려고 한다, 청와대로 가려고 한다 슬픔으로 정신 나간 가족들처럼 써놨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체육관에 칸막이도 없는데 다 널브러져, 뒤섞여 누워있었어요.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손에 핸드폰을 쥐고 앞으로 막 뛰어가시는 거예요. 마이크를 딱 잡으시고는 이사람 이상하다고 이사람 이상하다고 소란이 일어나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지금 가족들 상황을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사람 이상하다고 어디에 보고하냐고 이야기 하니까 핸드폰 주인이 따라오다가 아버님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잡힌 거예요. 그걸 떠나서 뭘 보고했냐? 기자냐? 하고 물으니까 첨엔 아무 말 안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아버님이 재발신 눌러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였어요. 사복 경찰이었어요. 그때 이제 낌새는 있었지만 사복경찰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그때 딱 현장발각이 된 거죠. 부모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범죄자냐고. 우리가 범죄자냐고. 왜 우리를 감시하고 일일이 보고하냐고. 이렇게 구조도 안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이러니까 우리 더 이상 참지 말고 너희들 뭐 할 때 위에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데, 젤 위가 누구냐고 여기서 젤 위가 누구냐고 하니까 청와대 저쪽 그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위에 지시가 있어야 하니까 암말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니들을 지시하는 청와대 그쪽으로 우리가 직접 가겠다고 그때 진도대교를 걷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왔잖아요. 격분한 흥분한 유가족이 진도대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무서운데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언론이 본 사람이 몇 사람이고 카메라가 몇 개가 찍고 사람이 몇 명이었는데, 그게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묻히고 격분한 유가족이 흥분해서 그랬다고 끝났어요. 언론, 경찰도 그렇고 그냥 저희를 인권이 아니라 범죄자 취급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그때 이미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우리를 기삿감으로 보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는 까먹

고 있었던 거 같아요. 사복경찰은 주위에 계속 있었고. 진도체육관에서 그런 적도 있어요. 나갈려고 하니까 의경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호숫가 근처 쪽으로 산책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체육관이 엄청 답답했어요. 히터를 엄청 틀고 공기가 안 좋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산책할만한 곳이 어딨어. 산 아니면 호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방향이 호수 쪽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저를 갑자기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지마라. 근데 호수 쪽이 민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니까 호수근처로 안가면 바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막혀서 위험하니까 가지마세요 하니까. 그 의경은 제가 호수에 뛰어들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지금생 각해보면 제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통행 권리를 침해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땐 심신도 정신도 없는 상태니까. 그냥 알겠다하고 바로 주차장으로, 공기만 마시고 기분전환만 하려고 주차장으로 갔는데, 주차장은 기자들 담배피고 있어서, 사실 공기도 제대로 못 쐬었어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갇혀있었던 느낌이었어요. 어딜 나가려고 해도 차가 없으면 경찰, 소방관에게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해야 나갈 수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되게 차 없으면 교도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기 나가려면 경찰이나 소방관한테 요청, 허락받고 나가야 했구나. 지금 돌아보면. (흐느낌) (최0아, 희생학생 형제자매)

7) “너무 화가 나는 게 사람들에게 제발 진실 좀, 제대로 된 진실 좀. 그 진실을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국가가 말하는 것만 그렇게 듣고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참 그냥 시행령이 뭔지, 특별법이 뭐였는지, 배보상 기준이 뭔지 몰라요. 그냥.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시행령 되게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했는데, 〔친구 말이〕 시행한다는 거 아냐? 특별법 시행 한다는 거 아냐? 이렇게 알고 배보상 논의되고 있으니까 잘 됐네, 이렇게 보거나, 인양도 하겠다는 쪽으로 가니까 인양도 조만간 하겠네, 이렇게만 봐요. 진짜. 언론에서 하는 말이 애들이 구조할 때 제대로 진실을 전하지 않은 언론을 똑같이 믿고 있고, 아…너무 답답해요.”(박0나, 희생학생 형제자매)

8) 우리 반이 26명이 희생됐는데 나는 22군데 장례식을 돌았어요 우리 반 학생들 빈소를. 부모들 잡고… 그 때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 처음 보니까. 처음에 인사하고 누구냐 그러셔서 내가 OO선생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나는 빈소 갈 때 나는 사과하러 갔지. 미안합니다 당신 딸을 제대로 우리 딸이 인솔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러 가면 멱살 잡고 그럴 줄 알았어요. 욕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만 마주보고 인사를 했더니만 그렇게 끌어안고 울더라고. 30분을 끌어안고 울었을 거야. 가는데 마다 무릎 꿇고 비니까 나보고 아버님이 왜 무릎 꿇고 비냐. 정부 놈들을… 그래서 같이 일으켜 세워서 30~40분을 엄청 울었어요 다니면서.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랬어요 이승에선 못했지만 저승엔 같이 모이자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납골당도 한 곳에 모았다. (김0욱, 희생교사 부모)

9)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공무원인가요?〕 그 시체를 보관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월 14일 제가 다시 팽목항에 갔어요. 저희가 갔더니 한 번 더 요청을 했어요, 장례를. 그쪽에서 남편 쪽의 허락을 해 줘야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것 같이 이야기 하는 건데, 형부의 형을 만났어요. 형부의 형을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니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딸이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놔둘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만약 제수씨를 먼저 태우면, 장례식을 치르면, 동생과 조카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족은 같이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했고, 그러더니 16일 날에 아예 그냥 화장을 한 거예요. 장례식이 아니라, 그냥 닭처럼, 장례식이 아니라 화장을 시킨 거예요. 〔화장에 대해서 아예 모르셨고.〕 〔아마 직전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을 거예요.〕 통역 통해서 형부의 형 두 명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장례식은 치르지 말고 일단은 화장을 하자, 화장하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조카를 찾으면 같이 식 올리자 ,그런 식으로. 〔그럼 동의를 하신 거에요?〕 그때는 시체가 너무 많이 변해서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워서 그 재를 보는 게 낫지 그냥 변형 된 시체를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동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쪽은 화장만 동의를 한 거예요. 장례식이 아

니라. 〔그럼 아직까지 장례식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 하는 거고, 화장만 하면 동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해서 16일 날 화장식을 한 겁니다. (판000인, 이주민 희생자 가족)

별첨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기록하다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별첨2> 4.18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감시보고서[1)]

2015.04.20.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1. 개요

4월 18일 4시 30분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며 시청에서 집회를 끝내고 광화문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4월 16일처럼 이들을 막아선 것은 광화문부터 종로3가에 이르는 거대한 차벽이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경찰차벽을 우회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과 질서유지선을 건너 광화문 누각 가까이 갔으나 다시 차벽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넣은 물포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유가족과 시민 등 100명을 연행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밤 10시 20분쯤 누각에 있던 유가족들이 북측 광장에 있는 시위대에 합류해 정리 집회를 하고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경찰은 차벽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대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세종로 네거리 등에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경찰 병력도 172개 부대, 1만3700여명을 배치했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4월 1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장비를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며 "불법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4월 18일 집회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지으면서 집회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하나 원인제공은 경찰에게 있다.
4월 16일에 이어 4월 18일에도 등장한 차벽은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가두어버렸다. 서울의 주요 도심은 마치 '계엄' 상태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다. 1주기 추모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광화문 분향소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해 분향과 추모를 하기 위해 참여했던 시민들이 분노했다. 게다가 광화문 누각에 고립된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폭행과 용변을 해결하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막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난무하고, 4월 18일 집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유가족을 연행을 함으로서 집회 참가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4월 18일 집회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은 4월 11일, 16일을 경과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의 맥락에 있다.

2. 경찰 집회관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① 유가족을 포함하여 시민들 100명 연행과 부상

4월 18일 오후 3시경 경찰은 광화문 누각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며 모여있던 유가족을 연행하였다. 연행 당시 유가족들은 광화문 누각 주변으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또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가족 연행을 규탄하던 시민들을 경찰은 연행하였다. 4월 18일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서만 79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 등은 모두 100명이다. 이중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유가족은 20명이고, 청소년 5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은 금천, 성동, 마포 등 일선 경찰서 11곳으로 분산 호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미성년자도 무작위로 연행하였으며, 일부는 훈방되었으나 여전히 구금상태에 있는 이

1) 4.20 기자회견을 위해 정리한 1차 버전임을 밝힙니다. 시민들의 제보와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들도 있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웃옷을 옆구리까지 들어 올리는 성추행도 있었다. 집회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여성을 무리하게 잡아당기며 연행하기도 했다. 여경이 아닌 남자 경찰이 여성을 연행하면서 바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여성집회 참가자가 연행될 경우 남성경찰이 아닌 여성경찰이 연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연행된 유가족도 연행 과정에서 안경이 깨지고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유민아빠 김영오 씨는 버스 지붕에서 안전매트 위로 떨어지자마자 경찰에게 목이 졸리고 사지가 들려 연행되었다. 성호아빠 최경덕 씨는 손이 다친 채 연행되었으나 경찰은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연행 과정에서 사지가 들리거나 강제로 끌려가면서 손목 등에 타박상과 상처가 난 연행자들도 다수였다. 사지가 들린 채 머리를 두 차례 밟힌 학생도 있었다. 최루액을 맞은 연행자가 많아 피부가 따갑고 간지러웠으나 접견 전까지 씻어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한 시민은 연행된 후 경찰에게 핸드폰을 빼앗겼다가 5시간 30분 후 돌려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연행된 시민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뺏어간 사례도 있다. 핸드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이 압수할 수 없다.
4월 18일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광화문 북측 광장에 모여있는 유가족과 시민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집시법 20조1항, 2항에 따른 해산명령불응죄,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도 알다시피 해산명령불응죄로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죄까지 들먹이고 있으나 차벽으로 경찰이 교통소통을 불통케 한 장본인은 경찰임을 밝혀둔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하기도 했는데 미란다원칙을 다중에게 방송으로 고지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4월 18일 경찰에게 연행된 사람들의 경우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연행이다. 시민 대부분이 광화문 광장 차벽으로 둘러싼 좁은 공간에서 대거 연행되었는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는커녕 공간이 매우 좁아 경찰의 살수와 캡사이신도 피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조건이었다. 이 곳에는 여성과 노인들이 상당 수 였고, 오로지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현판 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앞쪽으로 전진한 시민들이었다. 오히려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포를 피하기 위해 우산을 펴들고 있는 사람을 뒷덜미를 잡아 연행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성직자도 연행했다. 차벽 안쪽으로 밀려들어온 여성들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저항할 새도 없이 무작위로 연행되었다.
경찰 폭력에 의한 부상자 숫자도 확인된 것만 100여명이 넘었다. 무릎분쇄골절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부터, 염좌 및 좌상 환자도 다수 생겼다. 허벅지가 밟혀서 심한 대퇴관절염좌 부상도 있었다. 열상 환자도 많이 생겼다. 적어도 5명 이상이 시민단체가 파견한 응급의료팀에게 치료 받았다. 한 여성은 코가 찢어졌고, 시민단체 회원 1명은 다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찰과상과 타박상 등 경찰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고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시민들은 너무 많아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특히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섞은 물대포 살포로 인한 각결막염, 피부손상은 다수였다. 차벽에 둘러쌓여 피할 곳이 없던 200여명은 모두 여기에 노출됐다. 캡사이신 등은 어린이와 노인들에게는 몹시 위험할 수 있다. 부상 및 피해상황은 계속 취합 중이다.

② 시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통행제한과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막는 차벽설치

4월 16일에 이어 4월 18일에도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추모행렬을 막아섰다. 광화문, 청계, 종로, 안국, 경북궁에 이르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마치 '계엄'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

청와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와 인도는 경찰에 의해 점령되었다. 광화문, 종로, 안국, 경북궁으로 난 도로에 차는 다닐 수 없었고, 인도마저도 경찰이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였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들, 경북궁역·안국역 일대 거주민들은 사실상 경찰에 의해 봉쇄된 도로와 인도로 갈 수 없었다. 종각역과 안국역의 경우 출입구까지 봉쇄되어 지하철 이용승객마저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지하철 출입구를 봉쇄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 경찰은 광화문으로 갈 수 있는 종각역 2, 4번 출구도 막아서 시민들이 위험한 계단에 갇혀서 거의 30분 이상 감금되었다.

또한 집회를 마치고 평화롭게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서도 경찰은 차벽으로 응수했다. 4월 16일, 18일 경찰은 버스와 경력을 청계광장에서 광교 넘어서까지 청계천 북쪽 길가에 길게 늘여 세워놓고 거대한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광화문 광장사거리와 종로일대, 안국동에서 광화문, 경북궁 역까지 거대한 차벽을 겹겹이 세워놓았다. 이로 인해 평화로운 집회 행진은 차벽으로 막혔고 원활한 행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4월 16일, 4월 18일 경찰의 차벽설치는 '위헌'이며 '불법'이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이다. 차벽은 모든 통행을 금지하는 전면적 통제행위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봉쇄조치이다.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만이 취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2009헌마406[2]), 차벽설치와 같은 원천봉쇄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평화로운 행진을 막아선 경찰의 차벽설치가 과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이었는지 의심스럽다. 4월 16일, 18일 설치된 차벽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대응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국책연구소 한국형사정책연구소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는 폭력행동이 경찰 차벽에 의한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는 집회가 폭력으로 변화하는 이유로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차벽, 불심검문, 이동차단, 채증, 물포/최루액을 앞세운 경찰장비 등)을 손꼽았다. 집회참여자들이 집회할 장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며, 준무기에 해당하는 경찰장비들을 무방비 시민들에게 쏟아낼 때, 결국 저항의 힘이 경찰을 향해 분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같은 경찰력 발동의 근거로 경찰관직무집행법(아래 '경직법') 6조를 주로 거론한다. 그런데 경직법 6조 1항에 근거하여 경찰의 집회봉쇄조치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직법 1조 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찰권 행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차벽설치와 이동차단 등의 조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다.

---

2) 서울광장 차벽설치에 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차벽은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차벽과 같이 집회를 사전에 봉쇄하는 경찰조치는 집회의 해산사유보다도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차벽 등 경찰의 집회봉쇄조치는 명백히 헌법과 경직법 6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③ 최루액이 섞인 물포 발사와 캡사이신 사용 등 위법한 경찰장비 사용

경찰의 차벽과 병력배치는 오히려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집회와 추모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들까지 모두 통행이 통제되었으며 우회로조차 알려주지 않아 항의가 이어졌다. 모든 길을 막아놓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역시 차벽에 가로막힌 시민들이 차벽의 틈을 벌리려고 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물포를 사용했다. 특히 물포를 곡사살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직사로 분사하여 높은 수압에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직사살수의 경우 가슴이하로 해야 한다는 물포운용지침 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날 4시간 가량 캡사이신과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맞은 시민들은 눈과 얼굴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특히 캡사이신 분사기를 시민들을 얼굴을 조준해서 분사하여 수분간 눈을 뜰 수 없고 눈과 얼굴의 따가운 통증이 지속되었다. 캡사이신과 최루액 물포를 연달아 사용해 시민들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방패를 밀며 사람들을 밀어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물포의 과다사용으로 준비된 분량을 다 사용하게 되자 경찰은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을 채우기도 했다. 오후 10시경 경찰이 물포에 물을 보충하기 위해 무단으로 소화전을 사용하려 하자 이에 대해 종로소방서에 경찰의 소화전 사용허가에 대해 확인한 이상호 기자는 종로소방서가 사용허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상호 기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또한 경찰은 물포를 광화문현판 방향으로도 쏘았다. 문화제 훼손에 따른 책임 역시 경찰의 몫임을 밝힌다.

④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폭력 조장 행위

경찰은 평화로운 집화와 행진을 방해하였고 강제해산하려 했다. 게다가 집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유가족을 만나러 평화롭게 광화문 누각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범죄자 취급하였다. 게다가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해산명령 방송을 남발하는가하면 미란다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했으니 해산명령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유가족과 시민들을 겁박하였다. 경찰들을 향해 물포 각도를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발사하라, 시민들을 채증하고 체포하라는 등 마이크로 반말 고성을 지르며 작전 명령을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는 “자신감을 갖고 하라” 등 강경하게 진압할 것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는 경찰이 방송을 하는데 욕을 한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다.

당시 어두운 밤이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들과 시위대가 근접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 대치 상황에서 집회참여자들과 경찰이 흥분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것이 경찰 상급자의 역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혼자 흥분한 상태로 집회참여자들과 경찰이 서로 적대하도록 자극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이 부상을 겪었다. 경찰지휘관의 폭력 조장과 이로 인해 발생한 시민, 경찰의 부상에 대해서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의 태도와 행위는 위계조직인 경찰조직이라고 해도 지휘관으로서 동료 경찰관을 존중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⑤ 경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표 미착용

2010년 한국을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인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명찰, 군복 등 기타 신분확인이 부착되지 않아 과잉무력 사용 혐의에 관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이후 한국 경찰은 모든 경찰복에 명찰을 달도록 하겠다고 유엔에 보고했으나 이는 거짓이다. 4.11, 4.16. 4.18 세월호 집회관리를 한 경찰들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깃발은 있었으나 그것이 곧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의 신원을 알 수 있지는 않다. 418 세월로 집회에서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은 경찰폭력에 관한 불처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착용은 물론이거니와 경찰폭력에 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결론

유가족과 시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행과 부상, 차벽설치, 이동통제, 자의적인 경찰장비 사용 등 경찰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알고 싶어 모이고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해산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폭력을 조장하였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이 경찰에게 있음을 밝힌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 경찰의 과잉적인 무력 사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집행기관들에게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과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사용기본원칙'을 준수하라고 재차 강조한 것을 다시한번 환기시키고자 한다.

<별첨3> 5월 1일과 2일 세월호 집회 인권침해감시보고서

2014.05.11. 세월호 인권침해감시단

<목차>

1. 개요

2. 5월 1일과 2일 집회 경과와 경찰의 대응 개괄

3. 경찰 집회관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1)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의 문제
2) 언론보도 카메라 겨냥한 물대포 직사 (취재 방해 및 언론의 자유 침해)
3) 유가족과 연행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처우와 연행
4) 집회 보호를 내팽개친 경찰의 직무유기
5) 통행 제한 및 차벽
6) 불법 채증 및 사복경찰관에 의한 채증
7) 경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표 미착용

4. 결론

1. 개요

5월 1일~2일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었다. 4월 18일 집회에서 경찰의 과도한 차벽 설치와 폭력 연행에 관해 여론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찰도 차벽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당일 경찰은 4월 18일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경찰력을 사용하였다. 특히 5월 1일~2일 경찰은 차벽을 세웠을 뿐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과 기자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유가족 및 언론, 시민들은 신체의 손상을 경험하였고 언론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제한되었다.

2. 5월 1일과 2일 집회경과와 경찰의 대응 개괄

5월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오후 4시경 행진을 하였다. 행진은 을지로 방향, 안국역 방향, 광화문 방향 등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은 차벽을 세우지 않겠다고 했으나, 특히 청와대 근처로 가는 곳(광화문, 경복궁, 안국동)에는 차벽이 모두 있었다. 오후 5시 40분 경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인사동이 있는 안국역 사거리에 모였다. 경찰은 3호선 안국역 전 출구를 가로막았으며

차벽도 세웠다. 저녁 7시 30분 경 경찰은 차벽을 세워 안국빌딩과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다. 반면 경찰은 종로에서 오가는 차도에는 차벽을 세웠으나 인도는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로3가와 안국 현대건설 빌딩 앞에서 막혔던 시민들이 안국로터리로 모이기 시작했다. 곳곳에 경찰들이 차량 통행을 막았고 인도로 가는 시민들을 허가해주듯이 보내주었다.

경찰은 안국빌딩 앞에서 행진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캡사이신을 쏘았고 불법 채증과 연행을 하기도 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또한 사복 경찰들이 집회 안에서 채증을 하다가 시민들에게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다. 밤 10시 30분 집회참여자들이 행진을 계속 시도하자 경찰은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사용하였다. 밤 11시경 가족들이 더 이상 시민들이 다치거나 연행되면 안 된다고 경찰 바로 앞에 팔을 잡고 줄을 섰다. 그러나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았다. 또한 차벽으로 세워진 경찰 차 위에는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기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바닥에는 흰 거품이 일정도로 물대포에 함유된 최루액의 농도는 매우 진해서 물대포를 직접 맞은 사람은 피부에 수포가 생기거나 빨갛게 달아올랐다. 대오 뒤에 있던 물대포에 직접 맞지 않은 사람들도 기침, 구토, 호흡곤란을 경험할 정도였다. 수압이 높아 물대포를 맞아 넘어져 다친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경찰은 유가족이나 기자들을 직접 조준하였다. 이로 인해 최루액을 맞고 실신한 시민이 응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물대포가 잦아든 후 시민들은 자유발언과 공연 등으로 문화행사를 이어갔다.

5월 2일 새벽 2시반 경 물대포와 경찰의 물리력으로 도로에서 완전히 밀려난 시민들은 인사동 사거리 북광장에 있었다. 경찰이 집회참가자들과 유가족들을 강제로 미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경찰에 깔리기도 했다. 또한 이때 방송 차량 안에 유가족이 있었는데 경찰이 폭력적으로 달려들어 강제로 차량을 훼손하고 방송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방송장비가 고장 났다.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인도 위로 밀었으나 여전히 방송차량 앞과 인사동 북광장 횡단보도에도 유가족이 있었다. 횡단보도와 인도 가운데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일렬로 서서 시민들이 유가족에게 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유가족들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고립되어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새벽 3시경 안국역 북광장에 있던 시위대를 동의 없이 촬영하던 일베회원과 시민이 싸움이 났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했다. 4시경 안국동 로터리에 있는 차벽은 철수 했다.

5월 2일 새벽 4시30분경부터 횡단보도에 있는 유가족들 앞으로 경찰이 차량통행을 시키면서 위험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다. 게다가 몇 분후에는 교통경찰을 거의 철수시켜 택시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유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이 종로서 경찰들과 교통경찰들에게 '유가족들이 위험하니 안전하게 교통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수방관했다. 차량운전자와 유가족이 직접 부딪치도록 했다. 일부러 경찰은 차량운전자에게 유가족이 비난을 받도록 유도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6시반경 도로에서 무시당하느니 직접 청와대에 가서 말을 듣자며 다시 행진했다. 그때 경찰병력이 다시 투입돼 도로를 막고 인도를 막아섰다. 경찰이 도로 1차선과 인도에 있던 유가족들의 행진을 막아서자 5월 2일 오전 7시반경 유가족 20여명은 목에 줄을 감고 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몸싸움으로 목에 줄이 조여와 유가족이 숨을 쉴 수 없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경찰은 꼼짝하지 않았다. 이에 다른 유가족들이 줄을 풀 것을 설득해 유가족 20여명은 목에 감긴 줄을 스스로 풀었다.

그렇게 행진에 가로막혀 있다가 오후 1시경 경찰 지휘관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유가족들을 조금씩 밀면서 앞에 앉아있던 여성 유가족들이 다치기도 했다. 오후 1시 40분경 도로에서 물러나라고 해산명령을 하자 가족들은 인도로 걸어가려 했으나 그조차도 막아 유가족들이 심하게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경찰들은 유가족들 눈에 직접 캡사이신을 난사하고 유가족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오후 2시경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고 안국역 행진을 중단하였다. 5월1일~2일 집회에서 경찰의 무작위 연행은 계속 이어져 총 78명이 연행됐다.

3. 경찰 집회관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①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물대포와 캡사이신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사용

○ 상황

5월 1일 밤 10시 30분경부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다량 발사하였고 캡사이신을 직접 얼굴에 뿌렸다. 물대포에는 최루액이 짙은 농도로 섞여 있어서 직접 물대포를 맞지 않아도 반경 50미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침과 호흡곤란 구토, 현기증을 심하게 경험하였다. 직접 물대포를 맞은 사람들은 피부에 빨갛게 수포가 생길 정도였다. 또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진 시민과 유가족이 많이 있었다. 5월 3일 연정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은 "경찰 내부지침과 규정에 따라 파바를 물에 0.03% 희석해 사용했다.[3)]" 고 밝혔다.

○ 문제점

– 파바(PAVA)는 캡사이신과 유사한 합성물질인 ‘노니브아미드’(10.7%), 휘발성 유기용매인 ‘이소프로필알코올’(68%), 용매제 역할을 하는 ‘지방산’(21.3%)으로 구성됐다. 파바의 구성성분 중 노니브아미드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물질안전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공하는 노니브아미드 위험하다고 되어 있다. 2010년 10월 27일자 노니브아미드 MSDS에는 ‘피부접촉, 눈의 접촉, 섭취시 매우 해로움’(Very hazardous in case of skin contact, of eye contact, of ingestion)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에 이를 수 있음’(Severe over-exposure can result in death) 등을 경고했다.

게다가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물대포에 섞어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혀 없다.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불법행위자 제압에 필요한 적정 농도로 혼합”해 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경찰력 사용의 자의성이 높다.

– 특히 물대포를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해 사용한 것은 유족들에게 물리적 상해를 입혀 공포감을 주려는 것이어서 더 문제적이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해산이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주어 상해를 입힐 필요가 없다. 5월 1일~2일 경찰의 물리력 사용은 신체적 상해와 공포감을 주어 항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공격적 대응이었다.

---

3)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587.html

– 경찰 장비 규정에 따르면 물대포를 직사하는 경우 가슴이하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② 언론보도 카메라 겨냥한 물대포 직사 (취재 방해 및 언론의 자유 침해)

○ 상황

5월 1일을 비롯해 참사 1주기에 즈음한 집회에서 경찰은 카메라 기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집중해서 발사하였다. 그동안 기자의 통행차단, 시야방해 등의 취재방해를 비롯해 연행 등은 여러 번 지적되었으나,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진 경찰의 취재방해 행위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부상을 고려하지 않은 직접적인 폭력이었다.

밤 10시 40분경 물대포를 집회참가자들에게 발사하던 경찰이 초반에 조준한 건 취재보도를 위한 카메라였다. 차벽에 올라 기록하고 있던 카메라 기자, 사진가들은 피할 틈도,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사당하면서 버스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후, 이들은 카메라 등의 장비가 젖고 짙은 최루액으로 호흡 곤란과 피부의 따가움이 발생해 취재와 기록을 이어가기 힘들었다.

– 지난 18일 집회에서는 경찰진입 장면을 촬영하려던 김용욱 참세상 기자가 3m 떨어진 발사대에서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홍채근육이 파열되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물대포를 맞고 바닥을 구르며 부상당한 또 다른 기자에 따르면, 경찰은 몇시 방향이라 지정하여 카메라를 향한 발사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진단서, 파손장비 등의 사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09)

○ 문제점

– 헌법 21조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취재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경찰이 물대포를 쏘거나 캡사이신을 쏘기 전에 기자들에게 위험하니 나가달라는 경고방송은 사실상 협박이다. 그러한 경고방송 이후에 경찰은 기자들에게 직접 물대포를 쏴 기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촬영장비를 망가지게 했다. 이는 경찰의 폭력성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이후 언론 활동도 위축시킨다.

– 경찰의 취재방해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언론이 열린 공간에서 열린 방식으로 보도 내용을 만들어 갈 때 공정한 공적 여론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에 의해 특정 보도가 차단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나 권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드러낼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언론의 편집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낳는다.

③ 유가족과 연행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처우와 연행

○ 상황

경찰은 집회에 참여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맞아도 싸다’고 하거나 횡단보도 통행제한에 대해 항의하는 여성에게 ‘아줌마 50번이 아니라 100
번이라도 못 지나가요, 집에나 가요’ 라며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

경찰의 물리적 폭력은 시위대를 도로에서 미는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앞에 섰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경찰들의 발에 깔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보고도 경찰은 계속 무리하게 밀었다. 또한 경찰의 통행제한에 항의하던 시민에게 경찰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에게도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는 계속되었다. 여성참가자의 머리를 남성경찰이 잡아채며 엎어진 채로 질질 끌어 연행했다. 여러 연행자들이 연행되면서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호송차로 끌려가면서 경찰들이 발로 가격하였다. 또한 진술거부 의사를 밝힌 여성연행자에게 "정신 나간 × ", "유치장에 들어가야지 정신을 차리지" 등의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그 외에도 근처에 지나가던 청소년이 캡사이신을 맞은 시위대에게 물을 나눠주다 연행된 경우도 있었다.

○ 문제점
- 5월 1~2일 경찰은 78명의 시민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안국동, 인사동 쪽에 모여 있는 유가족과 시민들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집시법 20조1항, 2항에 따른 해산명령불응죄,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해산명령불응죄로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죄까지 들먹이고 있으나 차벽으로 경찰이 이미 교통소통을 통제했다. 또한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방송으로 고지하기도 했는데 미란다원칙을 다중에게 방송으로 고지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연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역할을 임의로 대행하는 것일 뿐이다.

- 경찰은 시민들과 유족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훼손하였다. 해당 집회·시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공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④ 집회 보호를 내팽개친 경찰의 직무유기
○ 상황
5월 2일 새벽 경찰이 집회 대오를 인도로 밀어낸 이후 새벽 3시 이후 유가족들만 차도의 횡단보도에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차도로 차가 오고가기 위해 배치된 일부 교통 경찰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집회 대오 일부는 차도에서 안전을 위협받았다. 또한 유가족, 집회참여자들과 다른 운전자 사이에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위험을 방치하였고, 결국 유가족, 집회참여자들은 일부 운전자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에 위협감과 분노를 참지 못한 유가족들은 다시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차도를 넘어 행진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편 5월 2일 새벽 3시 경 집회 대오를 촬영하던 몇몇 청년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저 새끼들 연행해' 등 참가자들과 일부러 충돌을 일으켰다. 이에 인권침해감시단 등이 이들을 제지하고 경찰에게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들은 집회 대오를 인도에 묶어두는 것에만 신경 쓰고 참가자와 이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장비가 파손되기도 하였다. 충돌이 일어난 지 3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인권침해감시단 등에 의해 이들이 경찰 병력 뒤로 물러나며 충돌상황은 종료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2, 3항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피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였다.

○ 문제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2조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그중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2일 간 진행되었던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개개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이처럼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분명히 추궁해야 할 것이다.

⑤ 통행 제한 및 차벽

○ 상황
4월 18일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이후에 차벽이 위헌인데 과도하게 차벽이 설치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경찰에 신고한 집회·행진을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차벽은 여전했다. 물론 18일에 비해 차벽의 규모나 수준이 낮아진 면은 있으나 차벽설치와 통행제한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로에는 차벽을 설치해 차량운행을 막았고 인도에는 경찰이 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하듯이 1명씩 보냈다. 수험생들이나 근처 직장인들도 통행제한을 받았다.

○ 문제점
- 차벽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도 어긋난다. 2013년 마가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작성한 2014년 한국보고서에서 차벽이 집회참여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참여자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도심지역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

- 집회의 자유는 특정한 장소에 접근하고 모이는 것이 성립돼야 하는데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모두 차단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⑥불법채증 및 사복경찰관에 의한 채증

○ 상황
경찰은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과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집회참가자들을 채증하였다. 집회참가자들과 유가족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평화적 상황에서도 경찰은 계속 채증을 하여 집회참가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채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사복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집회참가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5월 1일~2일 집회에서 채증 패찰을 단 경찰 이외에도 사복을 입고 채증을

---

4) 2014. 한국보고서 44. 1.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 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A/HRC/20/27, para. 40).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ibid., para. 41). 집회는 일상에 지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당국은 공공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공공장소에 있어 다양한 사용자들 간 상충하는 요구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

○ 문제점
– 경찰은 이 날 121대의 채증장비[5]를 동원하여 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채증을 했다.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의해 마구잡이로 채증 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현장에서 사복 채증 요원이 비공개적으로 채증할 경우, 정당한 채증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과 집회참가자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채증 대상자가 경찰의 채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므로 채증활동에 대한 적정성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하면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 채증요원의 채증활동”에 대해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복경찰에 의한 채증은 빈번하게 일어났다.

⑦ 경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이름표 미착용

○ 상황
5월 1일 집회에서도 경찰의 소속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표식은 부대 표식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실제 작전 중에는 부대 표식을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해당 경찰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반면 5월 2일 안국 사거리에서 유가족과 대치하던 경찰 중 일부는 이름표가 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진압복 등을 입을 경우 이러한 표식이 사라지기에 실질적인 인식 효과는 적었다.

○ 문제점
– 이처럼 개인 식별 표시의 부재는 경찰들의 과잉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견제 장치의 상실을 의미하고,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찰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그 결과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세월로 집회에서 많은 연행자와 부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은 경찰 폭력에 관한 불처벌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찰폭력에 대한 불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착용은 물론이거니와 경찰폭력에 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 결론

5월 1일~ 2일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광범위하고 심각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행위, 연행, 차벽
설치와 통행 제한, 취재기자들을 겨냥한 취재방해 행위, 자의적인 경찰 장비 사용, 불법 채증과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취재기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물대포 사용으로 부상을 입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물대포에 사용된 파바는 신체적 위협이 상당한데도 물대포에 섞어 직사하였다.

---

5) http://newstapa.org/25145 물대포 33톤…’세월호 고립작전’의 전말

집회·시위의 자유는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시킴으로써 민주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이므로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이며, 경찰은 집회의 보호 또는 진압업무를 맡은 경찰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규정된 절차를 따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내용이나 장소에 관련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아야, 헌법 21조의 2항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부합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청와대로 행진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공공연하게 과잉 폭력진압을 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해야할 정부의 책임을 드러내는 수단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경찰은 헌법과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 권고,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이제라도 수용하여 폭력적인 경찰력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별첨4>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두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사회는 달라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약속을 지킵시다. 참사 이전의 사회와 단절을 선언하고, 참사 이후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1.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현실을 기억합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모두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는 것 외에 우리는 아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따로 또 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분노, 절망으로 우리를 내몰았던 경험들 말입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경험이라고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고 슬프고 화나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존엄을 훼손하고 무시한 결과,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고, 여전히 그 사회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의 보호에 골몰하며, 어떤 이들은 공감과 연대보다 모욕에 익숙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개개의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맞물려 우리를 억압하는 힘을 더욱 발휘하는 구조임을, 우리는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몇몇 문제에 그치지 않는 구조 자체입니다. 혼자서 조심하고 피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낳은 구조가 견고할수록 우리는 더욱 손잡고 연대해야 합니다.

3. 무엇이 안전인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우리가 말합시다.

누구나 존엄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할 안전은 어떤 가치인가요? 누군가 나서서 지켜주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제각각 경쟁하며 구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고 참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취약한 개인이나 집단에 더욱 큰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에 맞서 근원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안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속하려는 공포와 비참으로부터 함께 자유로워지는 것이 안전입니다. 구조적 억압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체에 참여하며 실천하는 연대가 안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려는 안전이 무엇인지 충분히 따져보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툭 하면 말해온 안전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와 평등, 연대를 해쳐왔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잊어왔습니다. 언제나 비슷한 문제들이 드러났지만, 못이긴 척 정부가 나서서 누군가를 엄벌에 처하겠다거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고 잊었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들이 있으면 보상이 부족한가보다 하고 남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실과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는 거래나 선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됩니다.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와 그 가족들, 그들을 돕거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새 우리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곧 우리의 권리임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5. 다른 사회를 열기 위한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슴 한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안함은 무엇에 대한, 무엇을 향한 미안함일까요? 혹시 누군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대신 나눠진 채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권의 시선으로 책임을 밝혀야 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푯대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구조에 개입된 기업, 언론 등의 행위주체들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의 미안함은 우리를 짓누르는 상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질 때, 우리는 참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행동은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6.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은 행동입니다

권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역사가 인권입니다.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이미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기록입니다. 앞서 겪은 사람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을 고집하는 세력에 경고하며 우리의 권리를 현실에 새깁시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 자유로운 표현과 결사, 인간다운 노동과 생활 등 우리 스스로 인권의 목록을 써내려갑시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함께 배우면 되고 부딪치는 의견이 있다면 함께 토론하면 됩니다. 세상을 바꿔온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감각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박한 상식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선언하는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인권입니다.

2016년 4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인권선언을 선포합시다.
그때까지 함께 선언할 사람들을 조직합시다.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는 작은 간담회를 열어 첫발을 떼어주십시오.